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2022-02

기초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ulture

김규원
김소연
변지혜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ulture

김규원·김소연·변지혜



연구책임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소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감소 문제로 진단된 이후 201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며 인구 자연 감소 문제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가능성이 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이 15.5%에 달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화율 20% 이상이 총 105개로 조사되면서 지역소멸은 국가적인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령화 자체에 대한 대응, 이후 고령화 관련 인프라 필요성 제기, 복지·돌봄 관련 정책 개발, 지자체 지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이 제안되고 추진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중심의 정책은 지역 미래를 주도할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을 야기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지역소멸의 주요 요인은 청년층의 감소와 수도권 유입 증가라는 부분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보다 청년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이 중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공동체이자 청년 문화의 거점이기도 했던 대학 자체의 소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활력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의 거점이며,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온 지역대학도 지역소멸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외부 정책에 의한 지역 활력 혹은 청년 유입 이전에, 지역 내부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함께 활력을 찾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은 기획, 창작, 활동, 행정, 유통, 소비, 향유 전반에 걸쳐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폐지는 곧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대학은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차원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은 지역에서 창의성, 정체성, 역량과 협력의 거점,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소중한 실험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지역에서의 문화 창조, 창작, 제작, 기획, 유통, 향유, 소비가 가능한 허브가 되며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기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미래 인구의 사회, 경제, 문화 전 영역에 증대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촉발된 지역소멸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대학과 지역문화 각 차원에서의 위기와 희망을 검토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인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데 필요한 대학의 역할, 그리고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활성화된 지역문화의 생동력이 위기의 지역에 활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정책 목표 대상은 국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외 비수도권 지역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층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및 지역 차원에서의 위기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은 비교집단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대학과 지역문화의 공통 중요 정책 대상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단계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그 과정에서 수도권 경험이 있는 사례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 일본 등 대학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협력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역소멸과 지역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2019년 이후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방안은 2022-2027년을, 단기 사업 및 정책 개발은 2023년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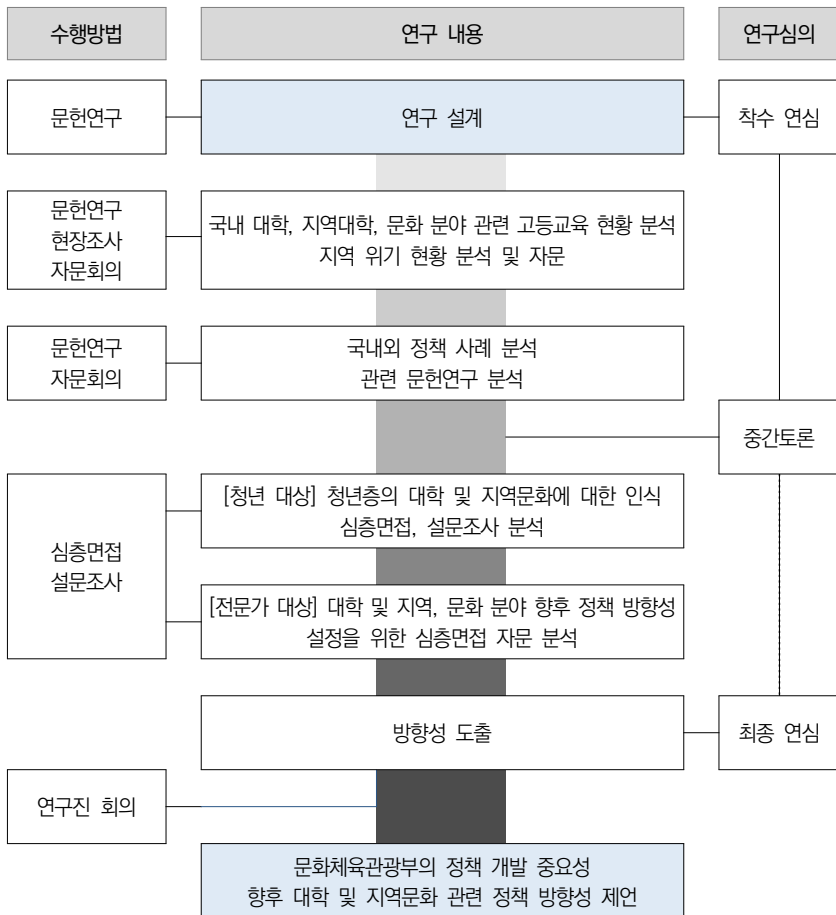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그리고 문화 분야 관련 고등교육 현황과 정책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주요 서비스 수혜집단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라. 연구 방법

다음은 연구 과정에 따른 수행방법과 주요 연구내용이다.

[그림 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 청년층 인식 및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국내 대학의 주 교육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우선 실시하였다. 2022년 3월부터 전국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거점 광역도시 및 시군구 이하 중소도시까지 총 7개 권역 12개 도시 청년 35명, 기관관계자 11명 전체 4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 선정 시, 각 지역별 대학이나 문화재단, 진흥원 등 문화와 밀접한 분야 종사자들(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그중 일부는 별도의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며 내용을 검토하였다.

가. 청년층 심층면접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국내 대학의 주 교육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우선 실시하였다. 2022년 3월부터 전국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거점 광역도시 및 시군구 이하 중소도시까지 총 7개 권역 12개 도시 청년 35명, 기관관계자 11명 전체 4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 선정 시, 각 지역별 대학이나 문화재단, 진흥원 등 문화와 밀접한 분야 종사자들(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그중 일부는 별도의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며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1〉 청년층 심층면접 목록

구분		청년 대상	기관관계자	진행 일정
대구		2	3	2022.3.22
강원	춘천	4	2	2022.4.19
	속초	2	-	2022.4.20
	고성	1	-	2022.4.20
광주		5	-	2022.4.28
전북	군산	5	-	2022.5.10
부산		4	2	2022.5.20
경남	거제	1	-	2022.5.21
충북	진천	1	-	2022.6.7
	청주	5	2	2022.6.8
제주		5	2	2022.9.13
전체		35	11	-
		46		

본 연구진이 각 지역별로 청년층들의 지역문화 인식 심층면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한 주요 내용은 첫째, 심층면접 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역 대학과 지역 문화(향유) 실태를 확인할 것, 둘째, 각 지역별 대학 및 지역문화 향유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그리고 셋째, 청년들이 대학과 지역문화 실태를 배경으로 향후 대학과 정부에 희망하는 내용을 확인할 것이었다.

〈표 2〉 청년층 심층면접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대학 교육과정 전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지역(성장 지역) 전공 대학 입학 전후 지역문화예술 향유 경험 인턴 및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경험
문화예술 향유 경험(지역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문화향유 정도 지역 내 대학가 문화향유 내용(대학 내 포함) 지역 내 문화향유 내용 타 지역 문화향유 내용 문화향유 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여부, 내용) 주변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혹은 일자리 경험자에 대한 평가
지역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측면에 대한 평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등)에 대한 인식 향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식(정착 욕구)
대학 및 정부에 희망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 바라는 점

나. 전문가 자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한 대학 주 교육층으로서 청년층과 구분하여, 대학과 지역문화, 최근 부상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 문화 분야의 향후 전망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별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과정에는 대학 교수 외에도 연구원, 산학협력 컨소시엄 경험자,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대학으로부터 교육과정 이외에도 사업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바 있거나, 기대내용이 있는 사업가도 포함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로컬크리에이터 4명, 대학 및 지역문화 분야 전문가 총 7명, 전체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 설문조사 진행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 유예 포함), 졸업생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유의할당표본추출(Purposive Quota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여, 총 600명의 최종 응답치를 확보하였다.

4. 정책 방향 제시

가. 정책 방향의 목적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을 때 성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발전과 혁신의 중심에서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제시, 선도한다.
-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때 청년의 역할을 적절히 제시한다.
- 청년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제시한다.
- 이를 통해 현재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의 기회를 갖고, 나아가 대학에 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나. 정책 방향의 구분 및 방법

정책 방향은 정책 추진 주체 및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중앙 정부의 역할 - (법령 등) 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 근거 마련, 정책 방향 및 사업 구상, 지원 방안(재정, 인력, 교육 등) 등 정책 운용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부처의 협력 등(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등) 검토¹⁾
- 대학의 역할 - 일반적인 지역 대학의 혁신 방향, 개별 대학의 역할 및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 대학 연합 및 협력을 통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대학이 지역문화 정책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조례 등) 마련 방향 등 제시

1) 기존 사업의 지속 및 연장, 혹은 신규 사업의 개발 등 종합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제3절 연구 주요 고려 사항	12
1. 연구 고려 사항	12
2. 연구 기대 효과	12
3. 연구 주요 개념의 설정 및 적용	14
제2장 대학 위기와 지역문화	19
제1절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배경	21
1. 지역위기 배경으로서 지역소멸의 정책적 의미	21
2.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관련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	22
제2절 대학과 문화 분야 교육의 위기	30
1. 대학의 위기	30
2. 문화 분야 고등교육의 위기	40
3. 문화 분야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46
제3절 지역과 대학의 협력	49
1. 지역의 변화	49
2.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의미	51

제3장 대학 및 지역의 정책 연계 사례	61
제1절 대학 및 지역 연계 정책	63
1. 대학과 지역의 정책 연계 배경	63
2. 지역과 대학 연계 정책의 시사점	65
3. 문화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 연계의 필요성	69
제2절 중앙정부 차원 지방대학 연계 정책	80
1.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80
2. 교육부 LINC+, LINC 3.0 사업	85
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93
제3절 해외 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의 주요 사례	100
1. 일본 커뮤니티 센터(COC) 사업	100
2. 미국 커뮤니티 자원활동 센터(COPC) 사업	105
제4절 지역 대학과 청년 연계 정책	109
1. 지역-대학 연계 사례로서 지역학연구센터	109
2. 지역-대학 연계 학위과정 및 수업 연계 사례	111
3. 지역-대학 연계 인력양성 지원 사례	116
제4장 지역과 청년	117
제1절 청년 정책과 지역문화 활동 현황	119
1. 청년 정책 현황	119
2. 지역 내 청년 활동의 변화	132
제2절 청년 정책 사업의 주요 변화	137
1. 지역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정부 지원사업	137
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141
제5장 대학과 지역문화에 대한 청년층 인식 조사	149
제1절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및 현황 분석	151
1.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심층면접	151
2. 전문가 자문	177
제2절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설문조사	192
1. 설문조사 개요	192
2. 주요 결과	195

제6장 정책 방향	225
제1절 정책 수립 방향	227
1. 정책적 요구와 개발 방향성	227
2. 지역 변화에 따른 대학 연계 정책 개발	230
제2절 정책 대응 방향	235
1. 정책 목적 및 구분	235
2. 정부의 역할 및 제도적 방향	235
3. 대학의 역할 및 연계 방향	239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42
제3절 중장기 전망 및 결론	243
1.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243
2. 결론	244
참고문헌 /	247
ABSTRACT /	253
부록 설문조사지 /	257

표 목차

〈표 2-1〉 지역소멸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24
〈표 2-2〉 일본 총무성 지방창생종합전략	27
〈표 2-3〉 인구문제 주요 2가지 차원	29
〈표 2-4〉 연도별 신입생 총원 현황(2000-2020년)	31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 관련 주요 법령	34
〈표 2-6〉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입시경쟁률(2020년 기준)	36
〈표 2-7〉 수도권 및 비수도권 출신 대학별 직장 및 출신 학교 소재지·근무지 현황 비교	37
〈표 2-8〉 대학-지역 관련 정책기조, 관련 사업, 성과와 한계	38
〈표 2-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자원의 활용 분야	54
〈표 2-10〉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협력관계 주요 결정 요인	56
〈표 2-11〉 대학의 주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통한 이익과 기여 자산	59
〈표 3-1〉 지역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 주체의 역할	68
〈표 3-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연계 가능사업 예시(교육부, 2020)	70
〈표 3-3〉 3.0 사업 모형 설계 예시	90
〈표 3-4〉 춘천문화재단 LINC 사업 제안 과제	92
〈표 3-5〉 지역혁신계정 2005(김영수 외, 2007)	94
〈표 3-6〉 2005-2010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지역별(광역별)-연도별 지원 현황	96
〈표 3-7〉 2005-2009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연도별 유형화 구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96
〈표 3-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2013년 공모안)	98
〈표 3-9〉 2020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결과	98
〈표 3-10〉 대학-지역 연계형 도시재생 활동 내용	102
〈표 3-11〉 춘천문화재단-한림대 협력 과정 교과목 설계안	112
〈표 3-12〉 제주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문화재생 커리큘럼	114
〈표 4-1〉 청년관련 현행법상 연령 기준	121
〈표 4-2〉 2021년 중앙행정기관 청년 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수 및 청년 예산	123
〈표 4-3〉 청년 관련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V, 2020)	127
〈표 4-4〉 2011-2019년 전체 창업 기업 중 청년 창업 기업의 비중	130

〈표 4-5〉 청년의 지역 정주 여부에 따른 분류	134
〈표 4-6〉 청년 지역문화 활동 양상	134
〈표 4-7〉 청년 문화 참여 유형별 분류	136
〈표 4-8〉 청년 관련 사업 비교	140
〈표 4-9〉 서울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넥스트 로컬〉 지역 문화창업 사례	141
〈표 4-10〉 더큰내일센터 기업 신청 사업 유형	145
〈표 5-1〉 청년층 심층면접 목록	151
〈표 5-2〉 청년층 심층면접 주요 내용	152
〈표 5-3〉 문화 분야 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주요 내용	153
〈표 5-4〉 전문가 심층면접 목록	177
〈표 5-5〉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92
〈표 5-6〉 조사 항목	194
〈표 5-7〉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현재 거주지역 장점	195
〈표 5-8〉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6개월 내 경험한 여가활동 (복수 응답)	196
〈표 5-9〉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여가활동 경험 빈도	198
〈표 5-10〉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199
〈표 5-11〉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희망 문화향유	199
〈표 5-12〉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다양한 문화향유	200
〈표 5-13〉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시간적 여유	200
〈표 5-14〉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경제적 여유	201
〈표 5-15〉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만족도	201
〈표 5-16〉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방문목적	202
〈표 5-17〉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문화경험	202
〈표 5-18〉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문화경험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203
〈표 5-19〉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에서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 변화	204
〈표 5-20〉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로컬 라이프 관심도	204
〈표 5-21〉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는 이유	205
〈표 5-22〉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지 않는 이유	205
〈표 5-23〉 수도권 제외 지역(로컬) 이미지 (복수 응답)	206
〈표 5-24〉 대학 전공 교육 만족도	207
〈표 5-25〉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가장 필요한 정책	207
〈표 5-26〉 대학이 지역(로컬)과 연계·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208
〈표 5-27〉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	209

〈표 5-28〉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필요한 사항	209
〈표 5-29〉 전공에 따른 현재 거주지역 장점	210
〈표 5-30〉 전공별 6개월 내 경험한 여가활동 (복수 응답)	211
〈표 5-31〉 전공별 여가활동 경험 빈도	213
〈표 5-32〉 전공별 삶의 만족도	213
〈표 5-33〉 전공별 희망 문화향유	214
〈표 5-34〉 전공별 다양한 문화향유	214
〈표 5-35〉 전공별 시간적 여유	215
〈표 5-36〉 전공별 경제적 여유	215
〈표 5-37〉 전공별 문화활동 만족도	216
〈표 5-38〉 전공별 주 거주지 외 비수도권 지역 방문 목적	216
〈표 5-39〉 전공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 경험 정도	217
〈표 5-40〉 전공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217
〈표 5-41〉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 변화	218
〈표 5-42〉 전공별 로컬 라이프 관심도	218
〈표 5-43〉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는 이유	219
〈표 5-44〉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219
〈표 5-45〉 수도권 제외 지역(로컬) 이미지 (복수 응답)	220
〈표 5-46〉 전공별 대학 전공 만족도	221
〈표 5-47〉 전공별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221
〈표 5-48〉 전공별 대학이 지역(로컬)과 연계·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222
〈표 5-49〉 전공별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	222
〈표 5-50〉 전공별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필요한 사항	223
〈표 6-1〉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	228
〈표 6-2〉 문화 관련 일자리와 사업에 대한 인식	228
〈표 6-3〉 대학 여건에 대한 인식	229
〈표 6-4〉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역할 구분(안)	238

그림 목차

[그림 1-1] 2020-2021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등록률	5
[그림 1-2] 지역 대학의 역할 연계 개념도	7
[그림 1-3]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8
[그림 1-4]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11
[그림 1-5] 청년유입 정책 방향	13
[그림 1-6] 청년유출 방지 정책 방향	13
[그림 1-7] 청년 유입 정책 연계 방향	13
[그림 2-1] 지방소멸 정책 전환 프레임	29
[그림 2-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및 입학자 수 변화 추이	31
[그림 2-3] 지역별 입학생 수 증감률(2000년 대비 2020년)	32
[그림 2-4] 25년 뒤 줄어드는 대학 수	33
[그림 2-5] 수도권 및 비수도권 20대 청년 순 이동인구 현황	35
[그림 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포와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체 수 분포	40
[그림 2-7] 문화예술관광 분야 평균 임금(2021년 8월 기준)	41
[그림 2-8] 대학과 지역 다면적 연계의 형태	53
[그림 2-9]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53
[그림 2-10] 대학 연계 지역혁신 네트워크 대안	57
[그림 2-11] 대학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별 대학-지역사회 협력 활동의 도식화	58
[그림 3-1] 지자체-산업 협력 주력사업(교육부, 2022)	71
[그림 3-2] 교육체계 개편 유형 예시(교육부, 2020)	72
[그림 3-3]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기본 방향	82
[그림 3-4]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도심 융합특구	83
[그림 3-5]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캠퍼스 확대	83
[그림 3-6] 지역연합대학원 모델 예시 사례	84
[그림 3-7] LINC 3.0 단계 및 분류	88
[그림 3-8] 일본 COC 사업 개념도	103
[그림 3-9] 일본 KIT의 COC 사업 현장	104

[그림 3-10] COPC 프로그램 운영 구조	107
[그림 3-11] 제주연구원 조직도(홈페이지 참조)	109
[그림 3-12] 강원연구원 조직도(홈페이지 참조)	110
[그림 3-13] 제주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강의 현장	115
[그림 4-1] 청년 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일부	125
[그림 4-2]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자료집, [정부부처합동(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7
[그림 4-3] 전체 창업 기업 중 20대 창업자 비중의 증가 현황	131
[그림 4-4] 30대 미만 창업자 수	131
[그림 4-5]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 2019-2021년 창업 지역과 브랜드(1-2기)	142
[그림 4-6] 제주더큰내일센터 사업 추진 경과	143
[그림 4-7] 제주더큰내일센터 혜택	143
[그림 4-8] 제주 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	144
[그림 4-9] 제주 더큰내일센터 행사	145
[그림 4-10] 청년창업사관학교 패키지 지원 방향(https://start.kosmes.or.kr/)	146
[그림 4-1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과정 및 내용(https://start.kosmes.or.kr/)	146
[그림 4-12]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 관계자 인터뷰(연구진 촬영)	147
[그림 5-1] 청년층 심층면접 진행 현장	153
[그림 5-2] 로컬크리에이터와의 면담 현장(대구)	165
[그림 5-3] 로컬크리에이터와의 면담 현장(춘천·군산)	166
[그림 5-4] 청년 창업공간에서의 면담 현장(부산·제주)	168
[그림 5-5] 제주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179
[그림 5-6] 충북 진천 룰스퀘어 농업문화복합공간	181
[그림 5-7] 경남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182
[그림 5-8] 강원 속초 소호259	183
[그림 6-1] 경북 군위 사유원(사유원 홈페이지 제공)	232
[그림 6-2] 관점의 변화로 지역 문화정책의 변화	233
[그림 6-3] 변화하는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234
[그림 6-4] 대학 연계 주체 간 역할 제시	244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방향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소멸의 위기감 확대

‘지방소멸은 국가공멸²⁾’이라는 표현까지 나타나며, 지역소멸은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소멸은 2000년대 초반 인구감소로 인한 경고가 촉발된 이래, 201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³⁾’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 대응의 시급함을 보여준 바도 있다.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며 인구 자연 감소 문제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가능성이 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5.5%에 달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화 사례가 총 105개로 파악되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때 전국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소멸 위기를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국회도 2021년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하여 그동안 고령화 자체에 대한 대응, 고령화 관련 인프라 필요성 제기, 복지·돌봄 관련 정책 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 등

2) 매일경제(2021), ‘지방 소멸위기, 국가 공멸위기’, 2021.12.07

3)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이 추진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보다 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질적으로 지역 미래를 주도할 인구층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음 수준으로 ‘지역 활력’에 대한 고민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 대응 대책 수립연구4)’,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5)’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큰 한계는 청년층의 감소와 수도권 유입의 증가라는 부분이다.

나. 지역대학의 위기

실제로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보다 청년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보다 청년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이 중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공동체이자 청년 문화의 거점이기도 했던 대학 자체의 소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활력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의 거점이며,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온 지역대학도 지역소멸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외부 정책에 의한 지역 활력 혹은 청년 유입 이전에, 지역 내부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함께 활력을 찾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2010년대 후반부로 오면서 지역소멸과 마찬가지로 ‘지방대의 위기’ 또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가시화되었다. 예를 들어 ‘10년 만에 부산 100개, 경남 150개 학과 사라져6)’ 같은 기사들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과 쌍방향 악화를 구축하며 심각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실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정책 자료집7)에 의하면 지역소멸은 지역대학소멸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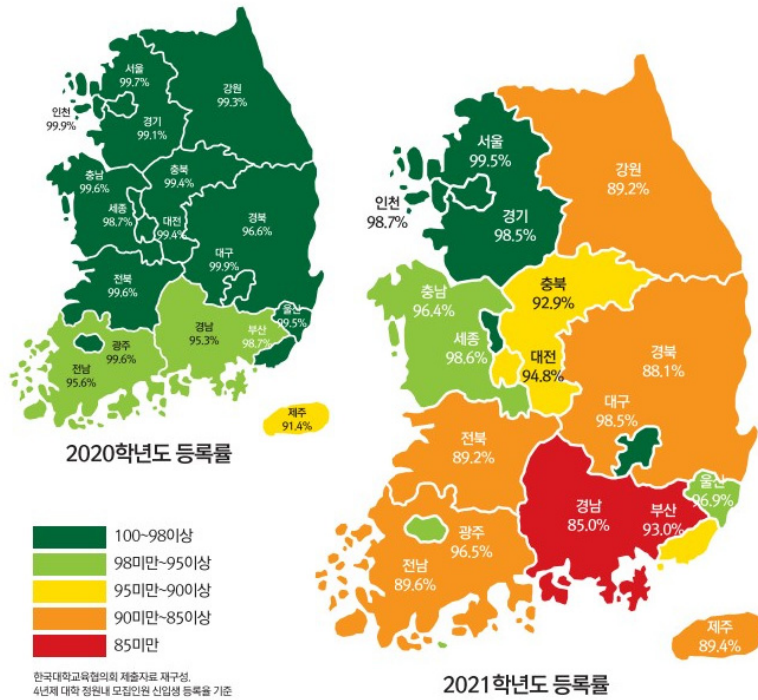
4) 2022년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 수행중

5)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역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역행정연구원

6) 연합뉴스(2021), ‘지방대의 위기 10년 만에 부산 100개·경남 150개 학과 사라져’, 2021.05.10

7) 서동용 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그림 1-1] 2020-2021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등록률⁸⁾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의 창조력, 생산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인구 유입도 지역의 전문적 혹은 협력 가능한 기반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데, 지역대학의 소멸은 이러한 기반의 소멸과 맞닿은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인구유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⁹⁾’ 및 ‘지방소멸 부르는 지방대 위기¹⁰⁾’ 등의 여론들이 위기감을 더 높이기도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해왔던 지방대학 예술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도 전해진다. 이는 다음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8) 서동용 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9) 동아일보(2021),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시장논리보다 혁신 통해 강소대학 만들어야’, 2021.12.27
 10) 중앙일보(2021), ‘지방소멸 부르는 지방대 위기’, 2021.11.04
 11) 대학지성(2021), ‘대학들의 오징어게임...예술대학을 살리자!’, 2021.11.09

기사 <대학들의 오징어 게임...예술대학을 살리자>(2021) 중 일부

대입 학령인구는 2022학년도에 8만여 명, 다음 해 10만 명, 그 다음 해 12~13만 명씩으로 감소해 10년 후에는 현재 203개 4년제 대학의 30%, 18년 후에는 절반이상이 폐교되리라 예상된다. 예전 정부 실책 탓에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대학들은 이제 현 정부의 각자도생 자유시장 정책 하에서 서로 한정된 입학자원 유치를 위해 장학금, 기숙사, 통학권 등 제 살 깎는 모듬 세트를 앞세우며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대학 간 오징어 게임에서 분투 중이다. 승자독식 체제 및 대학과 지역사회 황폐화가 우려된다. 국내 대학의 85%가 사학인 현실에서 최우선 폐과 대상은 대개 예술전공이다. 지난 3주기 평가 점수에서 20%에 해당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총원율에서 예술대학은 구조상 절대적으로 불리했거니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기획, 창작, 활동, 행정, 유통, 소비, 향유 전반에 걸쳐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공유 역할이 중요한 지역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폐지는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 위기로 인식되는 것이다.

2021년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¹²⁾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충북대에 예술대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유지에 지역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인력과 자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¹³⁾.

기사 <예술학과 줄폐과 위기 속 충북대 예술대학 신설 움직임>(2021)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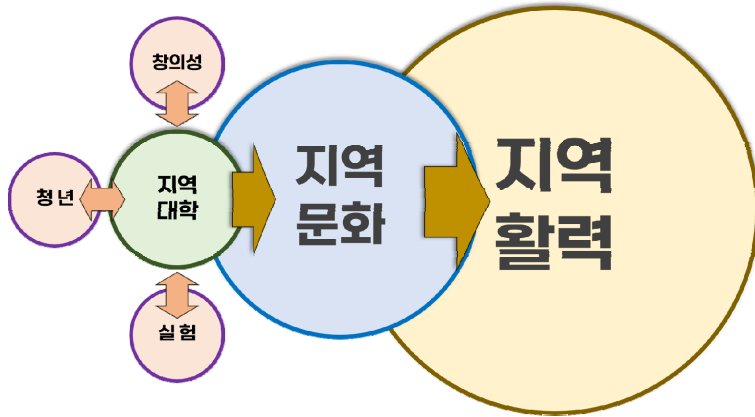
충북문화재단은 도내 예술대학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엔 충북예총·충북민예총·충북문화예술포럼·충북문화원연합회로 대표되는 충북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예술교육학회 추진준비위원회도 참여, 도내 예술대학 설치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재단 김승환 대표이사는 "충북 예술인재 육성은 충북예술 생태계와 충북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수년 간 논의됐던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단은 이달 초 충북대학교에 한국음악과, 무용과, 연극과, 서양음악과, 미디어예술과 등 기초예술 순수예술학과 개설을 건의했다.

대학은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지식과 네트워크 차원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은 지역 창의성이나 정체성, 지역 내외부의 역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실패를 포용하는 소중한 실험의 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이 지역에서의 문화의 창조, 창작, 제작, 기획, 유통, 향유, 소비 단계의 허브가 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과 새로운 희망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대학은 주요 수요층이자 미래 주도층인 청년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 전 영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중부매일(2021), '예술학과 줄폐과 위기 속 충북대 예술대학 신설 움직임', 2021.11.04

13) 충청일보(2021), '충북문화재단 "도내 예술대학 설치해야"', 2021.11.16

[그림 1-2] 지역 대학의 역할 연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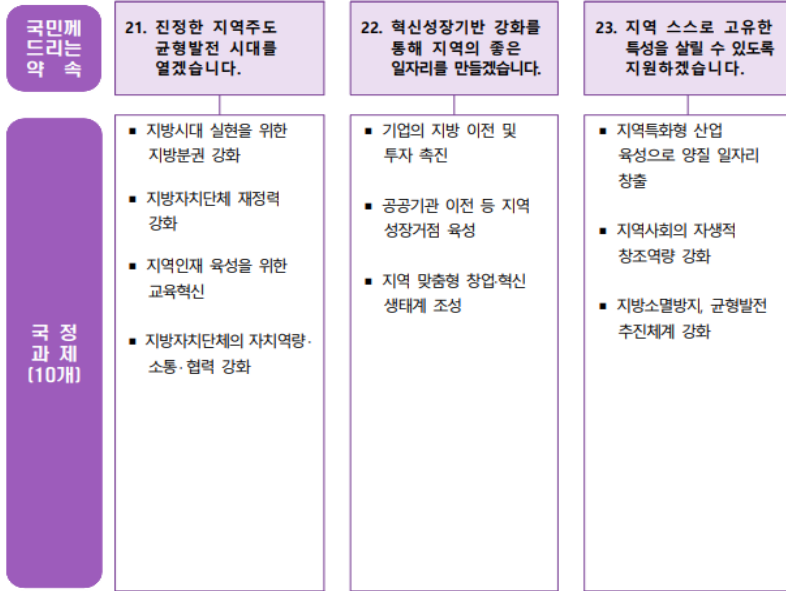
다. 국정과제 연계의 필요성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과제 수행에 있어 청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도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 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의 수도권 집중성을 해소하고, 일자리와 지속 성장을 통한 특색 있는 지역의 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강화’는 다음과 같은 과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

14) 윤석열 정부 120 국정과제, 2022년 7월, 대한민국정부, p. 196

[그림 1-3]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¹⁵⁾



지역·문화 관련 국정과제

-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인프라)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공간을 조성하고, 상권 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 도입
-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 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다지자체-다부처 간 협력 촉진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15)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10, 2022년 7월, 대한민국정부, p. 196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촉발된 지역소멸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대학과 지역문화 각 차원에서의 위기와 희망을 검토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인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데 필요한 대학의 역할, 그리고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활성화된 지역문화의 생동력이 위기의 지역에 활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정책 목표 대상은 국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외 비수도권 지역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층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도 대학 및 지역 차원에서의 위기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은 비교집단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대학과 지역문화의 공통 중요 정책 대상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층면접 단계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그 과정에서 수도권 경험이 있는 사례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 일본 등 대학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협력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역소멸과 지역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2019년 이후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방안은 2022-2027년을, 단기 사업 및 정책 개발은 2023년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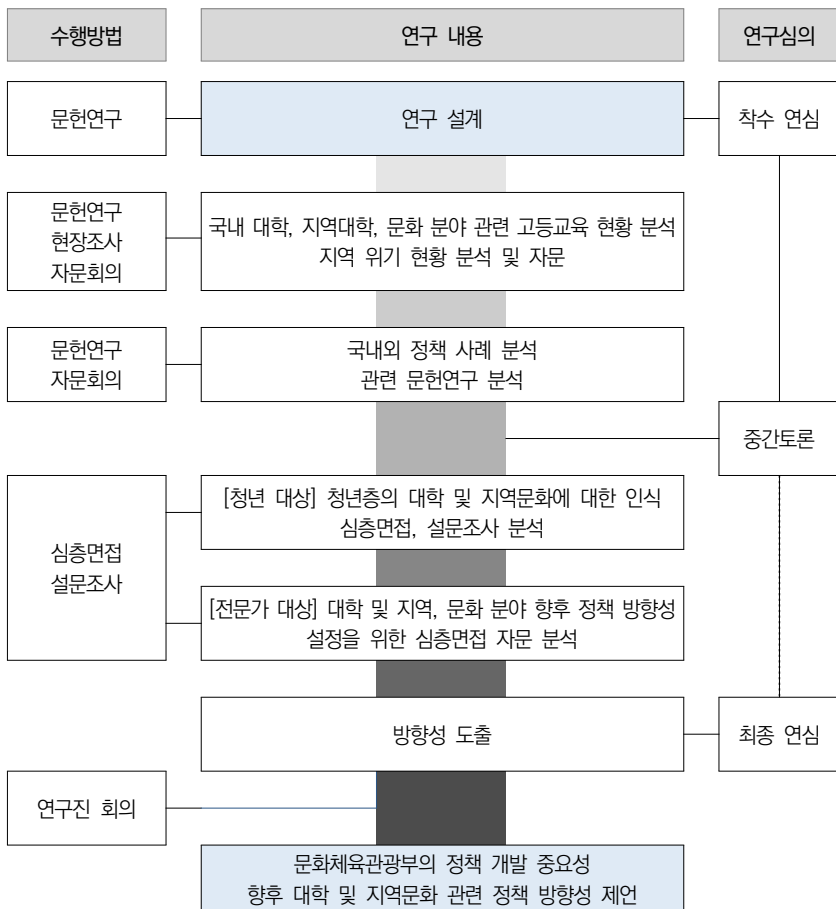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그리고 문화 분야 관련 고등교육 현황과 정책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주요 서비스 수혜집단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다음은 연구 과정에 따른 수행방법과 주요 연구내용이다.

[그림 1-4]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제3절 연구 주요 고려 사항

1. 연구 고려 사항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 양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요층이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2023년 이후 관련 정책과 대학들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 일반 차원에서의 위기와 문화 관련 분야의 전공, 인력 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와 인식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통합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재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에서의 교육과 일자리 문제, 지역 간 문화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여러 부처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문화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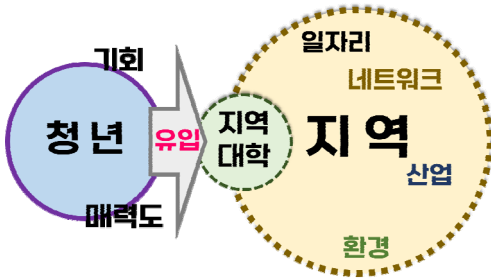
지역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대상의 인식 변화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2. 연구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대학과 지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정책 집단인 청년층의 지역문화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문화 교육과 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과 보

다 더 원활하게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 혁신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외부로부터의 전문가, 학생, 다양한 인구층 등을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 청년유출 방지 정책 방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의 노력이다.

[그림 1-5] 청년유입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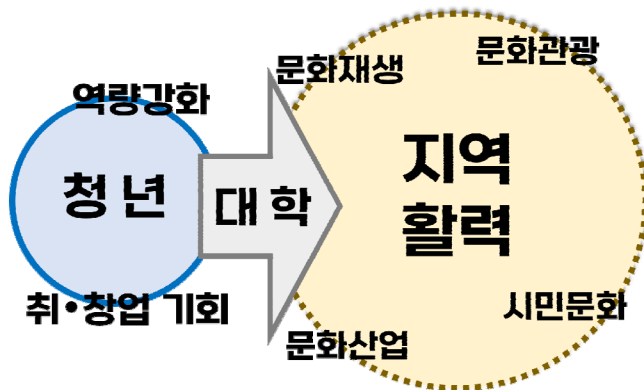


[그림 1-6] 청년유출 방지 정책 방향



특히 본 연구는 지역 정주인구로서 지역 내 청년층 외에도, 지역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와 유동인구들이 지역문화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때 지역문화는 기존의 지역문화와 예술 범위에서 나아가 최근 라이프스타일 산업, 로컬크리에이터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융복합적 성격의 산업 범주까지도 검토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특히 대학이 각 지역의 플랫폼(기반)이 되어, 문화와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7] 청년 유입 정책 연계 방향



3. 연구 주요 개념의 설정 및 적용¹⁶⁾

가. 지역(地域)과 지방(地方)

사전적으로 ‘지역(地域)’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혹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한다¹⁷⁾. 이와 비교하여, ‘지방(地方)’은 ‘어느 방면의 땅’ 및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 국어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지역’은 크기(규모)만 있는 스칼라(scalar) 값의 ‘공간 혹은 영역’을 의미하는 데 반해, ‘지방’은 ‘방향’을 의미하는 ‘방(方)’이 붙어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지칭하는 벡터(vector) 값의 ‘공간 혹은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방(地方)은 ‘중앙에서 통치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나아가 서울(수도권 혹은 행정중심)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지방’ 용어를 지양하고, ‘지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동일한 자격과 위상의 공간이란 의미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나. 지역소멸의 의미 및 적용

‘지역소멸’ 개념은 2014년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와, 2014년 저서 <지방소멸>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역에 따라 인구수 변동은 다르게 진행되며, 지역 간 차이의 원인은 지방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3대 대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지역소멸의 주요인이라 분석한 바 있다.

지역소멸은 이처럼 최초에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 또는 부족하여,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일본의 경우 특히 ‘과소(過疎, depopul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과소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

1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 연구 초반부에 개념 설정을 하고자 함

17) 표준국어대사전

과소 지역은 이러한 상태가 이미 발생한 지역을 의미한다.

일본은 마스다 보고서와 저서 <지방소멸>이 발표된 이후 정책적으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인구감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사람·일·창생본부’를 설치하고, 2015년 5년 단위의 종합전략을 책정, 지방창생 관련 법 제정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¹⁸⁾

우리나라에서 지역소멸은 일본 연구를 토대로 이상호(2016)¹⁹⁾가 국내에 적용하여 사회문제로 본격 제기하였다. 이때 ‘지역소멸’은 일본에서의 지역소멸 개념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의한 직접적 결과로서 지역소멸을 논하는 것보다, 지역의 현재 사회문화적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가능한 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도출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 대학 및 대학교(大學校)

본 연구에서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중 5. 원격대학을 제외하고 7. 각종학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 가운데, 5. 원격대학은 연구대상인 지역문화 관련 지역에 물리적 기반이 약하기에 제외하였다. 7. 각종학교의 경우 유일한 국립 각종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제외하였으며, 유일한 사립 각종학교인 ‘순복음총회신학교’가 충북 제천시에 위치하기에 제한적으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라. 지역대학교 및 지방대학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의하면 제2조(정의)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적 문건 및 기본계획의 인용 등에서는 ‘지방대학’의 명

18) 이기배(2017), 일본의 인구 감소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pp.81-104.

19)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pp.3~17.

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과 대비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지역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본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 또한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고 명시되어 있다.

마. 지역문화 개념의 설정 및 적용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대학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지역문화’와 구분하여 공공 문화정책 분야와 문화 활동·문화산업 분야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공문화정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의한 문화재단 혹은 이러한 기관에 의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활동은 지역 문화의 ‘계획수립’, ‘정책개발’, ‘문화행정’, ‘창작 및 활동지원’, ‘매개 및 향유 프로그램 시행’을 들 수 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혹은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 활동·문화산업 분야도 사실상 ‘공공’의 범주에 들 수 있지만, 편의상 공공행정과 구분하여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활동을 포함하였다. 예컨대 지역 내 민간이 운영

하는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의 공예·디자인·콘텐츠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포함한다.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립 서점, 라이브 공연장, 민간 극장,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 기반 ‘문화기업’의 경우, 공공과 상업 활동에 동시에 활동하고 있기에 중복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바. 주요 연구 대상으로서 청년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청년층의 경우, 연령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만 19~34세,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인 15~29세, 또한 통계청에서 설정한 만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고려하였다. 정책에 따라 청년 최고연령이 39세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의 교집합인 만 19~29세를 핵심 청년층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제2장

대학 위기와 지역문화

제1절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배경

1. 지역위기 배경으로서 지역소멸의 정책적 의미

지역소멸이란 개념이 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빈번히 쓰이게 된 데에는 지역 인구감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인구소멸에 도달하기 전에 지역소멸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미래에도 매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통한 지역소멸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마스다 히로야에 따르면 지역소멸은 “지역 인구감소 → 공동체 기능의 저하 →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 3단계로 전개된다. 이어서 지역소멸의 기준으로 인구의 ‘재생산력’에 주목하여 지방의 소멸 가능성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인구 재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20-39세 여성 인구의 감소 여부’에 따라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다. 즉 젊은 여성 인구에 따른 출산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며, 이들의 인구 유출 정도는 장래 특정 시점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달리 만드는 척도가 된다고 지적한다.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출산율 제고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이 지역소멸 측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국내에서는 마스다의 지역소멸 기준과 달리, 지역소멸 관련 논의를 추진하는 주체와 정책 관심 대상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지역소멸 관련 논의를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분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은 지방소멸의 인구문제에 관한 척도로 특정지역 인구감소문제(인구의 사회적 이동)와 국가적 인구감소문제(출산율)를 적용하고 있다.²⁰⁾ 이에 지방소멸을 막기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31호, 8쪽

위해 제도적으로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관련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

가. 해외 연구 동향

인구감소 문제는 1980년대부터 독일 학계에서 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쇠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인구감소 문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하우스만 등(Häußermann and Siebel; 1988)은 구동독 도시들이 인구감소로 주택의 공실, 기반시설의 과잉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축소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유럽 전역으로 논의가 확장되었으며, 건축가 필립 오즈발트(Philipp Oswalt)에 의해 관련 논의가 비도시화(deurbanization) 주제로 확장되기도 했다.

2004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도시·지역개발 연구소는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를 결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소도시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세르비아 파빌리온과 루마니아 파빌리온에서는 축소도시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도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유럽 지역 인구감소와 미국의 도시 구역 침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은 각 국가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상황별로 의미에 차이가 있다.

나. 국내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2000년 이후 출산율 저하 문제로 다뤄져왔다. 특히 2014년 이전까지는 특정 지역 구조 및 도시화에 관련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진 바도 있으나, 이는 지역의 소멸위기 의식보다는 국가 발전에 따른 도시 발전에 대한 양상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국내 지역소멸에 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 2014년 일본 마스다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일본의 지역소멸 관련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되었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전인하는 직접적 요인으로서 출산율 저하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OECD, ILO, 미국 대학 연구소 등이 국내 인구감소 관련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소멸도 이와 함께 일부 다뤄지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는 국내 지역소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첫째,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기준 및 양상에 대한 연구, 둘째, 법, 정책 등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한 방안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 셋째, 고용, 이동권,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등 소관 부처 및 주제별 세부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이전의 지역소멸은 위기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연구보고서가 중심이었으며, 지역소멸의 원인 및 관계 요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여, 2018년 이후 지역소멸에 관한 연구는 소멸 지역의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추이 분석과 대응 과제 발굴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기존의 연구가 지역소멸의 기준 대상 및 범위를 고정적으로 바라봄에 따라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요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감소는 지역소멸 등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문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전 부처에서 인구문제와 관련정책을 최중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논의하는 기사도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주요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근본적 해결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다양화가 계속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 국내 지역소멸의 제도적 근거 및 실질적 요인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지역소멸을 규정한 근거는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다(지정기준 2021년 6월 시행령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9항에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표 2-1〉 지역소멸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 시기	주요 선행 연구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희연, 송종홍(1995), 서울대도시권역의 설정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 채성주(2010), 일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 방침과 자립촉진 계획 • 원광희, 채성주, 송창식(2010),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2014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희연, 한수경(2014) 길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하나 • 마스다 히로아(김정환 역)(2015), 지방소멸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이소영(2016),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조상필·신동훈(2016), 인구감소시대 압축형 도시정책 필요성 제안 (일본 도야마시 압축도시 개발사례) • 박승현(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보고서 • 이기배(2017),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강인호·노세희(2017), 인구소멸시대의 일본 축소도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수축 전략
2018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형수(2018),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권용석(2018), 지방소멸의 실태 및 극복 정책- 독일 • 노세희, 강인호(2018), 인구소멸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민성희(2018), 인구감소시대의 국토계획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 강동우(2019),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 임서현, 홍성진(2019),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 안성조(2019),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은? • 하혜영(2019),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 • Matthias Knuth(2019), 독일 노동시장의 난민통합 • 조진우(2020),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고문익, 김걸(2021),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설명인자 연구

법률상으로 지역소멸의 핵심 요인은 연령이다. 그 기준은 15세~64세의 인구와 출생률을 함께 고려하며, 이는 지역소멸의 기준을 인구통계학적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범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마스다보고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인구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구 재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20-39세 여성 인구의 감소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인구 관리 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도출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나,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소멸의 요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는 청년세대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집중화 현상이 지역소멸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진단된 바 있다²¹⁾. 관련 연구에²²⁾ 의하면 (박진경 외, 2020)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30대 청년인구의 비율이 2000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 이상을 구성했으나, 이후에는 20% 미만 지역들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꾸준히 유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준영(2019)은 1984~1993년 출생자의 연령대별 지역 간 이동규모를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최근에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1984~1988년, 그리고 1989~199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핵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의 주요 문제(2019)

-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첫 번째 계기는 대학 진학, 두 번째는 취업
- 20~24세와 25~29세 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서울이 12.80%p, 경기도가 13.30%p, 인천이 5.0%p로 어느 지역이든 20~24세 시점의 인구 증가율(%p)보다 높음
-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는 청년여성 인구가 청년남성 인구보다 더 큰 규모로 유출되고 있음. 반면 수도권으로의 유입 규모는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더 큼
-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는 해당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규모 확대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반영한 것임
- 지역대학 우수인재 양성 지역사회에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유출 억제)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에서도 ‘지역에서의 인구가 소멸하는 지방소멸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131, p.4

22) 박진경 외(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김준영(2019),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 현재 청년을 포함하여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높여서 출산율 향상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키며',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수도권 출산율 저하와 국가 전체 인구위기를 유발시킨다'고 분석하였다.²⁴⁾

즉, 이는 포괄적 수치로서 지역인구 감소나 소멸보다,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한 사회경제적 소멸이 지역을 침체하게 하는 주 영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침체를 야기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소멸 관련 국내외 정책 대응 동향

1) 일본의 정책 대응 사례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인구가 대거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지역의 인구 과소 문제를 인식하고 1970년부터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1980-1989)',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1990-1999)'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일본의 경우 핵심 타깃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혹은 지역으로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첫째,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지역 삶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IT 기술 및 이동성 확대를 통한 지역에서의 정주에 대한 기피감을 해소하고 이동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을 오가는 청년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소멸을 막는 관계 인구층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소멸에 집중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의 가능성을 찾고 특화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자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방향 전환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소멸'이 아니라 '활력'을 일으키는 현재 지역의 강점을 찾아 유인책과 이때의 핵심으로서 '청년'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131, pp 3-4

〈표 2-2〉 일본 총무성 지방창생종합전략

구분	내용
1기 지방창생종합전략 (2015-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원인을 동경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파악하고 2060년까지 동경의 집중과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 정주인구 유치 • 지역 안정적 일자리 강화 • 지역 신 인구 이동 마련(지역이주 및 지방 거점강화, 지방 고용확대, 지방대학 활성화) • 청년세대 고용, 결혼, 출산, 육아 기반 마련 • 지역간 연계 강화
2기 지방창생종합전략 (2020-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도 매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통한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동경 지역 인구 집중 시정을 비전으로 설정 •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환경 마련 • 청년세대 지역이주 및 관계인구 확대 •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지역자원기반 안전한 양질의 생활 마을 마련

2) 독일의 정책 대응 사례

독일²⁵⁾은 지역소멸의 외부적 해결 정책으로 국외 인구의 수용 정책을 채택하였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수용을 통한 소멸 지연을 오랫동안 유도하였다. 2016년 기준, 독일의 국외 출생인구(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수) 비중은 15%였으며, 이민자 가운데 독일 태생 부모 한 명이 외국 태생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포함하면 2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 내부적으로는 지역소멸의 원인을 실업, 높은 공공지원 의존도, 낮은 구매력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Soziale Stadt)’과 ‘도시·지역 거점조성사업(Aktive Zentren)’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에서 플랫폼 등의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소멸의 핵심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대학 캠퍼스 기반의 대학도시²⁶⁾,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업 시설과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

25) 이민자 청년층의 교육 및 사회 우수 인재 양성 문제도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26) 대학도시는 대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도시. 성공적인 사례로는 괴팅겐(Göttingen), 튀빙겐(Tübingen),

였다. 대학도시는 주요 거점 대도시와 일반 열차로 30분~1시간 30분 사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대학생에 한하여 이체에(ICE: 초고속 전기열차)를 제외한 열차의 무료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대학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주체이자 허브가 되어 도시를 새로이 구축하는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복수 주소제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기숙사 및 물가가 저렴한 대학도시에 거주하면서 오후나 주말에 거점 도시로 이동하여 쇼핑,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대학생이 머무는 도시의 수를 늘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현실에 반영할 필요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관련 정책 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²⁷⁾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소멸의 원인에 부합하지 않는 처방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즉,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인구유입과 해남, 의성, 양구 등 지방소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국 공통의 “출산율 향상”을 일률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인구문제는 국가 총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 향상과 관련된 종적 측면의 인구정책과 취업, 교육, 지역의 매력 등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지방소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의 횡적 측면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취업, 교육 등 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들이 지역 매력 창출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시책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특히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험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정책 차원에서 제시하는 초점이 과거 수동적인 관점에서의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소멸에서 지역매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익숙해졌던 수도권적 관점에서의 매력을 찾기보다,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이 갖춘 강점이 있는 매력(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지역의 문화적 특성, 공동체, 슬로우 라이프, 이동거리 및 시간, 여가생활, 집값 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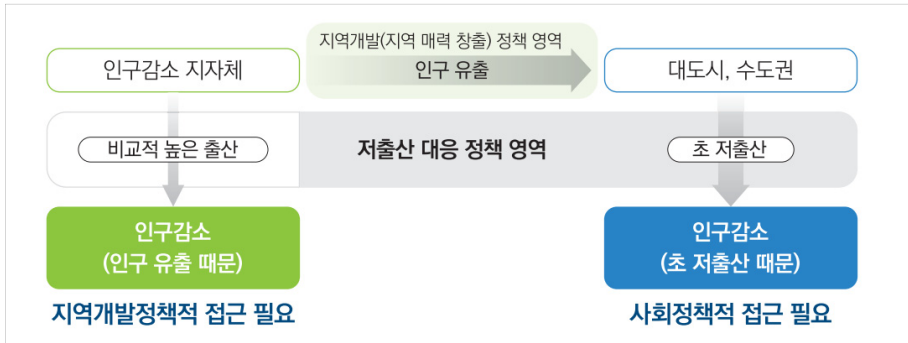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기센(Giessen) 등으로 대학생 수가 전체 도시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131, pp 3-4

〈표 2-3〉 인구문제 주요 2가지 차원²⁸⁾

국가적 인구감소 문제(중적 측면)	구분	특정 지역 인구감소 문제(횡적 측면)
• 낮은 출산율	주요 원인	• 인구의 사회적 이동
•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고령화)	인구 현상	• 특정 지역(지방소멸지역) 인구 감소
• 국가성장동력 약화, 국가인구 위기	발생 문제	•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경제 위기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포함 전국 지역	대상 지역	• 지방 소멸 지역
• 출산율 향상 정책 * 지역간 횡적 인구이동에는 관심없음	대응 방향	• 인구(청년 등)정책 관련 지역매력 창출 * 국가의 총적 인구증감에는 관심 없음

이러한 지역매력에 연계되는 분야로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서비스’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즉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어, 그 핵심으로 문화 분야에 주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지역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지역문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문화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로서 청년의 역할과 필요성을 확대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화 분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 지방소멸 정책 전환 프레임²⁹⁾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131, pp 3-4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131, pp 3-4

제2절 대학과 문화 분야 교육의 위기

1. 대학의 위기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 위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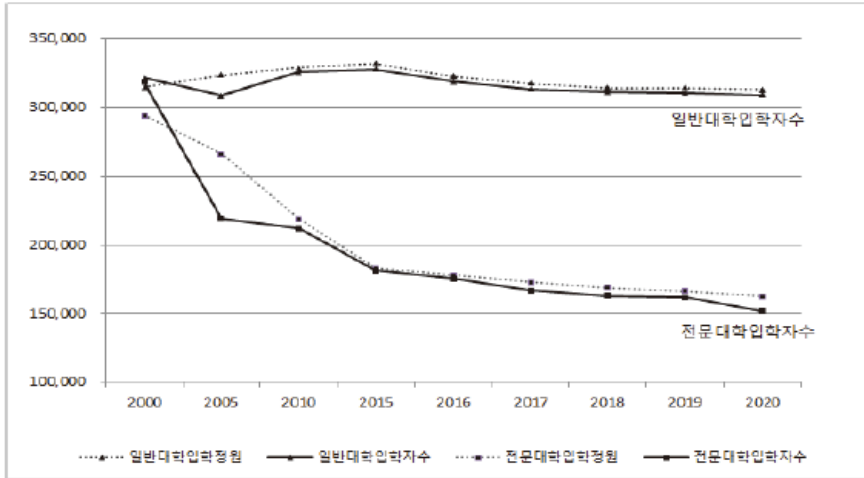
인구감소는 일차적으로 저출산 영향이 가장 크며, 사회적으로 체감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중등교육 단계를 지나, 점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입학 인구의 감소, 노동시장 진입 인구의 감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의무교육 시기인 고등학교 직후, 즉 대학 입학생 규모에 특히 주목한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 입학 이후 고등교육과정을 거치는 인구의 질적 수준이 향후 국가 생산력 수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고등교육과정인 대학 교육 시기 이후 이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국가 생산 가능 인구 및 시장 경제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 인구 규모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 시장의 규모를 사실상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 비중 그 자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으로 인재 외에 보유 자원의 토대가 취약할 경우, 이처럼 고등교육과정을 거친 인재의 양적 규모와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국가 성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로 오랜 기간 동안 예고되어 왔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현재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추세라는 점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지역 대학들 중에는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그간 통·폐합이 진행된 곳들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연도별 신입생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신입생 충원율은 2000년 대비 2020년, 일반대학은 3.3%p, 전문대학은 1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정, 양정승, 2021).

[그림 2-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및 입학자 수 변화 추이



주) 일반대학, 전문대학 발췌하여 그래프 제작성

자료: KEDI(2021a). 연도별 신입생 충원 현황.

출처: <https://kess.kedi.re.kr/index>

<표 2-4> 연도별 신입생 충원 현황(2000-2020년)

(단위: 천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 대학	입학정원	314.4	323.5	329.0	331.9	322.4	317.4	314.0	313.9	312.7
	입학자 수	321.4	308.7	325.5	327.6	318.8	313.3	311.1	310.2	309.1
	충원율(%)	102	95	99	99	99	99	99	99	99
전문 대학	입학정원	294.2	266.1	218.5	183.0	177.9	172.6	168.7	166.2	162.3
	입학자 수	318.1	218.8	211.6	181.3	175.1	166.9	162.8	161.7	152.1
	충원율(%)	108	82	97	99	98	97	97	9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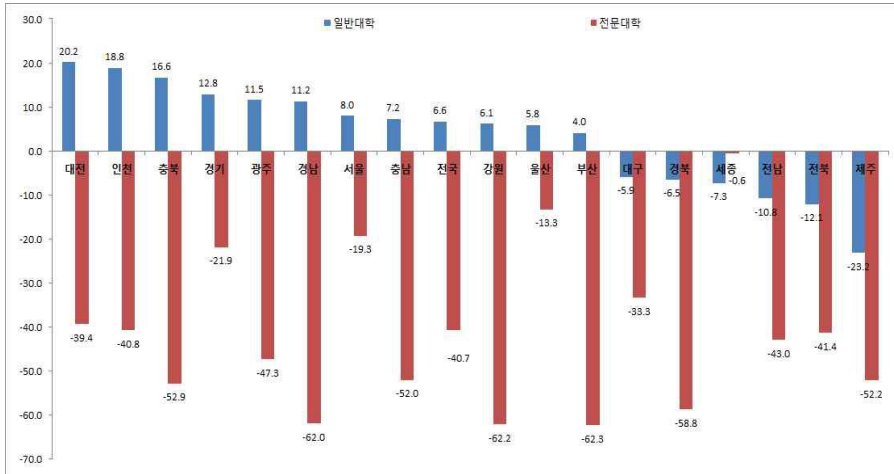
주 1) 입학정원: 모집 내 정원 인원

2) 입학자 수: 정원 내 입학자 수

자료: KEDI(2021a). '연도별 신입생 충원 현황' 중 일반대학, 전문대학 발췌하여 도표 작성

출처: <http://kess.kedi.re.kr/index>

[그림 2-3] 지역별 입학생 수 증감률(2000년 대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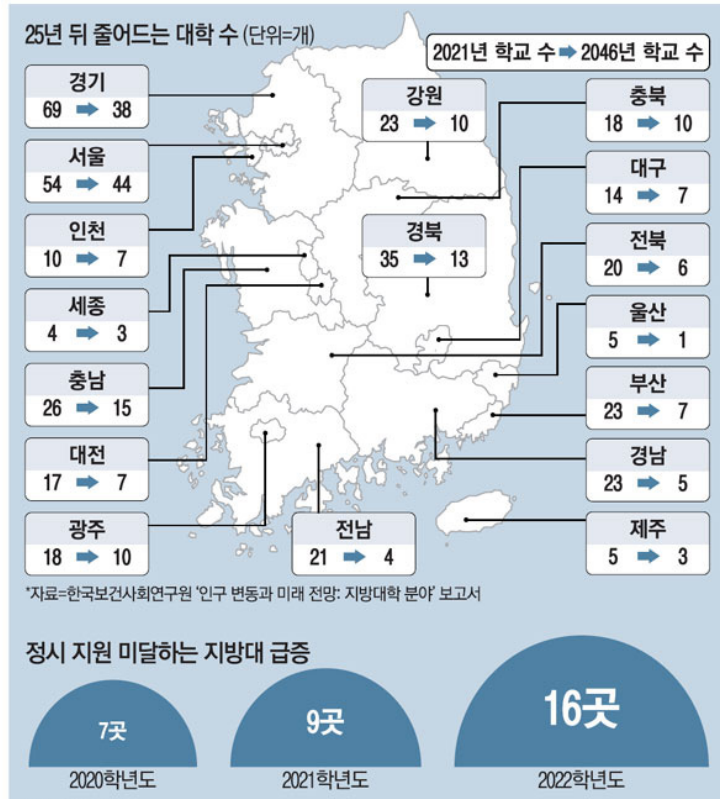
주: 증감률= (2020년입학생수 -2000년입학생수)/2000년입학생수*100. 단, 세종의 경우 2015년을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대학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문제제기도 계속 증가해왔다. 일반대학에서도 취업이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직업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간에도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 평가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대학은 평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 지표에 학생들의 취업률과 동시에 학교에서 생산하는 연구 실적이 반영되면서 일반대학은 학생들의 직업 교육과 동시에 연구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한준, 김수한, 2017).

대학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가 더 가중된 측면도 있다. 대학의 성과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다보니 신입생 미충원과 더불어 재정난으로 인해 지역 대학은 결국 폐교를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25년 뒤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190곳만 살아남는다는 전망, 이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 인천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준 바도 있다³⁰⁾.

30) 황선윤, “‘죽음의 계곡’ 진입…”2046년 지방대 절반 사라진다” (2021.12.06.), 중앙일보

[그림 2-4] 25년 뒤 줄어드는 대학 수



출처: 매일경제, “교직원 월급도 못주는 지방대…25년뒤엔 60% 사라질판” (2022.01.16.)

나. 지역 인재 유출에 의한 지역대학의 위기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본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 내 우수한 고교 졸업자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것이 지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학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인재 유출을 심화시켰는데(대학교육연구소, 2020),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2021년 신입생 미충원율은 10.8%로, 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 5.3%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인식, 2021).

대학 소멸은 결국 지역산업 및 지역고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 혹은 지역소멸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지역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 투자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상황과 고등교육 관련 환경 차이로 인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서영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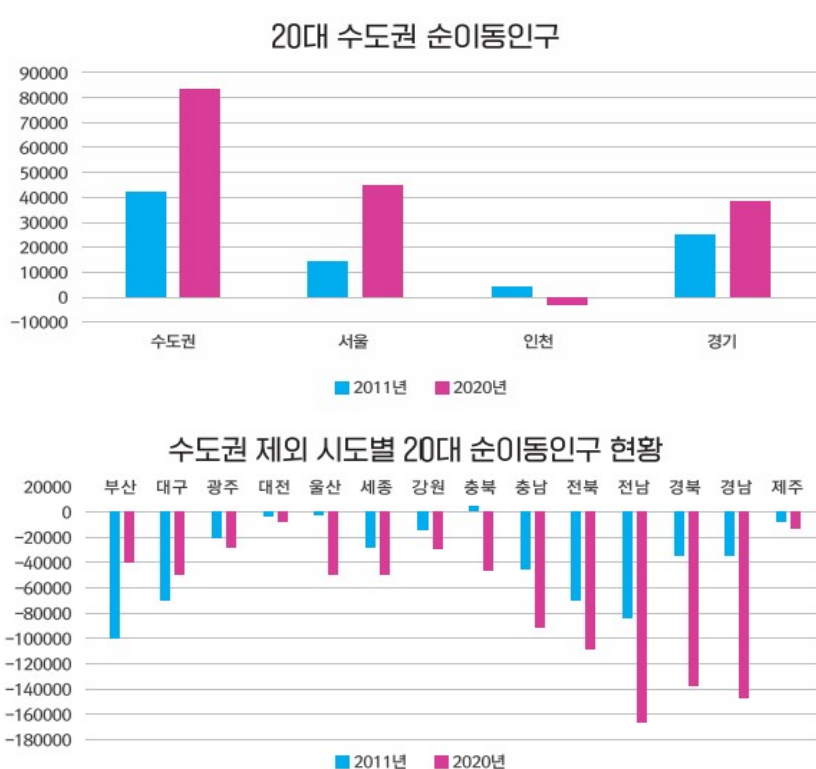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조항 내용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④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재인용 「교육기본법」[시행 2021.9.24.] [법률 제18456호, 2021.9.24., 일부개정], 「고등교육법」[시행 2021.9.24., 일부개정] [법률 제17951호, 2021.3.23., 일부개정], 「사립학교법」[시행 2021.6.23.] [법률 제 17659호, 2020.12.22., 일부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9.24.] [법률 제17953호, 2021.3.23.,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시행 2021.7.13.] [법률 제 17892호, 2021.1.12., 타법개정], 「지방자치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92호, 2021.4.20., 일부개정]

2021년 발표된 20대 인구의 순 이동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³¹⁾,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서울, 경기에서 20대 인구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의 주요 광역시는 2011년 대비 2020년 20대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여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을 포함한 9개 주요 지역권역별로는 대체로 확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16,420명, 경북에서 15,662명, 전남 10,994명 등의 20대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인구가 유출되기도 했다.

[그림 2-5] 수도권 및 비수도권 20대 청년 순 이동인구 현황³²⁾



31) 서동용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재구성 자료 인용

32) 서동용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다. 대학 교육의 최대 수혜집단으로서 청년층

20대 청년 중심의 지역 인구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서울에 대한 열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20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 이탈 현상은 청년들의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한 열망, 수도권 소재 대학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행 여건의 부족,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취업률과 취업의 질,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수도권 등의 다양한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서동용의원실, 2021; 전재식, 2015). 실제로 지역 인재들이 정주 지역을 떠나는 시기는 첫 번째 대학 입학 시점, 두 번째 취업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대학 입학 시점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결하는 현상은 대학 입시경쟁률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12.8:1로 비수도권 6.6:1보다 약 2배 수준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표 2-6〉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입시경쟁률(2020년 기준)³³⁾

구분	2020년		
	정원 내 모집인원	정원 내 지원자	경쟁률
전체	311,001	2,757,054	8.9
수도권	115,754	1,476,560	12.8
비수도권	195,247	1,280,494	6.6

취업 시점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출신 대학별 직장 소재지, 출신 학교 소재지와 근무지 현황 비교 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닌 경우 88.3%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닌 경우 비수도권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확률이 59.3%로 파악되어 대학소재지와 일자리 일치 확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 바 있다. 나아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육받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 또한 40.6%로 나타나, 지역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취업 시기에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33) 서동용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표 2-7〉 수도권 및 비수도권 출신 대학별 직장 및 출신 학교 소재지·근무지 현황 비교³⁴⁾

대학소재지 \ 근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88.3			11.7			
비수도권		40.6			59.3			
대학소재지 \ 근무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서울	61.0	25.0	0.9	6.5	1.9	4.2	0.4	
경기	46.2	44.4	0.8	4.7	1.3	2.3	0.4	
강원	34.7	24.4	29.0	7.2	1.6	2.7	0.5	
충청	30.5	25.2	1.2	37.2	1.9	3.7	0.4	
전라	18.6	12.9	0.6	9.3	54.1	4.0	0.5	
경상	19.6	10.5	0.7	5.6	1.4	61.3	0.5	
제주	19.4	7.4	0.5	2.6	1.6	4.0	64.6	

지역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더라도 취업 시기를 계기로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은 첫째,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을 가능성, 그리고 둘째, 지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일자리와 다른 종류의 일자리 공급이 많거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 규모의 감소에서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인재가 유출됨으로써 지역의 활력과 경제 성장에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교육 생태계 활성화는 지역산업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한 최근 선행연구들은 첫째,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공 사회 기관으로서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 둘째,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셋째, 지역의 평생교육원으로서 대학의 역할 부각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 문제를 살피은 경향이 있다.

34) 서동용 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표 2-8〉 대학-지역 관련 정책기조, 관련 사업, 성과와 한계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혁신을 주도하고 창조하는 다핵경제권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지방대학 육성 사업 본격 추진	지역 글로벌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에 시장과 기업의 역할 강조 지역의 경쟁력 강화 추진 국가 차원의 경제적 효율성 증시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 지역사회 발전 문제에 초점: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지방대학 육성 추진	국가균형발전 추진 및 정책 위상 강화 지자체-대학-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기반 정책 지역소멸과 인구유출 방지 정책과 연계
정책 사업	1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사업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NURI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사업 수도권 및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BK21 플러스 육성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대학(수도권, 지방) 특성화 사업(CK-Ⅰ, Ⅱ)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RIS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권역별 집중 지원 확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추진 및 향후 정부 정책에 영향	대학 자율성 확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수월성·효과는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기반 확충	기존 재정지원사업 통합·확대 추진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 법률 제정 대학 정원 감축 추진으로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노력 ◦선택·집중 원칙, 지역대학 특성화 유도	지역대학 균형 지원 추진 지역인재, 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대학 간 혁신 플랫폼 체계 도입 평가와 경쟁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강조
한계	대학별 차별화 부족 지역사회 경제 효과(취업 등)와 연계 부족: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지역사회 복무 경향 등의 성과 부족 재정지원 중복, 계열 간 지원 불균형	선택·집중 강화로 수도권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지방 군소규모 대학의 격차 심화 지역 균형적 재정지원보다 양적 지표에 의한 평가(정책유도 효과 미흡)	대학-지역연계 미비, 기업 연계를 더 중시 수도권대학 편중 지원, 일괄평가 및 학교특성 고려 부재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연계된 재정지원사업 추진으로 특성화 상실	중소도시 사립대학에 대한 소극적 지원, 관심 부족 지역혁신 사업의 구조적 한계 발생 (소외지역 도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 한계대학 관리 전략 추진 요구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p.36 재인용

라. 교육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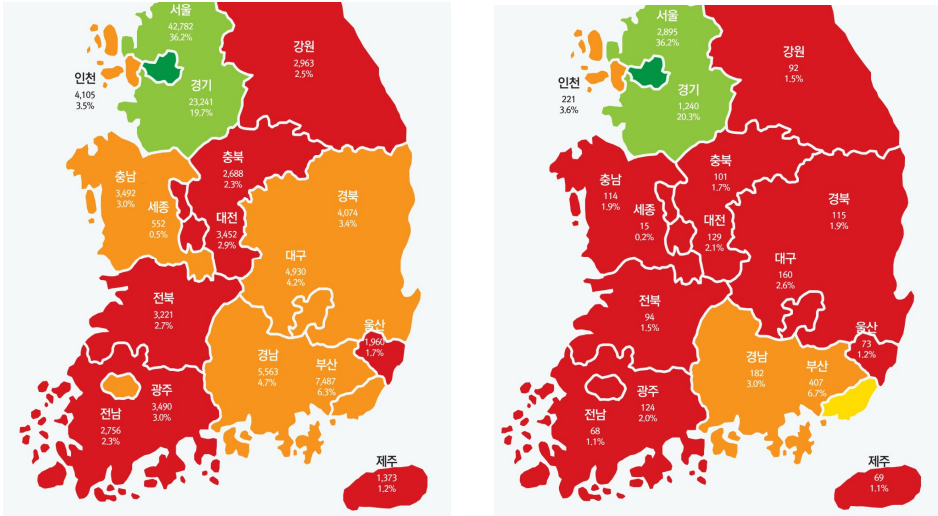
지역 대학의 위기는 인구감소 다음 차원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로도 심화된다. 한국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김석호 외, 2017)³⁵⁾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꿈은 개인적이고 소박하기보다, 세속적이고 관계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바라기보다는 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관계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시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청년층의 욕구는 수도권 이동의 일반적인 추동력이 되고 있다. 즉,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원인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단계에서만 아니라, OECD(2018)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과 취업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집중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원, 2020). 예를 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4차 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에 한정된 경우에도 전체 일자리의 59.4%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만 36.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사업체 또한 수도권 분포 비중이 71.4%, 그 가운데 서울에만 47.5%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 또는 지역문화와의 정책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인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나 일자리의 분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5) 김석호 외(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제 24권, p 322

[그림 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포와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체 수 분포³⁶⁾



자료: 서동용 의원실 (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참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 분포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체 수 분포 자료는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를 재구성함

2. 문화 분야 고등교육의 위기

가. 문화 분야 교육과 일자리의 간극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 중 하나이다. 다만, 특성상 국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기반한 업종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히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렵다. 일자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종사자는 2021년 9월 기준, 약 93만 8천 명 규모로 추정되었는데³⁷⁾, 문화산업·콘텐츠 분야로 국한하더라도 전국 사업체의 약 33.3%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까지 주요 7개 시에 23.2% 분포하였으며, 전체의 약 12.8% 정도의 사업체만이 10억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었다³⁸⁾.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 월평균 임금은 약 388만 원 정도였다. 그 중 임금 수

36) 서동용 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 2021.10.20

3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2021년 11월호(KCTI-INFO 203호).

38)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준이 높은 분야는 방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순이었다. 숙박업 월평균 임금이 약 252만 원으로 가장 낮고, 이어 창작·예술·여가 관련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스포츠 및 오락업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업종 간 일자리 상황과 조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³⁹⁾.

[그림 2-7] 문화예술관광 분야 평균 임금(2021년 8월 기준)⁴⁰⁾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 DB 연계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이기준 외,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교육부 및 정부 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 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계열은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공공 DB 연계 취업률 조사의 적절성 진단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예술계열 학과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술활동지수(가치)’를 각종 평가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예술활동 학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부득이 취업률을 기반으로 학과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세청 DB를 연계하여 직장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된 졸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에서는 인정받는 졸업자가 많지 않다. 예

3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2021년 11월호(KCTI-INFO 203호).

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2021년 11월호(KCTI-INFO 203호).

예술계열 졸업생이 주로 종사하는 예술 관련 직업군은 일반 직업군과는 달리 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1년부터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개인창작활동종사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1년 당시 교육부에서는 예술계열 학과 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을 제정한 바도 있다. 각 대학에서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심사 후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인정기준에 합당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해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 및 교수들의 인정 항목과 인정기준이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인정기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가 쉽게 빠질 수 있거나, 최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웹툰, 웹소설 등)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 교과활동, 특기적성활동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예술 강사 등을 통한 강사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인정 항목이 없다. 공연과 전시의 경우 장소 중심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는데, 거리예술 및 각종 예술제와 비엔날레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장소 기준에 더해 발표 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예술대학의 취업 문제는 예술 종사자를 직업인으로 보지 않는 사회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일반적인 ‘노동’ 형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예술 작업은 보편적으로 ‘일’로 인식되지 않아 온 역사가 길고, 이 과정에서 예술인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특징은 보험, 대출 등의 보편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고, 활동의 경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예술 노동시장의 특징은 크게 단기고용, 저임금, 고전문성과 높은 업무 만족도 등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은 자아 성취, 보람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전통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경제적 보상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특히, 산업화가 어려운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창작활동 초기에는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복지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예술가 또한 다른 직업인들과 다르지 않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예술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예술 종사자들은 자신을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정의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인다(이강진, 2015). 특히 예술 종사자의 경우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예술인 스스로도 내리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예술인의 정의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정의로, 저작물 보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 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를 거친 실적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예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순수예술을 하는 예술인에 방점이 찍혀 있어 현장에서는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다.

나. 문화예술 관련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점에 비추어, 문화예술 분야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예술대학은 ‘실기’에 치중한 교육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들은 “대중에게 작품을 판매하여 몸값을 높이고 명성을 높이는 구조의 엘리트적인 예술계 현장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외의 창작자가 되는 길은 없는 것처럼, 혹은 실패한 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엘리트적인 예술계에 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술대학은 다양한 진로의 길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이런 교육 속에서 예술대학생 스스로 또한 엘리트적인 예술계 현장에 서지 않으면 예술계 일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예술계 밖의 일원이라고 여기게 된다⁴¹⁾.

전업 예술가 외에도 기획, 경영, 정책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등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는 부족하고 다양한 인접 분야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계발 여건 또한 미비하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학 진로 및 커리큘럼 관련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대학생은 졸업 후에 문화예술직 종사를 희망한다고 94.3%가 응답했으며, 이에 따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 이상이 응답했다. 하지만, 순수계열 학생 중 커리큘럼에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0.9%, 11.8%이며,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 17.8%, 커리

41) 박선아(2020), “이제까지 이런 예술대학 교수와 예술대학은 없었다”, 포스트예술대학 포럼 결과 자료집

컬럼에 불만족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학생이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스킬 위주의 도제식 교육에 대한 불만”, “학생의 의견과 시대를 반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동시대 예술과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커리큘럼과 도제식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제식 교육이 폐쇄적인 예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사사하는 교수는 학생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라인이 형성되어 이 라인 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며, 여기서 벗어나면 전통적인 예술계에서는 자리 잡기 어려워진다. 예술중-예술고-예술대학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예술 교육 특성상 학생들은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우며, 처음부터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로이 진입하는 것도 어려워 예술계가 점점 고립된다.

예술대학을 졸업한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회’다. 음악 분야에서 청년 예술가가 일자리를 찾는 경로 중 교수, 선배 등과 같은 지인의 소개가 70.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선배나 교수에게 기대어 예술대학 안에서 맴도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예술대학의 영향 밖의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예술계에서 작가로 생활하는 경우 공적 지원에 참여하게 될 확률이 다분히 높은 데에 반해,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 전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예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등에 대한 정보 연계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순수 예술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한 결과, 전공 교과목의 비율이 높고, 응용 교과목의 비율은 낮아 예술대학의 목표가 순수예술인 양성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 응용 교과목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음악 분야는 전공 교과목의 중심에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추세로도 파악된다. 무용 분야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나 공연 기획, 예술 단체 및 극장 경영 등 기획과 경영 쪽의 응용 교과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현장 실습도 문화예술 현장 직무체험 및 산업체 실습 등 무용 및 예술 인접 분야 직업과 연계된 방식의 교과 사례를 보인다. 국악 분야는 사실상 전통 예술이 전수되는 목적으로 학과, 전공이 개설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예술대학 커리큘럼에서도 전반적으로 콘텐츠 제작 및 창업 관련 응용 교과목의 개설이 증가했다는 보고

가 있으나, 기초 지식 학습을 위한 이론 교육이 부재했으며,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상담 과목이 없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술 인접 응용 교과목을 가르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된다.

문화예술 융복합 전공은 다른 전공과 다른 성격을 보인다. 융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문을 융복합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및 인접 분야를 접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공생들은 여러 전공의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융복합전공은 전공 개설부터 다소 실용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순수예술 전공생 중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거나 예술 인접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전공과 달리 융복합전공은 여러 전공의 교과목을 필요에 따라 교차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순수예술전공 응용 교과목에서 나타난 개설 과목 부족 및 전문 교수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예술대학이 창작에 대한 지원이 풍부한 것만도 아니다. 예술대학은 창작 능력을 위한 기술(스킬) 습득을 중점으로 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학은 취업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취업과는 거리가 먼 ‘예술인 양성’이라는 첫째 목표를 전제로 해왔던 예술대학은 이와 같은 인식 안에서 혼란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성을 띠는 예술인들에 대해 대학 기관은 창작에 대한 재원적 지원에도 방어적인 측면도 있다. 예술대학의 등록금 대비 적게 책정되는 실험실 습비, 열악한 작업공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전시나 공연 행사 등은 대학에서의 창작에 있어 언제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결국 현재 예술대학의 교육은 진로 및 커리큘럼 등에서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학생들의 욕구와 유리되어 있으며, 대학은 예술계 관련 기관이나 기업 대상의 취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와중에, ‘예술인 양성’이라는 첫째 목표를 전제로 하여 두 전제가 충돌하면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듯 보이며 이에 따라 대학의 직업능력 교육에 대한 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⁴²⁾.

예술대학이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 대한 커리큘럼이 부족하며, 졸업한 이들

42) 서지민(2020), “예술대학 내 직업교육의 필요성”, 포스트예술대학 포럼 결과 자료집

이 이후에 전통적인 예술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줄리어드 음대의 1994년 졸업생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졸업하고 10년 후에 대해 살펴본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서 줄리어드 음대 동문 중 적지 않은 수가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 속해 있거나 비정규직 연구자로 음악계에 종사하는 등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⁴³⁾.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Strategic National Arts Alumni Project(SNAAP) 설문조사 데이터는 예술 학교 졸업생들이 재학 중 사업적, 재정적 부분에 대한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중 하나인 직업적 기술은 전통적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대신 지역 예술 기관, 예술가 중심 조직 및 네트워크, 동료 및 멘토,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교육에 의존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와 동시에 예술 학교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고등교육 동안 수행된 특정 활동 - 네트워크 구축 및 예술 기반 인턴십 수행 등 - 이 직업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NAAP, 2020). 즉, 고등 예술교육의 존재는 필요하며 이 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직업으로서 예술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문화 분야 고등교육과 지역사회

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예술대학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활로 또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문화, 예술은 실제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계는 점점 사회와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 바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자본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도태되거나, 시장에 내놓을 경쟁력을 갖춘 작품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대학이 예술의 범위를 엘리트적인 예술계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한다면, 현재 지역의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예술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되살리

43) 장웅조(2017), “예술교육, 그 후 SNAAP”, arte365 (<https://arte365.kr/?p=61680>)

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⁴⁴⁾.

유럽에서는 문화, 예술 및 창의성을 유럽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VOC brainstorming report). 예술가들과 다른 문화 및 창의적 노동자들은 실제로 혁신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 공유하고,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며, 변화를 위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로 인식된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치적, 법적 이유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작업 모델과 관행을 수용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그중 하나가 지역사회에의 참여다. 예술가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를 지원할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예술적 자유에 대해 보고하고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유럽 또는 국제 조직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또한 자국의 도전에 직면한 예술가 및 문화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과 지역사회는 이처럼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대학에서 예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술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 교육이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학 자체에서도 예술의 사회적 맥락을 짚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술대학의 교수들 또한 전통적인 예술계 이외에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생에게 필요한 길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나. 문화 분야 고등교육 과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 예술대학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한

44) 이무열, “[지역의 발명] @ 지역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지역”, 생태적지혜(2022.03.11.)
<https://ecosophialab.com/%EC%A7%80%EC%97%AD%EC%9D%98-%EB%B0%9C%EB%A%85-%E3%89%92-%EC%A7%80%EC%97%AD%EC%9D%84-%EC%9C%84%ED%95%9C-%EC%98%88%EC%88%A0-%EC%98%88%EC%88%A0%EC%9D%84-%EC%9C%84%ED%95%9C-%EC%A7%80%EC%97%AD/>

예술대학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대학의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에는 선배나 교수가 제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예술가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현장 안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찾아갈 것이다. 그 연결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은 학생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⁴⁵⁾.

또한 지역사회는 공익적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를 자주 호출해 왔지만, 예술인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학생들에게는 자격 요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회를 학생에게도 열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학은 이 지점에서 거점 지역과의 연계를 담당하며, 다양한 활동과 지역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대학은 예술적·학술적·산업적·문화적 패러다임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학이 갖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관행을 먼저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이해도 필요하다. 단순한 일회성 협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Comunian, R., Gilmore, A., & Jacobi, S, 2015.).

45) 이채원(2020), “예술이 지역의 문턱을 넘어 설 때”, 포스트예술대학 포럼 결과 자료집

제3절 지역과 대학의 협력

1. 지역의 변화

가. 새로운 문화와 지역 가치의 부상

최근의 드라마, 영화, K-pop, 클래식에서 국제적 수준의 문화의 부상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시선, 관심과 욕구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발전과도 매우 관계가 깊다.

문화 분야 트렌드 연구⁴⁶⁾에 따르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개성과 다양성, 인권과 정체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국가 성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대규모, 대량생산 체제보다 개인화, 마이크로화 된 서비스 형태가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나 조직과 같은 거시적인 단위보다는 개인과 같은 더 세밀한 단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욕구의 중심에 '남과 다른' 특색있는 문화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성 있는 문화는 청년, 그리고 청년들의 거점인 대학과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대학가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이 입고 먹고 향유하는 친환경, 유기농, 비건, 인디, 빈티지와 걷기 문화, 키보드, 자전거 등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트렌드 최극단에 있다.

모종린(2017)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서울 흥대를 중심으로 한 마포 지역처럼 대학들

46) 차민경·김소연·김인설·연수현·유은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밀집된 지역은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얼리어답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잠재성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단위지역의 문화와 산업 인프라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무엇보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포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지역 정체성을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이 심한 수도권과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에, 지역과 청년의 거점인 대학과 대학가의 연계는 지역문화를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나. 지역 활력과 지역문화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남과 다른' 지역문화는 향후 지역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을 견인할 만큼 중요해졌다. 이는 '로컬리티(locality)를 구성하는 지역성, 지역 정체성 그 자체가 도시나 지역의 브랜드가 되는 수준을 넘어, 지역과 국가 성장을 이끌 만한 글로벌 브랜드의 창출을 실제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모종린, 2017)'.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모종린 교수는 행정단위로서 접근하는 지역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 '골목길 자본론'을 주장하였는데, 글로벌 자본 경쟁력의 핵심은 골목길에 있다는 것이다. 개성 있고 창의적인 소상공인들과 지역 활동가, 창조 인재들이 골목상권에서 만나 공동체 문화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문화자본이 축적되고, 글로벌 파괴력이 큰 산업과 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5년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온 바 있다⁴⁷⁾. 이는 지역경제 진흥을 목표로 하기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높고, 골목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자연, 건물, 문화재, 전통, 개인적 재능 등)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역문화와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 주도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골목 특성과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47)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2015),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훨씬 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골목길은 한 가지 사례이고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특성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조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활력과 지역문화에 있어 예술인이나 예술 단체, 또는 문화산업을 구성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만이 아니라,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 공공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하다(임학순, 2021). 향후 지역의 인구감소 속도가 현재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지역은 생존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고 소비하는 청년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위기는 결정적으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들과 지역대학 간의 협력 체계와 가능성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것 역시 지역문화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2.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의미

가. 지역 대학의 기능 및 역할

김이수⁴⁸⁾에 의하면 대학의 기능은 크게 교육, 연구, 사회봉사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지식기반의 확산을 통한 교육(teaching)이다. 과거 대학의 교육 기능은 지역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역적으로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창출하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연구(research) 기능이다. 대학은 학술공동체를 위한 기초지식의 생산을 강조한 나머지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존 지식의 활용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이 그들의 연구 기반을 상업화하고 그들의 연구와 전문성을 외부환경과 더 밀접하게 연계시키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대학의 제3의 역할로서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 기능이다. 이는 교육, 연구 이외에 대학의 제3의 역할(third role)로 인식된다. 대학의 제3의 역할은 지방공동체의 핵심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문화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

다시, 김이수⁴⁹⁾는,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유형에 있어, 지역발전 또는 지역혁신

48) 김이수(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간 협력에 관한 연구-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117

(regional innovation)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대학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자로 간주된다. 즉 지식 공장(knowledge factories)으로서 확산(spillover)의 형태로 지방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과 산업체 간 연계로서 이는 관계적(relational) 또는 협력적(collaborative) 역할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과 대학 간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쌍방향적 연계와 과정을 중시한다. 셋째, 대학 연구의 상업적 활용(commercialization)으로 대학의 기업가적 성격을 대변하는데, 이는 기술이전 조직, 과학 단지, 법적 장치, 인센티브 구조 등과 같은 대학의 조직 기구(organizational arrangements)를 통해 촉진된다. 넷째, 혁신 체제론적 접근으로서 경계 확장적인 제도적 결절점(boundary spanning institutional nodes)으로 대학을 바라보는데, 이러한 결절점의 영향력은 특정 지역혁신체제에 의해 변화된다는 전제를 지닌다. 다섯째, 좁은 의미에서 기존 4가지 역할에 나타난 혁신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대학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developmental role), 위에서 본 대학의 기능 중 제3의 역할로서, 대학이 입지하는 지역 경제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간주된다.

즉, 대학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 유통을 통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기능이 단순히 ‘대학’이라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 조직 혹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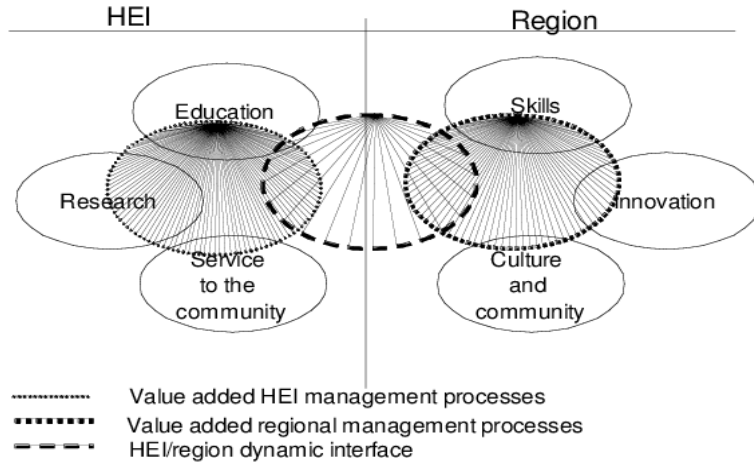
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자원 및 조건

고다르 외(Goddard JB, Chatterton P, 2003)⁵⁰⁾에 의하면 대학의 교육, 연구, 지역 서비스는 지역의 기술, 혁신, 문화와 공동체와 교집합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49) 김이수(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간 협력에 관한 연구-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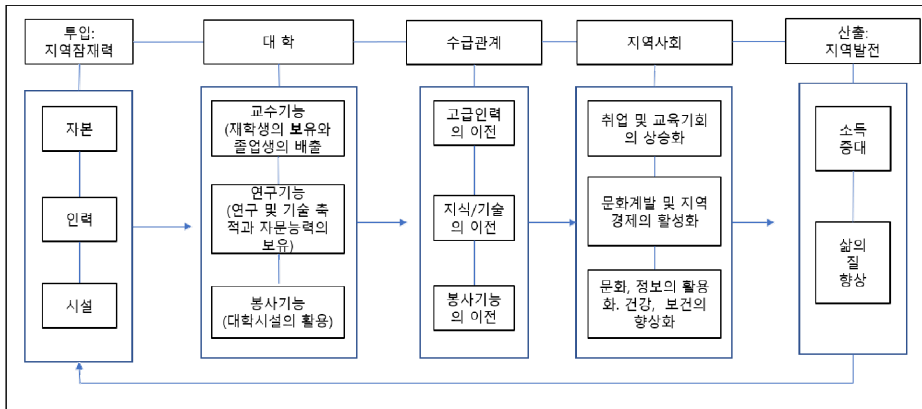
50) Goddard JB, Chatterton P.(2003), "The response of universities to regional needs", Economic Geography of Higher Education: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Learning Region, Routledge: London (Ed. Rutten R; Boekema F; Kuijpers E), p.482

[그림 2-8] 대학과 지역 다면적 연계의 형태⁵¹⁾



국내 상황에 이를 비추어보면, 박영한(2001)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지역의 결합을 지역 잠재력으로서 자본과 인력, 시설을 기반으로, 그리고 산출물로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발전으로 도식화하기도 하였다.

[그림 2-9]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⁵²⁾



이러한 결합을 위해서는 대학의 어떠한 자원과 역량이 지역에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에 대한 협력을 통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⁵³⁾ 발전에 대학의 역할이 크

51) Goddard JB, Chatterton P(2003)

52) 박영한 외(2001) 대학과 지역발전: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6권, 4호, 대한지리학회, p. 421

53)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 107

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대학 또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혁신⁵⁴⁾의 핵심 전략은 네트워킹, 상호작용, 학습, 혁신, 역동적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지역혁신은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협조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을 생활화하며, 이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역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박보근(2008)은⁵⁵⁾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기능과 역량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6가지는 첫째, 산업화에 대한 기능,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개발 기능, 셋째,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 기능, 넷째, 생산 기반 조성 및 경제조직의 개선 사업에의 참여 기능, 다섯째, 사회교육적 기능, 그리고 여섯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들고 있다. 한편 박보식(2008)은 대학의 자원을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제도 및 조직자원’으로 구분하여 지역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표 2-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자원의 활용 분야⁵⁶⁾

구분	내용
인적 자원	교수, 연구원, 대학생, 사무직원
물적 자원	일반 및 전문시설(실험실습실 등)
제도 및 조직 자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 사회교육 프로그램, CEO 강좌 등

이 가운데, 물적 자원 관련하여서는⁵⁷⁾ 대학에 존재하는 학습 공간 등 각종 설비 및 시설로서 운동장, 체육관,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등의 일반 시설과 도서관 열람실, 어학 실습실, 실험실, 방송실, 전자계산소 시설 등의 전문시설 및 각종 실험 실

54)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 105

55)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 108

56)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 110

57)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p. 110

습 기자재를 지역 주민이 지역단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혁신 차원에서 지역과 대학의 연계

지역대학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주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역할은 비단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이였다(박보식·사득환, 2008; 박종관, 2011; 김종성, 2019에서 재구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역 대학은 이제 인재 양성, 고용 창출, 조세 납부,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발전 측면을 넘어, 더 융합적인 지식 생산에 기여하고, 지역 기반의 경제 성장,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과 같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발전을 위한 역할, 지역혁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대학과 지역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이기도 하다(전재식, 2015; 퍼블릭누스, 2021; 모종린, 2017에서 재구성). 지역 경쟁력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설명력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는 시애틀과 스타벅스, 영국보다는 에든버러와 해리포터, 독일보다는 베를린과 테크노 음악을 더 먼저 떠올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대학들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산업과 협력관계를 아직까지는 잘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전재식, 2015).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관계는 다음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Boucher et al., 2003; 안영진, 2005; 김종성, 2019에서 재인용). 첫째, 국가 분권화 및 지방화 수준,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경제발전 수준, 셋째, 개별 대학의 성격과 유형, 넷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다.

〈표 2-10〉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협력관계 주요 결정 요인⁵⁸⁾

구분	주요 내용
국가 분권화 및 지방화 수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간 불균형의 조정과 시정 등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경제발전 수준	지역 불균형 시정, 경제·생활권역에 대한 고려 등
개별 대학의 성격과 유형	대학 간 역할 분담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도·행정·재정적 인프라 등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은 혁신의 전제가 학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혁신은 ‘학습을 통해 지역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을 집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Cooke, 1998; 박보식·사득환, 2008에서 재인용). 이로써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산업과 관련한 동력, 인력, 평생교육, 시민교육, 필요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20).

이것이 곧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은 그것이 ‘산학협력’, ‘균형발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혁신의 주요 주체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퍼블릭뉴스, 2021).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 방안’⁵⁹⁾으로 지역혁신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 방안(2020)

1. 대학은 교육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시민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2. 대학은 R&D 플랫폼으로서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동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대학은 사회 공헌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기능을 다해야 한다.

58) 김종성(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30(3), pp. 69-91. 내용 재구성

59)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0),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방안, 한림원의 목소리 제 87호

[그림 2-10] 대학 연계 지역혁신 네트워크 대안⁶⁰⁾



대학과 지역의 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김태현 외, 2015)에서도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 바 있다⁶¹⁾. 이러한 사례는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제시된 바도 있지만, 관련하여 지역문화 분야에서는 이 중 A와 B가 기초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책적 도입에 있어서는 C 정도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

대학과 지역의 협력활동 유형(2015)

- A유형: 쇠퇴·낙후지역에 기반 시설 확충하고 커뮤니티 활동공간-시설 제공
- B1유형: 주민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지역 교육환경 개선,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B2유형: 당면 문제 해결 도와주고 학생의 지역 이해도 높여 도시 재생에 이바지
- B2유형: 대학생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교육격차 줄이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C유형: 대학 재정·구성원의 구매력 적극 활용해 지역재생 활성화에 이바지

또한 서울연구원(김태현 외, 2015)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간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0)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0),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방안, 한림원의 목소리 제 87호,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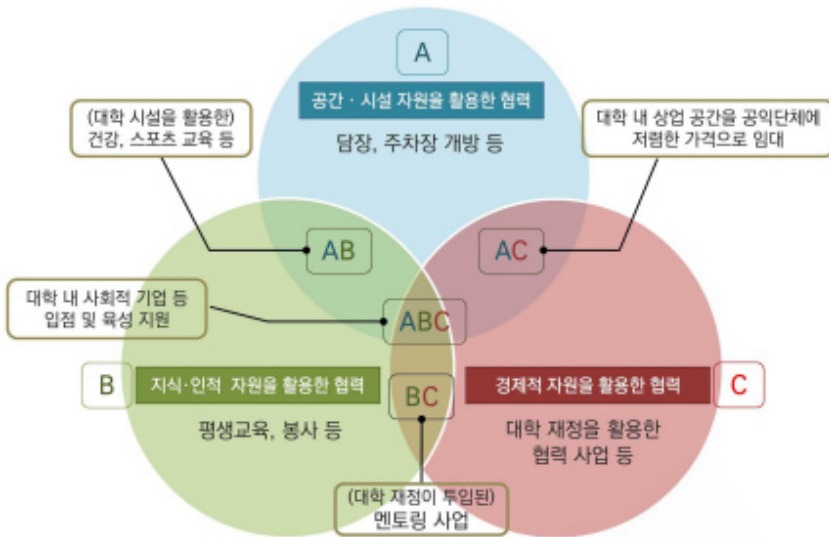
61)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p 7-9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 간 역할(2015)

- 중앙정부: 대학 지역공헌 의무 법제화하고 적절한 규모로 재정 지원
- 지방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하고 체계적 관리 위한 전담조직 설치
- 대학: 총장 등 고위층의 의지 중요하고 협력 전담조직도 설치 필요

중앙정부의 역할로 고등교육법상 지역 공헌 의무를 주요 역할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에서 지역공헌 점수화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외에도 교육부, 대학보다도 우선적인 행정, 예산에서의 주도권 부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2-11] 대학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별 대학-지역사회 협력 활동의 도식화⁶²⁾



62)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27

〈표 2-11〉 대학의 주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통한 이익과 기여 자산⁶³⁾

구분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의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대학	공공부문	기타 참여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자원 이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상 및 경험적 연구 기회 •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형성 및 주변 환경 개선 • 향후 펀딩 수령 가능성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제 해결 • 지역민들의 복리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향상 • 소속 단체의 이익 향상 • 이미지 개선
기여할 수 있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적 지식 •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 • 정치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시설지원 • 지식·인적 자원 • 경제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정치적 권한 • 재정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 • 지적·인적자원

63)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21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제3장

대학 및 지역의 정책 연계 사례

제1절 대학 및 지역 연계 정책

1. 대학과 지역의 정책 연계 배경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대학-지역 관련 정책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로 실행되었다⁶⁴). 정부별 정책 기조를 반영한 대학-지역 관련 정책사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창조형 발전, 다핵경제권 조성,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하에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1단계 연구중심대학(BK) 사업(1999~2005년),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이하 NURI 사업)(2004~2008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2004~2009년) 등이 추진되었다(교육부, 2018:2). 이상의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연구중심 우수대학, 지역혁신 클러스터,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과학기술 분야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격을 확대하였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BK) 사업(2006~2012년), 수도권 및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2008~2014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 이하 ACE 사업)(2010~2016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사업)(2008~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이하 LINC 사업)(2012~2016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포물러 블록 펀딩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전략적 재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3.18.). 특히 LINC 사업을 추진하여

64)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12, p. 32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과 대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현재의 LINC+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연구, 산학, 교육 관련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계승·진행하였으며,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사업의 후속인 BK21 플러스 육성사업(2013~2020년), LINC 사업과 그 후속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2017~2021년),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2014~ 2018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하 PoINT 사업)(2013~2017년) 등이 있었다(교육부, 2018:2). 특히 CK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개편·신설한 것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I)과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II)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통합·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대학 육성방안」(교육부, 2013) 중점과제⁶⁵⁾ 달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원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년)으로 개편하고, 39개 전체 국립대학을 지원하여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강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다. 2019년부터는 국정과제(52-2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대학의 총체적 혁신과 기본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학이 지역 위기 극복의 기초이자, 지역혁신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이하 RIS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였다. 각 지역의 핵심 분야와 지역대학, 지역혁신기관(교육 지자체, 기업, 공공연구소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성하였고, 2020년 7월, 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공유대학, 지역산업·클러스터 연계, 지역 초·중등교육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65)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5대 과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 및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음

2. 지역과 대학 연계 정책의 시사점

가.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정책에서의 주요 방향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연계 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 중앙정부의 투자 방향 재설정⁶⁶⁾: 중앙정부의 모든 고등교육 투자 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대학, 혹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투자 여건 개선⁶⁷⁾: 고등교육 투자 정책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유롭게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와 제한을 폐지·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법적 개선 대안을 개발·적용하는 방향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행·재정 권한 이관, 관련 지방재정제도 및 지방예산제도 등의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대학-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 강화⁶⁸⁾: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주민과 민간을 대상으로 대학이 보유한 여러 다양한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대학은 지역의 문화 전승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학은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고등교육·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대학은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 창출·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 및 기관 등에 지식과 정보를 전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
- 지역 대학⁶⁹⁾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협력이 필수

66)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12, p 183

67)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12, p 184

68)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12, p 185

69)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12, p 186

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투자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지역 의회, 시민단체, 언론, 학부모 및 학생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 대학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으로(가칭) '지역대학협력과'를 신설·운영할 수 있다. 이 전담조직의 사무를 통해 지역 대학 투자에 관련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대학 내에 지방정부와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제안한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직접 통로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직접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지역대학 일반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에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입체적으로 예산, 행정, 관심, 평가 등 다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에 앞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형식적인 관계로서의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보다 참여하게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인

지역발전에 대학이 연계되는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갖춰야 하는 요인들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2019)에 의하면 지역발전⁷⁰⁾에 대한 대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학과 지역 거버넌스,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
- 대학과 지역 연계에 대한 역사와 특징
- 대학의 연구 강점과 지역 지식 수요 사이의 일치 정도
- 챔피언의 존재와 영향력
- 지역 특정 경제 여건의 영향력

구보고서 RR 2021-12, pp 202-203

70) 서연미 외(2019),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연구, 기본과제 19-39, 국토연구원, p.23

- 지역 네트워크의 존재와 유형
- 지역 산업기반의 특성과 성격
- 지방정부의 참여 정도
- 지역 분위기와 문화, 지역 정체성
- 대학 간의 경쟁 정도
- 중심-주변부 구분으로 본 지역의 유형
- 지식 인력의 사회적 형태
- 학생 이주 형태와 지역 노동시장 역동성

2) 주체별 역할과 개선 방향

특히 ‘대학’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 자체의 기능, 역할과 문화가 매우 다르기에 ‘지역’과 ‘대학’ 이전에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능적 연계라는 부분을 이루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를 통해 몇 가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애로사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아가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문화 관련 민간·공공 단체,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애로사항을 문제로 다수 제기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⁷¹⁾ 협력 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이 애로를 느끼는 영역별 순서로, 1위는 지자체 매칭 사업 운영 시(3.9), 2위는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3.7), 3위는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3.6), 4위는 인건비 및 대학 간접비 책정, 활용(3.3), 5위는 예산심의·회계·감사·컨설팅(3.2) 순으로 나타남
- “지자체⁷²⁾와 협업 사업은 주로 사전 협의로 사업 과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참여 주체와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당장 실현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요구가 크고, 대학은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워 인한 의견 충돌과 예산 삭감이 종종 발생한다. 아울러 지자체 사업의 경우 대학의 요청에 의하다 보니, 도의회 등에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원래

71) 송창용 외(2021),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251

72) 송창용 외(2021),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251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공유대학 구축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사 유연화를 추진 하되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을 중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공유대학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의 필요성이 높는데, 아직은 대학별로 인식과 제도적 차이가 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중 이수제, 유연학기제, 방학 중 실습학점 인정 등 학생들이 실익을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함

〈표 3-1〉 지역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 주체의 역할⁷³⁾

구분	역할
지역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산업체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이전, 기술이전 사무실 설치 ◦ 발명, 특허 출원 및 발행, 라이선스, 스타트업,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등 지원 ◦ 대학-지역 선순환 형성을 위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연구 활동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한 학생-교직원 등 다양한 대학의 인력 자원 제공 ◦ 지역사회 주민에게 추진하는 실천적인 사회교육과 사회봉사활동 추진 ◦ 학생 유치와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 캠퍼스와 시설 개발 등 지역 시민 교류 지원 ◦ 지역의 각종 사업 조연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자 역할 ◦ 전문가 집단(교수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아젠다 발굴 및 제시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협업과 사업 추진: 다문화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교원 글로벌 연수, 지역 주민 외국어 능력 신장 등 ◦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관련한 교육청과 상생발전 ◦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유능한 교수 확보 및 역량 강화) 제공
일반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역 핵심 산업 선도 ◦ 지역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역 내 취업·정착 유도, 정규직 채용기업 발굴 ◦ 국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 대응, 국비 확보로 경쟁력 제고 ◦ 대학 투자 및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촉진, 대학의 산업전진기지로의 변화 지원 ◦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의회 설득 및 동의 요청 ◦ 중앙정부 사업공모 시 대학과 공동 지원, 예산 반영 및 지방비 대응 투자 결정 ◦ 협력사업 성과의 지자체에 대한 영향 검토 ◦ 인구 유출 방지 및 증가 노력(지역 학생 인구 늘리기 사업, 해외 유학생 공동 유치 추진) ◦ 학령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지역 공동위기 인식 강화 ◦ 지자체 재정 여건과 고등교육 투자 가능성 확대 ◦ 산·학·연·관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재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의 학업 포기 방지 ◦ 지역 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의 지역대학 가기 캠페인 추진 ◦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의 타당성 문제 해결 ◦ 안정적 산업구조 개편, 고용과 실업률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소비 효과, 지출 효과), 지역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 도출

73) 김태준 외(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김종성 등(2019)은 단례로 “지원방식⁷⁴⁾에 있어서는 우선 인프라 중심의 기존 포물러 방식보다는 사업계획의 내용,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실장급의 인사가 각 지역대학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타 지역의 대학교수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3. 문화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 연계의 필요성

가.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지역과 대학이 연계되는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신학연, 지역-대학 연계 사업들에서 문화예술 혹은 인문계열은 매우 드물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인문계열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대표하는 것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기본계획’을 통한 정책이 있다. 이를 통해서⁷⁵⁾ ‘대학생-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우수학자 단계에 걸쳐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상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연구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대학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도 추진되어 왔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의 목적⁷⁶⁾은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 내에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연구 체제를 확립하고 (중략) 인문-한국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대학연구소의 인문학적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안으로는 인문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연구 및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정도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74) 김종성(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 p.85

75) 문체부·교육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발표 보도자료, 2021.12.22

76) 인문한국지원사업, <https://hk.nrf.re.kr/intro/intro01.do> 검색결과

법률(지방대육성법)과 이에 의한 계획 및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본계획 예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듯, 인문, 문화예술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

〈표 3-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연계 가능사업 예시(교육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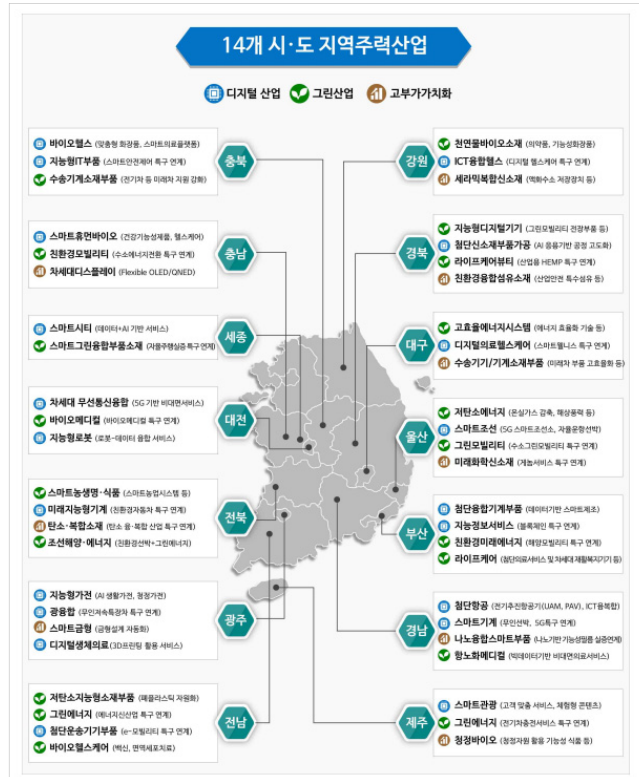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부처	사업명	'20 예산
산업부	1) 지역 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2,900
	2)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088
	3) 지역혁신 특성화기반구축6	56,700
	4)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59,816
	5) 광역협력권산업육성	25,200
	6)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77,501
	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600
	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17,025
	9)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12,920
	10)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19,928
중기부	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6,230
	2)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5,000
	3) 지역특화산업육성(시도기업지원)	73,838
	4) 지역특화산업육성+(R&D)	97,406
과기부	1)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10,500
	2)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13,221
	3)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9,125
	4) 연구개발특구육성(R&D)	115,427
	5)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인프라지원	30,167
행안부	1) 지역혁신포럼	3,700
국토부	1)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2,220
교육부	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0,000
	2) 산학협력 고도화형 LINC+	312,551
	3)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000
	4) BK21+	383,983
	5)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특별교부금)12,000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20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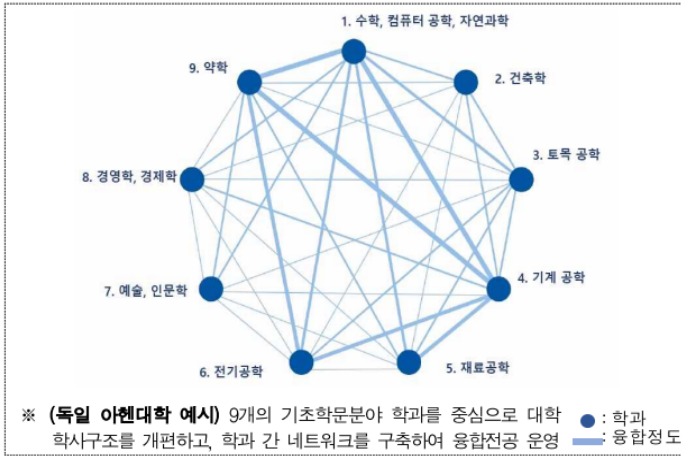
2022년 본 계획의 주력사업에서도 14개 시·도 연계 관련 인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보기 힘들다. 대부분 이공계, 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교육부 자료⁷⁷⁾ 국외 사례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개편에 있어 인문, 문화예술 관련 융합, 연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 지자체-산업 협력 주력사업(교육부,2022)



77) 교육부(20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20.03 발표

[그림 3-2] 교육체계 개편 유형 예시(교육부, 2020)



이 외, 국외 사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우로 김종성(2019)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외국⁷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대학과의 협력에 있어서 대등한 협력과 신뢰를 중시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대학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중시한다. 셋째, 협력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예: 미국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센터, 영국의 지역개발기구 및 지역기업협의회, 일본의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및 시청 대학조정과)을 설치한다. 넷째,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 개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대학 내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지역공헌센터, 자원봉사지원실과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여섯째, 영국에서는 지역대학 주변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주변 지역을 대학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인문, 문화예술 분야가 현대에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후은(2015)은 산학협력, 지역협력에서 인문사회, 예술계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78) 김종성(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 p.78

지79) 이공계열 기술 연구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관점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던 산학협력을 인문사회, 예술 계열까지 확대하고,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관계자,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기업, 학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의 주요 사례 분석 결과, 사례 지역들은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이미지의 개선 등의 유무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 확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⁸⁰⁾ 대학들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지역과의 상호 교류가 거의 없는 상이탑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제3의 임무인 지역사회 공헌 기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준 공공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 사업의 경우, 연구기술개발 성과에 의한 이공계열 산학협력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성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어,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추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학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는 실제적·착근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발의와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역-대학 연계 정책에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예술대 재학 중인 청년들에게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문화재단 토론 집에서는 예술대학생, 예술가의 역할이 현장, 지역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학에서 제안할 수 있는 예술가의 역할이 지금의 범주에 머무른다면, 차라리 예술대학 학생들을 지역의 예술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 지역에는 선배나 교수나 제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예술가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현장 안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부딪히며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찾아갈 것이

79) 장후은 외(2015),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5호, p.524

80) 장후은 외(2015),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5호, p.524

다.⁸¹⁾」

나. 협력을 위한 접목 가능 프로그램

현재 지역문화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러닝’과 ‘캡스톤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의 유사점은 교육과정에서 현장과 접목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시작된 교육과정이고,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LINC 사업에서 적극 도입되며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서비스러닝⁸²⁾

봉사-학습(서비스러닝)은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한다. 1885년에 미국 대학총장들이 자원봉사 결사체인 Campus Compact를 결성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의 하나로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⁸³⁾ 정기오⁸⁴⁾는 서비스러닝 도입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 고등교육에서 급격하게 보급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서비스러닝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통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한 데 있으며 이로써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of 1990, Clinton’s National Service Trust Act of 1993, Serve America Act of 2009, 이 세 법률은 서비스러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학습이나 학습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하고 발달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방법을 말한다.

A. 서비스 요건: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또한 교육기관들이 지역사회나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시민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서비

81) 서울문화재단(2021), 대학만 가면 된다매, 서울문화재단, 포스트 예술대학 공론장포럼에서 못다한이야기, p. 39

82) 진성희(2016), 공학설계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효과, 공학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36

83) 유숙영·서윤경(2011), 기독교대학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기독교교육정보, 제31집, p. 187

84)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189

스

B. 학습프로그램 요건: 학생과 학습자에게 그 서비스경험의 완성을 위한 구조화된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서비스가 학교교육 또는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내용 속에 통합됨⁸⁵⁾

1990년대 이후 연방정책으로 채택된 미국에서의 서비스러닝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서비스러닝에 대한 실천 및 연구상의 접근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기술적 관점 ② 문화적 관점 ③ 정치적 관점 ④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이다.

기술적 관점은 서비스러닝을 교육개혁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학습 성취 면에서의 효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다. 문화적 관점은 자발성 문화, 시민성, 지역사회통합 등 미국적 전통의 강화에 주목한다. 기술적, 문화적 이 2가지 관점은 서비스러닝을 연방입법에 의한 정책으로까지 끌어올린 동력으로 평가한다.⁸⁶⁾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자발성, 시민성,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한 경우를 예기할 수 있다. 또한 A.서비스 요건에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서비스-러닝을 볼 수 있다. 서비스 러닝의 지역과 연계에 대해서는 정기오⁸⁷⁾는 다음과 같이 당연한 귀결이라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필연적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 전달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러닝에서의 서비스란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만족을 위한 경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⁸⁸⁾ 서비스러닝에서의 서비스 경험은 기존의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또는 시장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의 새로운 시장서비스의 창출일 수도 있다.⁸⁹⁾

국내 사례에서는 Y대학교 I대학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해 볼 수 있다. Y대학교에 서는⁹⁰⁾ 이론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 경험 활동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학생

85)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186

86)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189

87)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207

88)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207

89) 정기오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 p.207

90) 진성희(2016), 공학설계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효과, 공학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37

들의 자기 주도적 전공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전공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사회 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⁹¹⁾. 지역사회 경험학습은 2시간의 이론수업과 1시간의 지역사회 경험 활동으로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이수 후 학생들에게는 경험학습 활동 인증서가 발급되고 교수자에게는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험학습은 다양한 전공의 교과목에 적용 가능하다.

I대학교는⁹²⁾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인 JEP(Joint Educational Projects)를 벤치마킹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지역사회 연계봉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⁹³⁾ 서비스러닝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기관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공교과목과 연계하여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역사회연계봉사 1학점에 해당하는 교양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생지원팀은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과제, 성적, 평가 등에 대한 일체 업무는 연계된 전공교과목 담당교수가 담당하고 최종 교과목 이수 여부도 결정한다. 이렇듯 서비스러닝은 학교과정으로서의 중요성과 동시에 ‘지역의 공적 서비스’가 중시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문화 분야에서 공공성 있는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러닝을 관련학과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Capstone)은 돌기둥이나 담 위 등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성취를 뜻하는 단어⁹⁴⁾로 캡스톤 디자인은 무엇인가 건설하기 위해서 돌을 쌓을 때 가장 위에 마지막 돌(capstone)을 얹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학에서 전공과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과 연계하는 최종단계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혹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처음으로 2002년 공학인증제도가

91) <http://ose.yonsei.ac.kr/cbl/>

92) 진성희(2016), 공학설계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효과, 공학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37

93) 최지은·진성희·김학일(2018), 공학중심의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의 교육적 효과, 공학교육연구 vol 21. no.1, p.5

94) 현대자동차(2017), 들어는 봤나? 캡스톤 디자인

<https://young.hyundai.com/magazine/trend/detail.do?seq=17182>

도입되면서 공학인증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⁹⁵⁾

LINC 사업은 2012년에서 2016년에 추진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원래 공학계열에서 도입되었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인문, 경영, 예술계 등 비공학 계열에서도 도입되게 되었다. 이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하 LINC+) 사업이 2017년 시작되고 참여하는 전국의 각 참여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정해지면서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의의로는 ‘대학의 전문적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 접목·활용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다시 대학사회로 환류(feedback)되어 대학교육을 한층 역동적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지역사회 연계형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 현행 대학 교육이 당면한 위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 전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교육’⁹⁶⁾으로 보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육은 지역사회의 각급 기관 및 인적자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때 한층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및 인적자원을 대학교육의 핵심적 영역으로 수용·적용할 수 있을 때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한층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체험과 경험학습을 통한 현장밀착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현장밀착형 대학교육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즉, 한편에서 대학과 지역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AVC: Added Value Creation)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공유가치(SVC: Shared Value Creation)를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⁹⁷⁾

지역사회친화형의 사회공유가치 창출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축을 통한 문화 사업과 관련을 맺는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물론이고 마을 단위의 수익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을 단위의 경

95) 군산대학교(2020), 캡스톤디자인운영매뉴얼, p.3

96) 정용교(2018), LINC+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p.100

97) 정용교·이광동·김보민(2017). 저밀도 주거지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 연구. 대구광역시·영남대학교, p.9

제사회적 공동체 회복은 마을(동네) 단위의 시민성 육성에 도움이 되며 이로써 마을민주주의 실현에도 한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 강좌는 젊은이들에게 잃어버린 마을의 의미를 되살려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착심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떠나는 곳’으로서의 지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서의 지역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⁹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학의 지역에의 역할을 학생의 역량과 결합하여 실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정용교⁹⁹⁾에 의하면 LINC+에서 가능한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 강좌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의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익히며 지역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한다. 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이며 사회공유의 가치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 강좌는 도시재생, 마을문화조사와 마을의 스토리 발굴, 마을 미디어 운영과 홍보,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조성을 위한 디자인 혁신, 사회적 경제 구축, 취·창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¹⁰⁰⁾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 강좌는 다음의 몇 가지 영역에서 대학생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먼저, 지역링크 및 지역전문가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자체, NGO,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의 발굴, 개발을 통한 지역전문가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재조명을 시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캡스톤 디자인 강좌 운영은 현장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밀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에의 일자리 창출

98) 정용교·이광동·김보민(2017). 저밀도 주거지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 연구.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 p.183

99) 정용교(2018), LINC+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100) 정용교(2018), LINC+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p.103

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관, 협동조합, NGO 등과 관련된 캡스톤 디자인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¹⁰¹⁾

연구에 의하면 ‘대학-지역사회 연계형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개별학습이라기보다 조별 내지 팀별협력 형태로 진행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 캡스톤 디자인 강좌의 경우, 수업 설계부터 최소 5명 이상의 학생들로 팀별 작업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수업활동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 때도 제작비 일체를 LINC+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아울러, 마을단위의 성과물 제작은 개별 학생 혼자 힘으로는 그 설계와 제작이 쉽지 않으며, 학생 간 팀 작업을 토대로 사업단 지원금을 받을 때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교수자는 캡스톤 디자인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또 주제 발굴과 과제 진행에도 일정 수준 개입하여 참신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¹⁰²⁾

이를 보면, LINC 사업의 대표적인 방법인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대학생과 대학이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문화 정책 관련 ‘문화도시사업’, ‘유휴공간활용사업’ 등이 지역에서 캡스톤 디자인사업과 연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1) 정용교(2018), LINC+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p.103

102) 정용교(2018), LINC+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pp.103~104

제2절 중앙정부 차원 지방대학 연계 정책

1.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배경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2장(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육성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

연구에 참고하는 계획은 2021년 3월 1일 발표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다. 보도자료¹⁰³⁾에 의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계획 기본 방향

기본 방향은 비전, 목표, 핵심가치 그리고 3대 과제로 제시되는 ‘정책영역 및 과제’로

103)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제시되고 있다. 비전 및 목표는 지방대육성법의 기본적인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1차 계획의 한계 및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종합하여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16~20)의 한계¹⁰⁴⁾에서 「‘재정지원사업의 한계’, ‘대학 간 협업보다는 경쟁 유도’, ‘현장 체감도가 낮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도시 문화 관련 ‘지방 도시의 생활 매력도’가 중요하며 나아가 ‘청년은 급여 외 문화·도시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나 지역 내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한다는 현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 및 유출의 증가 현실을 극복한다는 배경이 반영되었다. 역시 ‘청년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비전은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 그리고 목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인재 양성’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계가 깊은 부분은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과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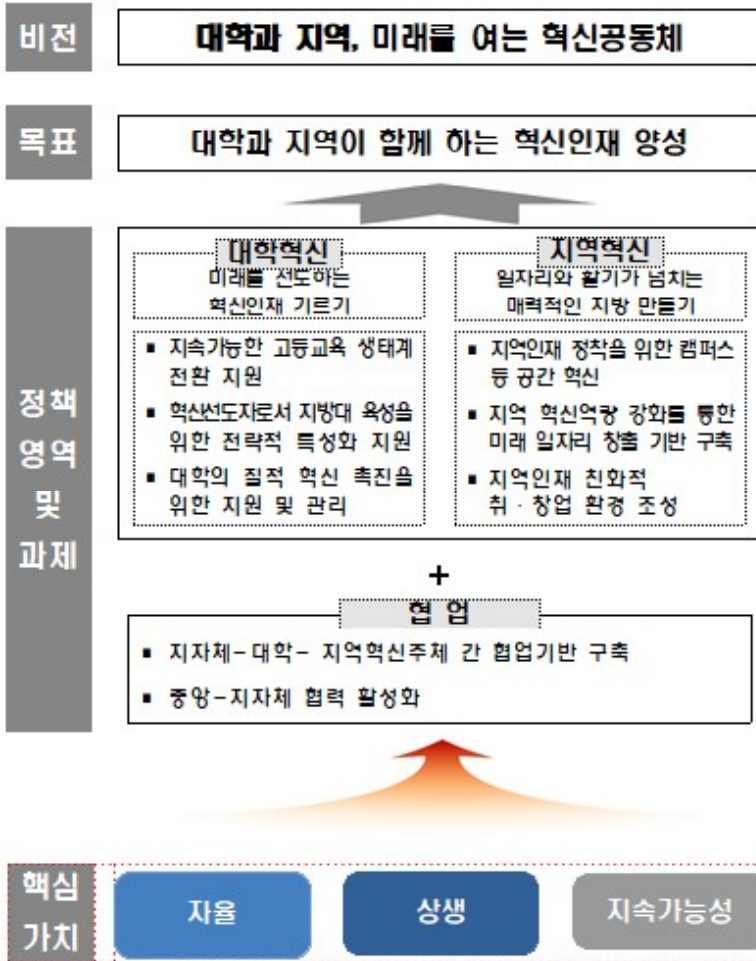
다. 계획 핵심 과제

1) 제1과제

핵심추진 제1과제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에서는 특성화, 그리고 상호협력이 중요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에 의한 ‘지역 혁신 플랫폼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유·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함께 특성화를 유도하며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협업모델은 국립대가 주도하여 지역대학 간 협업의 선도 모델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104)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림 3-3]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기본 방향¹⁰⁵⁾



2) 제2과제

제2과제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에서는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 확대로서 도 삼용합특구(국토부) + 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 연계로 교육·창업·문화주거 공간 등의 융합 도모 계획이 제시되었다. 또한 캠퍼스 내 기업, 산업단지 내 캠퍼스 등의 추진이 제시되었다.

105)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림 3-4]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도심 융합특구¹⁰⁶⁾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1.02.26

[그림 3-5]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캠퍼스 확대¹⁰⁷⁾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1.02.26

이러한 모델이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혹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 열린 지역과의 연계보다는 또 하나의 폐쇄적인 클러스터의 등장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연합대학원’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지원¹⁰⁸⁾’하는 계획으로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지역 연계 인력양성에 충분히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보인다. 다른 계획에 제시된 사업으로는 ‘지역연구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는 ‘인문·이공 분야 지역 연구자에 대한 우대 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106)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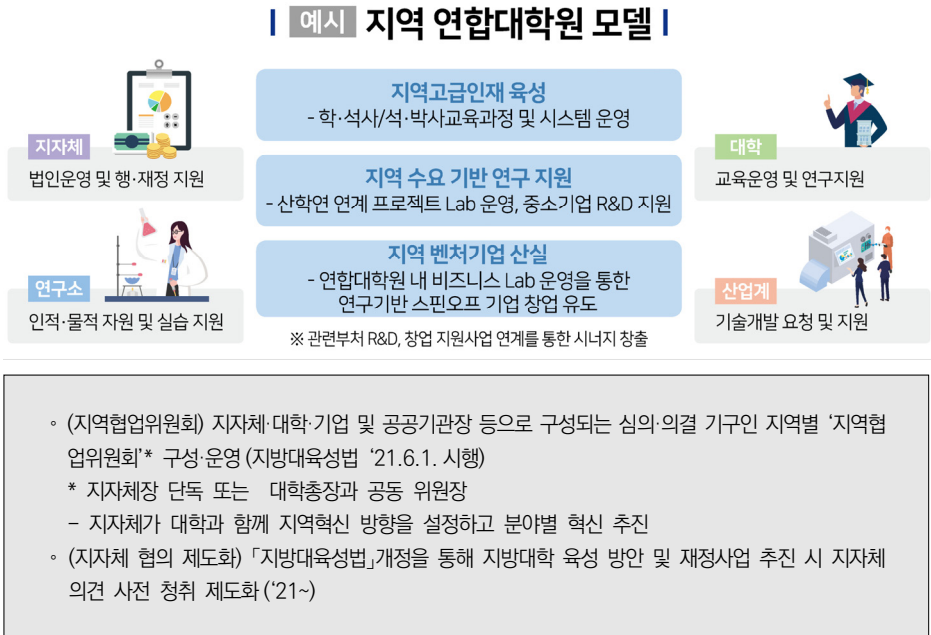
107)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108)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3) 제3과제

제3과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촉진」에서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계획’과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기제 마련’은 본 연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지역연합대학원 모델 예시 사례¹⁰⁹⁾



라. 시사점

교육부 주관의 해당 계획은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부 입장에서 지역대학과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단, 문화 및 콘텐츠 분야에서 지역성, 지역의 가치 및 지역의 도시·문화 현황과 결합하기에는 보다 ‘대학’ 그리고 ‘교육’ 위주의 계획 중심인 부분이 있다. 나아가 지역, 대학생, 청년 중심보다는 제도적인 ‘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본 연구와 다소 상이한 관점이 있다. 그러나 제시된 다수의 계획과 사업은 충분히 연계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자문,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09)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 교육부 LINC+, LINC 3.0 사업

가. LINC+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링크플러스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2021년까지 최대 약 2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LINC+ 사업은 그래도 대학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장과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는 해당 사업을 이어 LINC 3.0이 진행 중이다.

LINC+사업은¹¹⁰⁾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을 거친 뒤, 2017년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과 합쳐지면서 LINC+사업이 탄생했다. 이처럼 산학협력지원사업은 현장실습 등 산업체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일궈왔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들은 LINC+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사회문제해결 등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혁신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LINC+사업은 5년 차에 접어들며 2021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2022~2027년 LINC 3.0이 운영 중이다.

- (‘04~’11)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친화적 문화 도입
- (‘12~’16, LINC)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 (‘16년 기준) 일반대 57교 2,218억원, 전문대 30교 188억원 지원
- (‘17~’21, LINC+) 대학·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 (‘21년 기준) 일반대 75교 2,957억원, 전문대 59교 945억원 지원

110) 산학뉴스 검색결과, <http://www.sanhak.co.kr>

나. 사업 주요 내용 및 방향¹¹¹⁾

1) 사업 주요 내용

- 수행대학 :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4년제 국·공·사립대학)
- 사업기간 : '17 ~ '21 / 5년(2년+3년)
- '21년 사업비 : 총 225,375백만 원(교당 약 41억 원)

2) 사업 기본 방향

①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 (대학 자율성 확대) 기존 Top-Down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모델 설계 유도
- 사업모형창출, 예산수립 및 성과관리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계획 추진
- (산학협력분야 다양화) 인문·사회, 문화·예술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등 비공학 계열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형 창출 및 성과지표 개발
- 공학계열·제조업 중심의 산학협력 범위를 인문·사회·예술 및 서비스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

②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강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업체 및 지역수요 기반 현장중심 학사 제도 운영
- (쌍방향 협력 강화) 대학 내 산학협력서비스 원스톱 기능 강화, 대학 유희시설 내 기업 입주지원 등 대학을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 (지역산업 발전 모델 구축) 학교기업과 지역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

③ 산학협력의 개방성 및 확산성 제고

- (개방성 확대) LINC+ 사업 참여대학과 비참여대학 간, 사업 참여 대학 내 사업단 참여학과와 비참여학과 간 연계 협력 강화
- 외국인 학생, 대학 졸업생 및 휴학생의 대학 내 산학협력 인프라 활용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 개방적 사업 추진
- (대학원 산학협력 모델 개발) 대학원 기술창업, 신성장·산업분야 고급인재 육성 등 대학원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 유도
- 대학원생 및 대학 내 연구실을 통한 (신)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산업계 선도형 연구역량 강화 등 추진
- (산학협력의 사회적 기여 측정) 대학 재정지원 성과를 대학 내부의 변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산업 등에 대한 변화로 확대
- LINC+ 사업을 통한 지식기치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 측정

④ 사회맞춤형교육 활성화

- (사회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교육과정을 채용연계성이 강한 교육모델로 확립
-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교재개발에 기업과 대학의 공동참여와 기업 인사의 직접적인 교육 참여 등으로 교육과정에 기업 요구 반영 제도화
- (LINC+ 인프라 활용) LINC+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고도화 동시 추진

11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검색결과(2022), <https://lincplus.nrf.re.kr/>

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LINC+사업(일반대) 현황¹¹²⁾

이 중 지역문화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명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추진 예산) '20년 예산 기준 30,000백만 원*(1개교당 평균 1,500백만 원 내외)
- *'20년 예산 30,000백만 원 중 6,000백만 원은 신산업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신규 사회맞춤형학과 협약반 개설에 지원
- 대학 당 평균 15억 원 수준, 평균 5개 내외 교육과정(협약반) 지원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별 규모차를 고려하여 참여 협약반 조정신청 가능
- ※ 1개교당 사업비 구성 (예) → 5개 과정 기준 : 10억 원 내외(과정 당 2억 원 내외) + 공통기반구축비 5억 원 내외 (총사업비의 40% 내외)
- (추진 기간) '17년~'21년 (5년* = 2 + 3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LINC 사업은 대학과 산업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으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도입하여 졸업생이 졸업 이전에 사회를 경험하는 수업을 학점화 하여 사회에 첫발을 디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물론 제조, 공학 등이 중심이 되었지만 1. 지역사회와 연계를 가능케 한 점, 2. 인문, 경영, 예술계의 참여도 포함된 점 그리고 3. 대학에서 사회가 원하는 부분을 ‘수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문화,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부분, 나아가 로컬크리에이터 확대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대 혹은 변화되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라. LINC 3.0 사업

교육부¹¹³⁾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학이 ‘혁신 전초기지’로서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에 대한 산업계의 혁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LINC+를 이은 LINC 3.0을 발표하였다.

112)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검색결과(2022), <https://lincplus.nrf.re.kr/>

113) 교육부(2022),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2.1.12

1) 사업 개요¹¹⁴⁾

링크 3.0의 2022년 지원 예산 규모는 총 4,070억 원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 75개교 내외, 전문대 59개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 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링크 플러스) 사업과 달리, 링크 3.0에서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 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형(기술혁신선도형)을 포함하고, 전문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유형(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했던 이전 링크 사업과 달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7] LINC 3.0 단계 및 분류¹¹⁵⁾

구분	2단계(링크 플러스)		3단계(링크 3.0) ¹¹⁶⁾	
	①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	②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개교)	① 기술혁신선도형 (교당 55억 원, 15개교 내외)	② 수요맞춤성장형 (교당 40억 원, 50개교 내외)
일반대			③ 협력기반구축형 (교당 20억 원, 10개교 내외)	
전문대	①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40개교)	②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	① 수요맞춤성장형 (교당 20억 원, 44개교 내외)	
			② 협력기반구축형 (교당 11억 원, 15개교 내외)	

2) 사업 목적 및 전략

LINC+의 연장이 아니라 3.0 버전의 새로운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¹¹⁷⁾는 ‘1. 산학연 협력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산업계 수요 충족 및 대학

114) 교육부(2022),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2.1.12

115) 교육부(2022),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2.1.12

116) 2022년 예산 기준

산학연 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그리고 3.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필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회성, 획일성 사업보다는 조직 지속성과 발전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3.0 사업은 다음 4가지 전략¹¹⁸⁾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비하여 인재양성을 체계화, 둘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산학일체형 전문대학을 육성, 셋째, 산학연 협력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기반(인프라)을 강화, 넷째,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성'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전에는 국내용이었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해외와 연결하고,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별 산학연 협력 브랜드화를 유도, 과거에 의욕이 있던 소수와 나머지 학교가 분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교원 실명제 및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분산된 산학연 협력 추진기능을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재정비 등이 새로이 제시되었다.

- | |
|---|
| <p>1) 사업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2년 ~ '27년 (6년, 3+3*)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추진예산 : '22년 예산 기준 3,025억 원(사업관리비 포함) ◦ 사업 유형 및 지원규모 -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15교 내외(교당 55억 원 내외, 총 825억 원) -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50교 내외(교당 40억 원 내외, 총 2,000억 원) -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 10교 내외(교당 20억 원 내외, 총 200억 원) |
|---|

117) 교육부(2022),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01

118) 교육부(2022),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01

2) 일반대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유형3] 협력기반구조형
목표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및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선도 (국제 수준(Glob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산업계/미래사회 수요 인력양성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활성화 (국가 수준(Nation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대학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역 단위(Loc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예시)	<p>인력양성 30% 내외, 인프라 20% 내외, 기술개발, 사업화, 창업 40% 내외, 지속가능성 10% 내외</p>	<p>인력양성 40% 내외, 인프라 20% 내외, 기술개발, 사업화, 창업 25% 내외, 공유융합 15% 내외, 지속가능성 40% 내외</p>	<p>인력양성 40% 내외, 인프라 30% 내외, 기술개발, 사업화, 창업 15% 내외, 공유융합 15% 내외, 지속가능성 30% 내외</p>

마. 산학협력 모형 예시 사례

동시에 3.0 사업¹¹⁹⁾은 산학협력 모형을 제시하여 LINC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ICC¹²⁰⁾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3.0 사업 모형 설계 예시

가 대학	나 대학	다 대학	라 대학
단일 모형	모형 간 융합을 통한 제3의 모형 창출	단과대학 간 차별화된 모형 운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율 모델 제시

119) 교육부(2022),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01, p.29

120) ICC: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구분		모형 예시		
		모형a	모형b	모형c
인재상		글로벌 인재	창의적 인재	현장맞춤형 인재
역량		최첨단 연구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현장 실무 역량
참여 학사 조직		대학원 중심+ 학부참여	학부중심+ 대학원 참여	학부중심
대학원	대학원 참여	일반 또는 전문 대학원 참여	학부/학과와 연계된 일반대학원	-
	대학원 역할	산학협력 기반 공동연구, 혁신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 학부생 참여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
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중심	국가 기간산업 중심	지역특화 산업 중심
주요 프로그램		대학원 기술창업, 유료 ICC 등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기술 사업화, ICC 등	계약학과 및 주문식 교육과정, 애로기술 지도, ICC 등
성과목표		신성장 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취업을 제고 등
3S 지수		전임교원 참여 진정성, 공유 협업 수준, 지속가능성 등 산학연협력활동의 내재화 수준 반영		

관련하여 현재 LINC 사업 참여자와 인터뷰하였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대학교) LINC +, 3.0 참여 팀장 인터뷰

현재 제주대의 경우 2차 사업 최우수 평가로 3.0을 신청하여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2022~2026년까지 매년 약 45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LINC 사업은 제주에서 스마트관광, 환경, 바이오 등이 결합된 형태인데 제주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었다.

특히 인문, 경영 분야 대학과 산업, 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대표 사업이 LINC라고 본다면 사업의 확대, 지속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생태·문화 관광 등이 LINC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안서에서 시작되어 팀을 꾸리고 현장 학습과 수업 등을 협력해 만들어가는 구조인데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바. LINC 사업과 지역문화 연계 사례

춘천문화재단은 강원대학교 및 강원대학교 LINC+ 사업단에 캡스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문화, 도시재생, 환경, 청년 및 사회적 경제 관련 과제를 공동으로 연계하였다. 이를 위해서 간담회, 협력사업 방향성 도출 및 지역사회 과제제안을 도출하였다.

관련하여 2020 문화도시 예비사업 문화안전망 실험(라운드 테이블) 도출 의제를 제안
 과제로 2021년 7월 30일 제시하게 되었다.¹²¹⁾

〈표 3-4〉 춘천문화재단 LINC 사업 제안 과제

번호	제안 과제	
	카테고리/ 주제	주요 내용
1	사회혁신 (도시농업)	시민이 일상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도시농업을 경험 할 수 있는 방안 (의제: 농업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에 정서적 애착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	도시재생	춘천 골목길의 가치(인문학·경제적·사회적) 기록 및 전달 방안 (의제: 춘천형 문화골목 아카이브)
3	환경	지역 도심권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의제: 자전거를 활용한 탄소 배출 저감 및 문화활동 확대)
4	지역 먹거리	자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먹거리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할 수 있는 방안 (의제: 먹거리 인식 개선을 위한 아카데미 및 시민 참여 연계 사업 ; 공동체 부엌 운영 등)
5	사회적 경제	시민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기업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 (의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도출을 위한 지표 개발)
6	예술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소비시장(콘텐츠, 인프라) 제안 (의제: 예술을 공공재로 인정하는 인식을 통한 예술인 보호)
7	청년	춘천사용설명서: 지역 청년들이 춘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제안 (의제: 춘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이러한 과제는 이미 2020년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워킹그룹을 통해 시민들의 필요성이 검증된 과제를 지역의 대학과 함께 고민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즉, 문화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에 의해 도출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대학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 ▲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교육과정 공동기획 및 설계
- ▲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우수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121) 춘천문화재단(2021), 강원대학교 링크사업단 캡스톤 디자인 지역사회 과제 제안서 제출 공문, 2021.7.30

▲ 현장 중심형 프로젝트 실행 지원 및 사업협력 모델 구축

또한 캡스톤 디자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가 같은 해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었는데 프로젝트 과제가 총 7건 접수되었고 이 중에 ‘춘천 카페 로드맵’, ‘춘천을 담은 노트북 파우치 제작’, ‘춘천 관광 부루마블’, 춘천 골목의 기억을 연결할 수 있는 상품으로 ‘reminiscence: 추억’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최초 공학 관련 분야에서 시작된 LINC 및 캡스톤 디자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 함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가. 사업 배경 및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에 시작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이다. 2005년에 시작될 때 사업명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이었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공고문에서 ‘문화의 시대를 맞이 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대학과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목적으로 참여를 공고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축제기획 및 평가, 지역 문화 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체 소요 예산 5억 원(균특)이며, 사업 규모는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서울 제외) 중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개 사업당 2,500-5,000만 원 정도 지원, 그리고 지원 조건은 정률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정책 분야에서 지역의 대학과 지역문화 행정 그리고 정책 및 사업이 연계되는 최초의 사업으로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를 견인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시작하였다.

나. 지역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의 의미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지역혁신계정의 문화부(당시 문화관광부)의 대표적인 지역 클러스터 사업으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

〈표 3-5〉 지역혁신계정 2005(김영수 외, 2007)

사업명		산자부 이외 부처의 지역혁신계정 사업						
		기반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기획연계	지방대학 육성	기타
교육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
	산학협력체 제활성화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
		학교기업육성				●		
		전문대학해외인턴십			●			
		컨넥트 코리아					●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	
전문대학특성화							●	
과기부	과기부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
	대덕R&D특구육성							●
문광부	지역문화 산업육성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
		대구대자인패션산업육성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지원					●		
해수부	해양생물연구센터설립		●					
환경부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					
정통부	지역소프트 웨어지원센터	소프트타운활성화지원					●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					
건교부	지역특성화연구개발			●				
농림부	지역농업클러스터						●	
농진청	지역연구기반조성		●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특화사업검임연구관사업		●				
		지역농과계대학연구기반조성				●		
		지역농업기술개발과제		●				
		창업보육센터	●					
중기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벤처육성촉진지구						●	

김영수 외(2007)에 의하면 ‘지역혁신계정사업¹²²⁾은 현재 9부 2청의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보조 및 출연) 지원규모로는 2006년까지 총 5조 9,909억 원이 투

자되었다. 지역혁신계정사업에서는 산자부의 사업이 9개로 가장 많고,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06년까지 2조 4,411억 원으로 40.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4개 사업에 2조 4,154억을 투자하여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은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되고 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였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문체부의 혁신계정 주요 사업으로 ‘지방대활용사업’이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서 매우 높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다. 사업의 전개

1) 사업의 전개(초기 2005~2010)

사업은 2005년 14개 지역과 대학이 선정되었다. 사업 초기, 즉 2010년까지는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문화예술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역문화예술 대안 및 정책 컨설팅에 그 특징이 있음¹²³⁾’으로 분석된 바 있다.

2005년에서 2009년도 사업을 분석한 연구¹²⁴⁾에 의하면 컨설팅 사업의 주제를 1. 이론·정책 모델형, 2. 운영 개선형, 3. 신규정책 개발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당시 사실상 전문가 및 정부차원에서는 이론·정책 모델형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 연구에서 ‘이론·정책 모델형’을 ‘기존의 정책이나 기존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이론적 모델이나 정책적 모델을 수립하여 기존의 지역문화 정책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선명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정책과 기존 문화정책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 모델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문화정책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세부 목표¹²⁵⁾’로 설정하였다. 2010년까지 지역별 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22) 김영수 외(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제 527호, 산업연구원

1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22

1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22

〈표 3-6〉 2005-2010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지역별(광역별)연도별 지원 현황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0	5	1		3		4	7	3	3	21	14	16	5	6	98
2005년	1	1	1		1			1	1	1	2	3		1	1	14
2006년	1						1	2	1		2	4	4		1	16
2007년	1	2			1		1	2		1	3	4	3	1	1	20
2008년	3	1					1			1	6	1	2		1	16
2009년					1		1	2	1		3	2	5	1	1	17
2010년	4	1									5		2	2	1	15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유형별·연도별 선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3-7〉 2005-2009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연도별 유형화 구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내용	연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1. 이론·정책모델형	3	6	7	9	8	33
2. 운영 개선형	4	3	5	1	2	15
3. 신규 정책 개발형	7	7	8	6	7	35
총계	14	16	20	16	17	83

이론·정책 모델형의 선호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문화의 틀을 수립해 보는 것에 요구가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형 사업개발, 현행의 다소 보완 등의 사업보다는 정책 모델형을 지향했다. 그러나 사업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고 대학에서 해결하는 과제 혹은 사업에 대한 지원과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부터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효과의 확대를 위해 문화부는 2007년부터 우수사업 2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선정된 우수컨설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예산이

2009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회성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결과가 직접 지역문화의 사업으로 연결되어 효과를 거두는 정책으로 개선되었다.

2) 사업의 전개(후기 2011~2020)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사업(2011년 공모)부터 사업명칭이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정책 방향의 명확한 설정은 2012년에 제시되어 이는 201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계획’¹²⁶⁾에 제시되었다.

사업의 변화는 ‘기존 지방대학 중심의 컨설팅 수행에서 지역문화재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추진 주체까지 수행 단체를 확대하여 컨설팅 이후 실행 가능성을 높였고, 컨설팅 과업 대상을, 당면한 지역문화 현안부터 중장기 지역문화정책 수립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¹²⁷⁾’로 제시되었다. 공모 방향은 ‘지방대학에서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컨설팅 주관 단체 다변화, 지역 중장기 지역문화정책 수립,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육성 등 당면 현안과제 우선 선정¹²⁸⁾’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2년 당시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이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맞추어 대상을 지역대학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우선선정 과제에서 ‘중장기 지역문화 정책 수립’으로 확대한 부분은 초기의 애매한 ‘이론·정책 모델형’ 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제안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 문화정책 틀을 함께 수립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한 의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정책에서 이듬해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는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변화와 함께 공모 선정 기준도 바뀌어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126)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주관단체를 지방대학 중심에서 지역문화재단까지 확대 -, 2012년 8월 6일 보도자료

127)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주관단체를 지방대학 중심에서 지역문화재단까지 확대 -, 2012년 8월 6일 보도자료

128)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주관단체를 지방대학 중심에서 지역문화재단까지 확대 -, 2012년 8월 6일 보도자료

〈표 3-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2013년 공모안)

예비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업계획의 필요성(20점)	○ 필요성(타당성, 유용성)/ 중요성, 시급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20점)	○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이해도 ○ 컨설팅 체계의 적절성/ 사업내용과 소요비용의 적합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20점)	○ 컨설팅팀 능력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정확성, 신뢰성) ○ 해당 지역 거주 유무(현장성/기초, 광역) ○ 컨설팅팀과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의 지속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40점)	지속가능성 (20점)	○ 사업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 컨설팅 이후 사업 채택 가능성(현실성) ○ 개선 가능 또는 발전 가능성(기대효과, 발전성)
	정책 효과성(20점)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및 지역파급효과

이러한 변화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매년 11~15건이 선정되었고 우수 결과 역시 평균 2건이 선정되어 차기년도 시범사업비가 지원되었다. 2020년은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에 이례적으로 수도권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2건이 선정되었다.

〈표 3-9〉 2020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결과

번호	선정 지자체		비 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구로구	
3	경기도	화성시	
4		의정부시	
5		동두천시	* '19년 우수과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7	경상남도	거창군	
8	전라남도	강진군	
9		담양군	
10	충청남도	서산시	
11		홍성군	* '19년 최우수과제
12	충청북도	제천시	
1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 제주계정

2005년도 지역 대학의 역할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은 종료되는 해까지(2020년 선정 사업의 약 절반)도 지역대학의 지역문화의 접점이 만나는 유일한 문체부의 사업으로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지속되다가 2020년 종료되어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문화재단 사업이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2020년 마지막 사업에서 지역대학으로는 청운대(홍성군), 대구한의대(거창군), 한서대(서산시), 동양대(동두천),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는 경희사이버대(동대문구), 연세대 국학연구원(강진군), 그리고 제주도에서 설립한 공공연구기관 ‘제주학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는 모두 지역문화재단과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제3절 해외 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의 주요 사례

본 연구의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일본의 COC 사업과 미국의 COPC 사업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을 수월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우리의 경우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부분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실제로 운용할 때 대학과 지역의 협력에서 일본형보다는 미국형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일본 커뮤니티 센터(COC) 사업

가. 일본 COC 사업 배경

일본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들을 1990년대부터 먼저 경험해오고 있다¹²⁹⁾.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대학-지역사회 협력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책적 지원으로 2005년 내각관방 도시재생본부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을 정책 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6-7년에는 교육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공헌이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3번째 사회적 임무로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대학-지역사회 협력증진에 관한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또

129)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3년 문부과학성에서는 ‘지역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형성’을 목표로 대학 당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5,800만 엔을 지원하는 대학 Center of Community 사업(이하 “COC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자체의 역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청 내 대학관련정책 및 대학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요코하마시립대학교가 위치한 가나자와구에서도 비슷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에 공간·시설 제공, 역량 강화, 커뮤니티 형성, 지역문제 해결(완화)을 위한 전문지식·신선한 아이디어·인적자원의 제공 등의 기여를 하고 있다.¹³⁰⁾

나. 일본의 지역과 대학 연계 사업 정책 형성과정

1) 내각관방 도시재생 본부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 (2005)¹³¹⁾

대학과 지역의 연계 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은 내각관방의 도시재생본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프로젝트의 20번째 정책 주제이다. 2005년도에 시행한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에서 ‘대학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 전개’가 공통된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그해 10-11월에 전국 8개 지역에서 ‘대학과 지역이 연계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5년 12월 제 10차로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이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대학자원의 활용이 국가정책 과제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① 대학과 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마을 만들기 방법 추진, ② 실천적인 사회인 육성 추진 및 사회활동 참가 촉진, ③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등을 위한 환경정비 및 시민과의 만남·교류 촉진, ④ 시민에게 개방된 대학, 연속된 녹지의 확보 등 마을 만들기와 조화된 대학 캠퍼스 형성, ⑤ 마을 만들기에 적합한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의 5가지 세부과제가 결정되었고, 각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시책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130)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p 5-6

131)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37

〈표 3-10〉 대학-지역 연계형 도시재생 활동 내용¹³²⁾

구분	내용
실천적 교육·연구 성과 제공	· 지역 내 새로운 매력의 창조: 마을 만들기 교부금을 활용한 사회실험을 공동실시, 해당 지역의 문화 자원을 살린 활동 전개(예: 학생이 운영하는 마을카페, 폐교 활용) · 지역 내 현안문제 참여: 시민단체와 함께 배리어프리 생활환경조사, 환경·건강을 테마로 한 공개수업 개설 및 캠퍼스 내에 실험주택 건설
다양한 인재·활력 제공	· 지역 내 경제 주체 육성: 연구실이 발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 (예: 학생이 원도심 빈 점포 활용 스툴 운영, 졸업 후 독립 개업으로 발전) · 지역 내 상가 활성화: 학생이 지역축제 기획 상점가 안내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지역 내 열린 캠퍼스 운영: 방재, 복지 등 다양한 시민양성 강좌 운영 ·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 대학생이 수업 일환으로 제안하고 행정과 시민이 논의

나. 교육 관련법 개정 (2006년-2007년):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법에 명시¹³³⁾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 7조와 2007년 개정된 「학교 교육법」 제 83조에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종래의 「교육」, 「연구」에 이어 「지역공헌」이 대학의 3번째 사명으로 명시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 문부과학성의 「地(知)의 거점 정비 사업」(2013년-현재):

지역재생과 마을 만들기 거점대학 형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¹³⁴⁾

· 사업의 개요 및 목적

「地(知)의 거점 정비 사업」(대학 Center of Community 사업, “이하 COC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2013년부터 시행한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이 인재 육성과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의 책무와 함께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생애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 형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132)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6.

133)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2015,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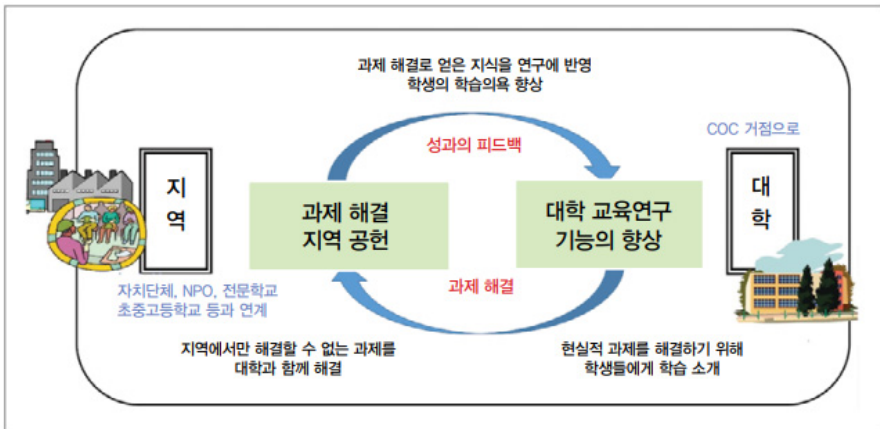
134)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2015, pp 38-39

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주체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며, 지역의 니즈와 대학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매칭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진흥책의 입안 및 실시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 진행 방식 및 지원 내용

대학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과 관련된 교육·연구·사회 공헌 활동을 이행하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부과학성에서 심사를 거쳐 적합한 사업을 채택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 내 전담조직 보유, 학교 전체의 교육 커리큘럼·교육 조직 개혁 등 학교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등 대학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 당 연간 최대 5,800만 엔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의 젊은 인재 유출 및 도쿄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에 의해 사업명을 COC+로 변경(예산 44억 엔), 교육 커리큘럼 개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지원액도 증가하여 대학당 연간 최대 6,800만 엔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그림 3-8] 일본 COC 사업 개념도¹³⁵⁾



135) 배유진·김유란(2019),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 제 451호, 2019.5

예를 들어¹³⁶⁾ 교토공예섬유대학 (京都工芸繊維大學: KIT)에서는 2013년부터 마이주르 대학 국립 공학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aizuru College)과 공동으로 대학 COC 프로젝트를 "교토 산업 문화 예술 센터 형성 및 K16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KIT는 대학 전체에 걸쳐 교육, 연구 및 사회 공헌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중점을 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토부 북부의 지방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교토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사립대학 및 국립 공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교토 부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축적된 교육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지역사회, 대학 COC 사업의 성과, 지역의 현황과 함께 이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교토부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 개발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및 기타 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문부과학성(MEXT)의 COC+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학 COC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3-9] 일본 KIT의 COC 사업 현장¹³⁷⁾



136)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검색결과, <https://www.kit.ac.jp/en/coc-en/>

137) 国立大学法人 京都工芸繊維大学 검색결과, <https://www.kit.ac.jp/>

2. 미국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COPC) 사업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원 지원, 대학과 지역사회가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는 사례로 대표적이다. 특히 대학-지역 커뮤니티가 지역재생을 함께 주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미중물' 형태의 연방정부 지원, 지속가능하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대학의 의지와 전담조직, 그리고 협력과정에서 대학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들(CBOs) 및 그들과의 협력과정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대학-지역사회 협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계기는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COP)'라는 연방정부 주도의 협력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부터였다. 여기서는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대학-지역 커뮤니티 협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 사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교내에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등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였고, 협력사업 시 COPC 보조금과 학교 및 다른 사회재단들로부터의 지원을 일정 비율 이상 매칭하도록 하였다.¹³⁸⁾

가. 미국의 COPC 사업 배경¹³⁹⁾

미국에서 과거 흔히 상아탑이라 불렸던 대학은 그들이 생산하는 지식이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생산된 지식의 수혜자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대학은 커뮤니티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파트너로서 바라보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대학 교수들은 '전문가'로서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대학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경청하기보다는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대학 교수들은 커뮤니티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그들의 연구에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파트너십 내부에는 불신과 반목이 팽배하였고, 연구가 종료될 시 파트너십이 해체되어 버리는 과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138)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 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6

139)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 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p 56-57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반성으로 대학은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나. COPC 프로그램의 도입¹⁴⁰⁾

이런 배경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지역 커뮤니티 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지원 활동센터(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쇠퇴한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서 대학-커뮤니티 파트너십의 제도화의 핵심은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지원 활동센터」를 운영하고 COPC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 COPC 프로그램 운영 구조¹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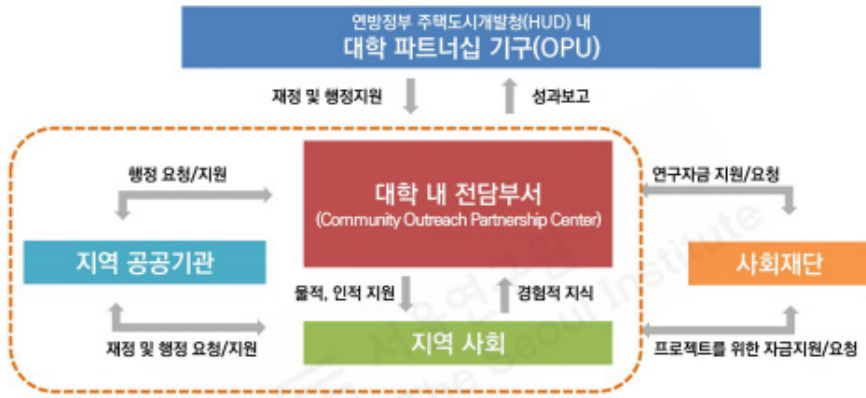
연방주택도시개발부(Housing Urban Development, 이하 “HUD”)는 커뮤니티 지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①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한 지역문제 우선순위 결정 및 해법 모색, ② 지역 주민 및 지역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이하 “CBO”)의 역량 강화, ③ 대학교육의 사회적 역할 및 대학의 내적 변화 등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대학들로 하여금 COPC 보조금의 일부를 협력관계를 맺는 CBO에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와 강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COPC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은 HUD 내에 설치된 대학 파트너십 정책국(Office of University Partnership, 이하 “OUP”)에서 담당하였다. OUP는 매년 공모를 통해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를 설립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15~58만 달러의 COPC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기금은 대학 내 설립된 커뮤니티와의 협력사업 전담조직인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에서 관리하며, 각종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대학들은 공모 시 제안한 활동들을 3년 이내 완료하도록 했다.

140)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58

141)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p 58-59

[그림 3-10] COPC 프로그램 운영 구조¹⁴²⁾



라. COPC 프로그램 지원 조건¹⁴³⁾

대학 파트너십 기구(OPU)는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시작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시드머니를 제공하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기여를 담보하기 위해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대학들은 지원활동비용의 25% 이상, 연구 활동 비용은 50% 이상을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민간,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재단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매칭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대학들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학-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연방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대학들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75% 이상을 커뮤니티 지원 활동, 기술지원, 정보 교류 활동에 사용해야 했으며,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은 25% 이하로 제한되었다. 연구는 정부의 보조금과 관계없이 대학들이 해야 할 본연의 활동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 보수 등 직접적인 물리적 개발 행위에는 COPC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COP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OUP에서 규정한 9가지 유형의 활동 중 3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했다. 이는 ① 지역주택, ② 사회기반시설, ③ 경

142)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59

143)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4-PR-45,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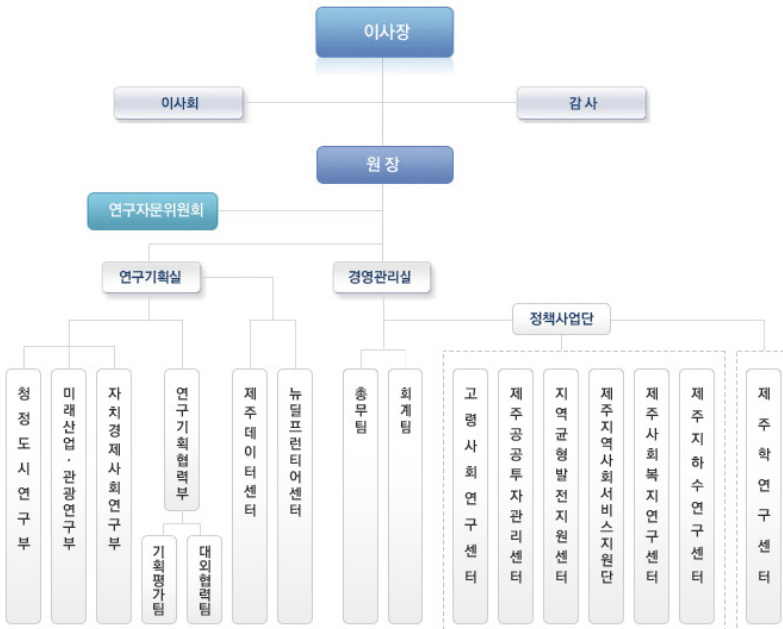
제개발, ④ 지역 활성화, ⑤ 건강, ⑥ 범죄 안전 등이었다. 이 활동들에서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공공 서비스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협력센터와의 협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제4절 지역 대학과 청년 연계 정책

1. 지역-대학 연계 사례로서 지역학연구센터

지역학연구센터로서 대표적으로 제주, 강원과 전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제주와 강원은 MOU를 통해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각각 제주학대회, 강원학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 연구센터는 지역의 대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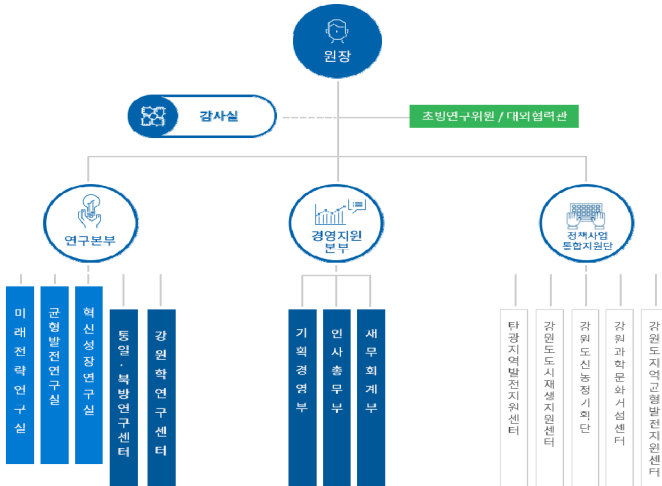
[그림 3-11] 제주연구원 조직도(홈페이지 참조)



제주학 조사 연구 사업, 제주학 자료 구축과 정보화 사업, 제주학 교육 및 대중화 사업, 제주학 연구자 육성과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사업이 중심 역할이다. 2010년 제주연구원(옛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시작되어 2013년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미 2012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과 MOU로 협력기반을 만들었다. 2018년 제주를 넘어 강원학연구센터와 MOU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제주대 평화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다. 제주연구원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나 제주학연구센터 위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2002년 강원연구원 부설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가 2010년 폐지되고 이후 2017년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강원학 연구센터가 강원연구원 내 설립, 2018년 제주학연구센터와 MOU 체결, 2019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강원대학교 인문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문화, 교육 기관과 협력기반을 만들었다. 2020년에는 더 나아가 전북학연구센터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림 3-12] 강원연구원 조직도(홈페이지 참조)



전북학연구센터는 2019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에 강원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에는 전북대 삶·문화·문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지역학연구센터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면서 지역의

대학, 문화기관 등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 지역과 교류협력을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학술대회, 학술지, 공동정책세미나, 우수논문지원, 연구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계, 문화계와 지속적인 연계를 하며 지역 인문·역사 등 문화를 기록하고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지역-대학 연계 학위과정 및 수업 연계 사례

가. 한림대와 춘천문화재단의 학위 신설 및 협력

춘천에 소재하는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은 2021년 준비하여 2022년 문화예술학위신설과정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한림대 및 춘천문화재단의 이러한 협력에 대한 성과¹⁴⁴⁾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하여 비학위 과정의 경우 프로그램 공동 설계 및 추진을 통한 성과 확보 가능, 현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 가능, 지역문화 인력이 교육과정(수료증 자격증 발급 등)을 발판으로 단계적 성장 및 현장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으로 설정하고 있다. 업무협약(2021.8.27.)에서는 협력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교육과정 공동기획 및 설계
- ▲ 현장 중심형 프로젝트 실행 및 지속가능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 문화예술의 역할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2022년 글로벌협력대학원 글로벌한국학과에서 한류문화협력전공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전공의 역할은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에서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고, 문화를 매개로 한 글로벌 도시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문화사업기획, 글로벌협력,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겸비한 융합적 문화 및 문화협력 전문가, 도시혁신가, 문화기획가, 글로벌 문화협력 설계자 양성”으로 설정되었다. 관련된 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44) 춘천문화재단(2021), 한림대학교 지역형 산학협력 관련 관계자 회의 회의록, 2021.7.12

- 한류문화협력 전공 교육과정 총 이수 학점 32학점 개설 예정
- ※ 과목별 학점 총 학점(9과목) 대학원 필수과목 5 학점
- 9 과목 중 과목의 경우 대학원 전문교수진 및 팀티칭의 형태로 과목 개설 예정이며 이외의 2 과목의 경우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설계
- 3000만원 산학협력 이월예산 수립(1200만 원 장학금 / 1800만 원 프로젝트비)
- ※ 장학금(민간사업지원, 1200만 원, 200만 원*3명*2학기)
- ※ 프로젝트비(재단 직접 집행, 1800만 원)

이를 통해 제안된 9개 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1〉 춘천문화재단-한림대 협력 과정 교과목 설계안¹⁴⁵⁾

교과목명 및 내용		
1	문화협력론	국내외 정치적 불안성, 자연재해, 글로벌 경제 양극화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며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 기반의 문화 분야 협력 이슈의 쟁점을 찾아본다. 특히 지역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는 협력의 성숙한 단계로 정부 주도형보다는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의 민간단체, NGO를 통한 간접 지원 형태가 강조되는 민간활동을 중심으로 이 시대 문화의 역할과 쓰모를 모색한다.
2	문화경영론	문화경영론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확장적 이해와 종합적 고찰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문화예술로 인한 외부효과 창출 등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성과 창출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문화예술이 지니는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시문화 거버넌스의 형태와 사례를 분석하며, 문화가 지닌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전략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 모델에 대해 탐구한다.
3	문화행정론	문화행정론은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행정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관점을 설정하는 것을 학습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행정 프로세스를 논의하고 전략을 구상해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4	문화교류론	문화교류론은 국제문화, 지역문화, 지역정체성을 전제로 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교류 사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제 문화 교류의 형태에 대해 고찰해 보고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간, 국가 간, 친선과 교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탐구한다.
5	문화와 테크놀로지 / 미래문화 컨벤션	문화컨벤션은 문화예술의 주요 이슈와 아젠다를 발굴하여 국제적으로 공감과 확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전략 설정을 학습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컨벤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고 시대 변화와 흐름 속에서 나타난 온라인 기반 컨벤션 모델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5) 제공: 춘천문화재단 자료(2022)

교과목명 및 내용		
6	문화와 데이터	문화와 데이터는 지속적이고 방대하게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 분야 사업, 연구, 정책을 접목한 과목이다. 문화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분석의 의의를 통해 문화와 데이터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형성하고, 데이터 수집, 판별, 가공, 분석 등을 학습하여 문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정책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글로벌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7	글로벌문화 도시론	글로벌문화도시론은 '문화도시'의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방향 및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문화도시의 문화생태계, 도시브랜드, 도시 발전구조 및 효과, 지역 정체성 관점의 사업, 사회 효과 발현방식 등을 탐구하고 문화정책이 도시 발전과 도시 재생 등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8	글로벌 도시이슈	강원도 춘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역할과 가능성을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고 경쟁력을 설계하는 것에 학습 목표를 둔다. 춘천, 강원도, 동북아시아가 연계되어 있는 문화 맥락을 이해하고, 국내 문화도시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과 환경 및 특성, 제도적 조건을 분석하고 도시문화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탐구한다.
9	캡스톤 디자인 1-2	(캡스톤디자인 1) 도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도시문화 브랜드 형성을 구체화하고 제안하는 실습 과정이다. 도시를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자원관리 및 도시문화자원 개발 등 도시공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도시문화를 연구하는 이론을 탐구한다. (캡스톤디자인 2) 캡스톤1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해결 방식을 구체화하여 춘천문화 도시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사업화 추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나. 제주대학교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계 수업 사례

문화 분야에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그리고 대학이 연계된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다. 이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장소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유희공간이 문화예술적, 도시적, 환경적, 인간적인 접근 등 재생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성·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폐산업시설 공간,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대학교와 워크숍과 커리큘럼을 통해 제주의 (대학) 청년이 지역의 과제를 통해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지역문화기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공간, 지역문화 그리고 새로운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는 것으로도 대학의 역할이 지역과 적절히 연계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2〉제주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문화재생 커리큘럼¹⁴⁶⁾

주	일시	주제	내용	비고
1	2022. 3. 5.(토)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강의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강의내용 및 방법 안내 학습목표 및 일정, 과제 안내 등	아이스 브레이킹 오리엔 테이션
2	2022. 3. 10.(목) 17:30~19:00	문화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이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써 문화재생 이해 정책/제도, 문화활동 등 각 영역 및 관점에서의 사업	강의 및 토론
3	2022. 3. 17.(목)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사례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사례 소개 공간, 사람, 콘텐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방법 교육	강의 및 토론
4	2022. 3. 24.(목)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추진방향 (중문아트119, 우도담수화시설)	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 설정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등	강의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5	2022. 4. 2.(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기초조사	대상지역 인문, 도시, 자연환경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지역 인적 네트워크 분석	현장학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6	2022. 4. 7.(목)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현장조사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현장학습 및 토론
7	2022. 4. 16.(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현황분석	대상지역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등	토론 퍼실리테이션 등
8	2022. 4. 21.(목) 17:30~19:00	중간고사	개별 과제 제출 과제: 문화예술 및 지역 기반 활성화사업의 사례 연구	
9	2022. 4. 30.(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기획 실무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기획서 작성 컨셉 설정 및 사업내용 구체화, 예산계획 수립 등	현장학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10	2022. 5. 14.(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공유회	지역 기반 문화예술사업 기획안 발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대상지역 주민 및 사업 관계자 등	팀별 발표 및 토론

146) 제공: 제주문화예술재단 자료(2022)

주	일시	주제	내용	비고
11	2022. 5. 19.(목)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거버넌스 논의, 구축	지역 기반 문화예술사업 운영조직 및 거버넌스 문화예술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학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12	2022. 5. 28.(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홍보 기획	문화예술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홍보계획 수립 메인 홍보채널 설정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13	2022. 6. 2.(목) 17:30~19:0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운영 기획	문화예술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준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실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14	2022. 6. 11.(토) 10:00~11:30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운영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실습	실습 및 토론 프로젝트식 강의
15	-	보강수업	보강수업 및 휴강	
16	2022. 6. 16.(목) 17:30~19:00	기말고사	팀별 과제 발표 및 평가 과제: 문화예술 및 지역 기반 활성화사업 기획 및 운영	팀별 발표 및 평가

진행: 제주대학교 000 교수, 제주문화예술재단 000 이사장, 미래문화팀

[그림 3-13] 제주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강의 현장¹⁴⁷⁾



147) 제공: 김병수 센터장(2022)

3. 지역-대학 연계 인력양성 지원 사례

가. 지자체-복수 대학 기반 협력 추진 사례

전북대-서울여대-전주시-포스코건설-(사)한국해비타트 5개 기관 지역혁신가(로컬 이노베이터) 양성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인 전주 중화산동 도토리골에 전북대와 서울여대 각각 12명의 학생들이 디자인 씽킹 기법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책 제안, 로컬 이노베이터 양성을 목적으로 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¹⁴⁸⁾.

나. 지자체-대학 기반 협력 추진 사례

: 강원대-강원디자인진흥원 2개 기관 공동 창의인재 양성 사업

강원대학교와 강원디자인 진흥원은 강원 지역 디자인 분야 발전협력을 추진하여, 지역 디자인 사업 발굴,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디자인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행사 등 정보·자원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약하였다¹⁴⁹⁾.

다. 지자체-대학 기반 인력 양성 추진 사례

: 목포대-전라남도 지역인재 육성사업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라남도는 대학-지역 연계 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도 아트로드-미술학과(지역바로알기 분야)', '전남의 섬 생태·문화 정책기반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도서문화연구원(지역기반교육 분야)'을 선정하여 남도의 전통가치와 정체성을 알고, 지역 상생 과제해결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¹⁵⁰⁾.

148) 퍼블릭뉴스(2021),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실상과 과제'(2021.08.11.일자 기사)

149) 퍼블릭뉴스(2021),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실상과 과제'(2021.08.11.일자 기사)

150) 시사매거진(2021), '목포대, 전남도 대학-지역연계 협력 지원사업 2개 과제 선정'(2021.05.15.일자 기사)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제4장

지역과 청년

제1절 청년 정책과 지역문화 활동 현황

1. 청년 정책 현황

가. 청년의 개념과 범위

청년(靑年, youth)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국립국어원, 2020)하며, 특정 연령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생애 연령기로 나눌 경우 청년기는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를 의미한다. 청년이라는 용어는 UN이 1956년 특정 국가의 노령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65세부터 ‘노인’으로 지칭함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장되었으며, 청년의 경우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생애 연령 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생애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기 동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고정적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그들 부모들의 문화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들의 독특한 문화를 ‘청년문화’로 지칭하고, 청년문화를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보면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¹⁵¹⁾ 당시에는 청년문화가 기성세대의 주류문화에 대비되는 문화로, 전후(戰後) 체제에 대한 비판, 성인에 대한 반항, 기성윤리에 대한 도전 등이 근저에 있다고 보았다. 학계 연구에서 지칭하는 청년문화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등 광범위하게 서브컬처, 반체제, 전위, 언더그라운드, 팝 컬처 등으로 불렸으나, 여기서의 청년은 일반적인 생애 연령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950-1970년대의 특정 시기에 발현된 청년의 문화적 특징에 국한된다. 다만, 당시 활발한 청년문화에 관한 연구로 인하여 그동안 기성세대 중심이었던 관점에서, 젊은 층에 대한 주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과 관련한 연구도 지속 증가하였다.

151)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참고

청년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을 연령층, 세대를 중심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간, 과학기술의 발전, 생태학적, 경제적, 정신적 관점 등에 따라 다르다. 사회 문화적 맥락, 정치·경제적 맥락, 정보화에 따른 분류, 역사적 경험, 문화적 행태 특성 등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 또한 상이하다.(방미현 외, 2020)¹⁵²⁾

국내 청년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에 의해 청년이 정책 대상의 지위를 갖추게 되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전반에서 활동과 참여를 하는 주체이자, 성장해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 소위 ‘사회의 일원을 준비하거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 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특정 연령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정의이며, 동법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력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경우 별도의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으나 해당 법 제 12조 청년 실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관련 사항의 제시와 함께 해당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과 유사한 개념으로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며, 자유롭게 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입법과정에서도 청년과 관련한 연령 범위에 관하여 발의자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경우는 19-39세였으며, 박홍근 의원의 경우 19-34세를, 이원욱 의원은 19-39세를 발의하였다.(임성근, 2021) 최종적으로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¹⁵³⁾

정작 청년들의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은 상기의 기준과는 다르게 나타난 바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6)를 통해

152) 방미현 외(2020), 20대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7호

153) 임성근 외(2021), 청년정책 연구기반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청년층이 생각하는 청년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청년은 19.3세 이상 29.5세 이하의 연령을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⁵⁴⁾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는 국제기구들 역시 달리 나타난다. UN은 1985년 국제 청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를 선포하고 청년의 범위를 15-24세로 규정했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역시 해당 연령으로 청년을 규정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상에서는 청년을 15-25세로, 청년 전략>Youth Strategy)에서는 15-29세로 규정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청년의 범위 또한 각기 다르다. 국가별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는 10-20대만 포함하는 경우가 86개국 47.8%였으며, 94개국 52.2%는 30대 이상이 청년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었다.(청년정책글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¹⁵⁵⁾

이처럼 청년의 의미는 실제 청년층이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과는 별개로, 개별 법마다, 혹은 국가나 단체마다, 사회적 초년생, 생애 가운데 고용의 이전 혹은 초기 단계의 연령,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 등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적 목표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청년의 대상을 명확화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개별 정책마다 여건과 방향성에 맞추어 정책적 대상으로의 청년에 대한 적합한 연령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4-1〉 청년관련 현행법상 연령 기준

구분	연령구분	해당법령
청년	19-34세	청년기본법
	15-29세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15-34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3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기본법

154) 한국청년정책연구소(2016),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년정책연구소

155) 청년정책글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 검색결과, <http://www.youthpolicy.org>

나. 청년 정책 흐름

국내에서 청년과 관련한 문제는 1997년 IMF 이후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쟁점화가 되어 부상하였다. 2009년 글로벌 위기, 2015년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인하여 청년 고용의 문제가 지속되자 청년 고용 정책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청년 정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김기현 외, 2016)¹⁵⁶⁾

국내 청년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각 청년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개별 부처별로 이루어져왔으며, 일자리 정책 중심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타격이 큰 데다, 청년층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층위의 특성상 시간에 기반하여 미래 가치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것이 그러하다. IMF로 인한 실업률이 급증하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일자리 대책 전반을 논의, 조정하는 가운데 청년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자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실 소속으로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낮추며, 청년의 기회 제공과 고용 촉진에 보다 초점이 맞추었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가 자문기구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관련한 청년 정책의 통합과, 청년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구체화하였다. 그동안 청년 정책이 정부 주도의, 기성세대 중심의 청년 지원 및 특정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 패널, 청년 공론화 및 포럼 등을 통해 정책의 주체인 청년의 의견을 수용하여 청년의 정책에 청년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56)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4-2〉 2021년 중앙행정기관 청년 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수 및 청년 예산

분야	과제수	예산		
		'21년	'22년	(비중,%)
합계	376	238,338	246,493	
I. 일자리	148	82,197	77,496	31.4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70	63,490	56,58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56	12,052	12,428	
3. 일터 안전망 강화	10	26	176	
4. 공공채용 기반 구축 직장문화개선	12	6,630	8,312	
II. 주거	27	87,039	88,380	35.8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9	50,970	53,0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7	28,929	35,080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5	7,125	-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15	231	
III. 교육	107	56,793	67,523	27.4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43,907	46,468	
2. 총년의 미래역량 강화	59	6,041	13,927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6,422	6,78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423	346	
IV. 복지·문화	54	11,623	12,219	5.0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7	752	3,616	
2. 총년 건강 증진	8	6,057	2,689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360	813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5	4,454	5,100	
V. 참여·권리	40	685	874	0.4
1.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주도성 확대	9	11	9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3	12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9	160	139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육 활성화	18	511	714	

2020년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21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제 1차 청년정책기본 계획」을 수립, 발표함에 따라 청년 관련 정책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청년정책을 다루며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로 정책 분야를 구분하였다. 일자리는 취업과 창업, 일자리 안전망, 직장 문화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었다. 주거는 주택 공급과 전월세 비용 경감, 거주 취약 청년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 모델 등을 포함하였으며, 교육은 교육 기회 보장, 미래 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온라인 교육 기반 마련 등이 해당한다. 복

지·문화는 사회출발자산 형성,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취약계층 지원, 문화 등이었으며, 참여·권리의 경우 정책 결정 참여, 청년 정책 추진 기반, 청년 전달 체계, 청년 권익 보호 및 청년 교류 등 청년 정책의 세부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당 정책은 청년층이 잠재적 주역이므로 선제적 사회 투자의 차원에서 청년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자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3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진행해온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하여 개별 사업과 예산 현황을 보여주며 각 개별 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32개의 부처 등이 2021년 기준 308건의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21.6조 규모로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업의 수가 37.3%로 가장 높았고,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주거가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의 복지·문화와 관련한 과제는 전체 예산 대비 4.1%로 적으나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사업을 기관별로 살펴 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38개로 가장 과제의 수가 많았다. 복지·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분야별로 나눌 경우 대부분은 복지에 치우쳐 있으며, 청년의 문화 관련 정책 사업은 과제의 양은 많으나 매우 작은 예산 단위의 개별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년에 대한 개념이 청년들의 독특한 문화에 기인한 것과는 모순되는 양태로 청년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과제 발굴이 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비하다.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이 1999년부터 지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지만, 실제 취업률에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최근 청년의 삶 자체에 대한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분명하나, 역시나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률’, ‘실업률’과 같은 실적 중심의 정책적 방향성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기성세대가 이해하는 청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되어 한다.

청년과 관련한 정책 연구는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준으로 정책 사업 과제의 가장 많은 과제 수를 지닌 일자리가 실제 과제 수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주거의 경우 정책 과제 수가 7.8개이나 실제 연구는 2.6개였으며, 복지·문화의 경우 실제 과제의 수는 16.2건이나 기 추진된 연구는 7.9건으로 정책사업 대비 연구의 수는 50% 미만으로 이루어졌다.(임성근, 2021)¹⁵⁷⁾ 이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대비 각 분야별 연구가 충분히 선행된 상태에서 청년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림 4-1] 청년 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일부



157) 임성근 외(2021), 청년정책 연구기반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다. 지역의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접근은 지역 내에서의 청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점차 지역소멸에 관한 문제의 대두와 지역 분권 등으로 지역 정책 차원에서 청년과 관련한 정책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과 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으며, 인구감소문제가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 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핵심 인적자본으로의 청년으로 관심이 이동하였다.(박진경 외, 2020)¹⁵⁸⁾ 각 지역은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수립하고 지역 청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년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부터 고용을 비롯한 능력 개발, 주거, 건강, 생활, 문화, 권리 등을 포괄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 각 지자체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는 별개로 개별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지역 내 청년의 지역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청년 기본조례를 수립하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청년 정책을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안정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주거에 대한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진행해왔다. 다만 청년 관련 정책은 각 지역마다 전담조직의 여부나,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해왔다. 2020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청년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 연구원을 통해 청년정책을 위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사회연구실 청년정책 연구센터에서 청년과 관련한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지방정부의 청년관련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로 그 주제와 내용의 범위가 청년 인프라, 지역청년 커뮤니티나 일자리 지원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58)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4-3〉 청년 관련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V, 2020)

지역	청년 연령 정의	조례 제정 목적	조례 제정일
서울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5.01.02.
부산	18세~34세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	2017.05.31.
대구	19세~34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5.12.30.
인천	18세~34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17.06.05
	19세~39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016.06.07.
광주	19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 자립기반 형성	2015.12.28.
대전	19세~39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0.20
울산	15세~29세 (15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7.04.27.
세종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2.20.
경기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01.01.
강원	18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2017.11.03.
충북	15세~39세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	2016.05.24.
충남	19세~34세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6.02.22.
전북	18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2017.04.14.
전남	18세~39세	사회참여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 자립기반 마련	2015.07.23
경북	19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정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	2017.12.28.
경남	19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6.12.10.
제주	19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청년 간 교류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	2016.09.23.

[그림 4-2]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네트워크 자료집, [정부부처합동(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라. 청년 중심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청년의 참여와 주도가 3대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제인 정부가 구성한 청년 참여 거버넌스는 실제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청년의 의견에 기반하여 발굴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청년 정책과는 구분된다.

청년의 참여에 대한 관심은 2018년 UN 「청년 2030(Youth 2030)」 전략에서도 발표한 것과 같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화의 주체, (agents of change)로서 청년들의 주체성(agency), 탄력성, (resilience), 긍정적 기여(positive contribution)를 인식하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최우선순위로 ‘참여’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의 미래 주역인 동시에 사회의 현 구성원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참여’를 통해 역할을 기대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와는 별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청년들은 청년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중심으로의 정책이 마련되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청년 문화는 특정 사회와 맞물려 발생하는 특정 연령대의 경험에 대한 소산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가 서로 다른 기성세대의 경험 환경과 청년이 비록 한 사회에서 공존하더라도 그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청년토론회 결과는 청년에 대한 기성 사회의 인식의 격차를 청년 세대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한겨레, 2021)¹⁵⁹⁾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회가 청년의 삶을 너무 쉽게 정의’하며, ‘청년 정책과 관련한 논의의 구성원이 기성세대 중장년층’임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유통구조의 제도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참여는 기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참여 의사가 있거나 잠재적 참여 의사를 지닌 이를 대상으로 참여 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제 청년 참여 및 활동 관련 정책사업의 경우 2019년 과제 수 기준으로는 17건 9.3%, 예산 기준으로는 0.5%에 불과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는 참여 플랫폼을 구

159) 한겨레(2021), 기성세대 청년담론은 허구...우리를 주류 정치에 가두지 말라, 2021.9.17일자

축하거나, 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책 효과성, 인지도,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김기현 외, 2020)

이는 단순한 청년에 대한 참여 차원에서 접근을 넘어 청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년에 관한 주목이 청년 세대의 실업률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때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상으로의 청년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청년의 정책적 참여 역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청년이 개입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마. 능동적 청년 활동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

청년의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책적 방향성의 기제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능동적 청년’은 청년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청년이다.

2011년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처음 사용된 후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 청년을 아우르는 신조어는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청년들은 고용률의 하락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 상황들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 삼포세대와 같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세대로 인식되어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체 고용보조지표 2.4%p 하락 대비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는 6.4%p 하락으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지속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 역시 62만 8천명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보다 0.7%포인트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 감소분보다 청년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함에 따라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청년층을 지목하였으며, LG경제연구원은 청년들을 ‘잃어버린 세대’ 즉 실업과 저임금, 고용 불안을 안고 스스로의 능력 축적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좌절감이 확산되어 사회 활력을 저하하는 세대로 설명하였다.(이근태 외, 2017)

이처럼 사회적 여건에서 무기력한 희생양으로 묘사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형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세대 차원의 접근으로 인한 단일화는 청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안 모색

의 시도나 사례 발굴을 저지하고 청년에 대한 수동적 이미지만을 양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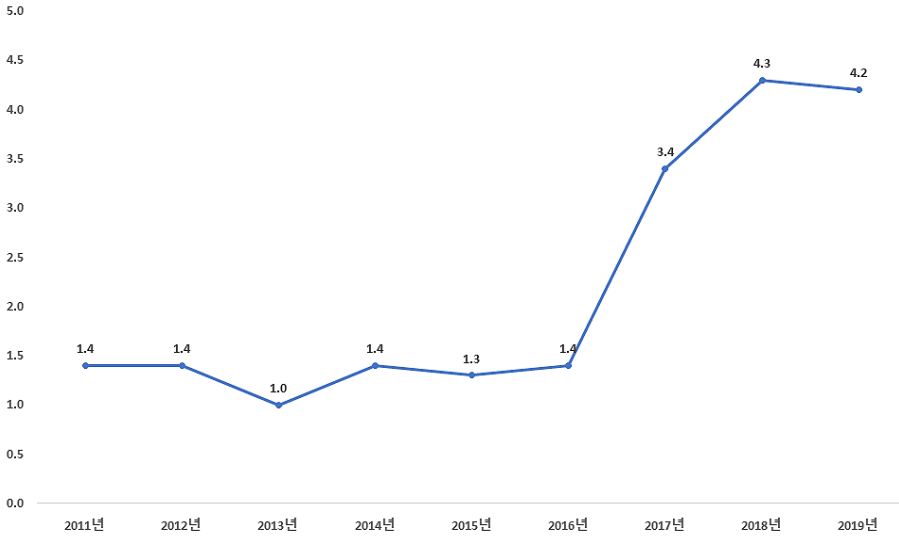
이지은(2014)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세대가 일반적인 학교와 직장이라는 과정에서 탈표준화 하는 현상을 주목하였으며, 김민선(2014)은 청년 실업의 실태에 관한 연구 가운데 청년들이 유동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삶의 양상을 이루는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의 대응 정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청년허브(2015)의 경우 청년들의 취업률에 주력하여 청년의 사회에서의 능력 개발이 아닌 노동 시장 중심으로의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오늘날 청년은 첫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직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틀을 깨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둘째, 외부 환경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셋째, 노동 중심의 피고용적 활동에 대한 일방적 순응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기반한 진로의 선택에 대한 주도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창업률이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창업 기업 가운데 20대 창업자 비중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30대 미만의 창업자 수는 2016년 116,815명에서 2021년 183,956명으로 57%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 즈음 이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을 통한 유도, 정책 목표 설정을 통한 강한 추진 등의 요인도 있으나, 청년들의 욕구, 의식들의 변화가 분명히 FGI 등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지역에서의 도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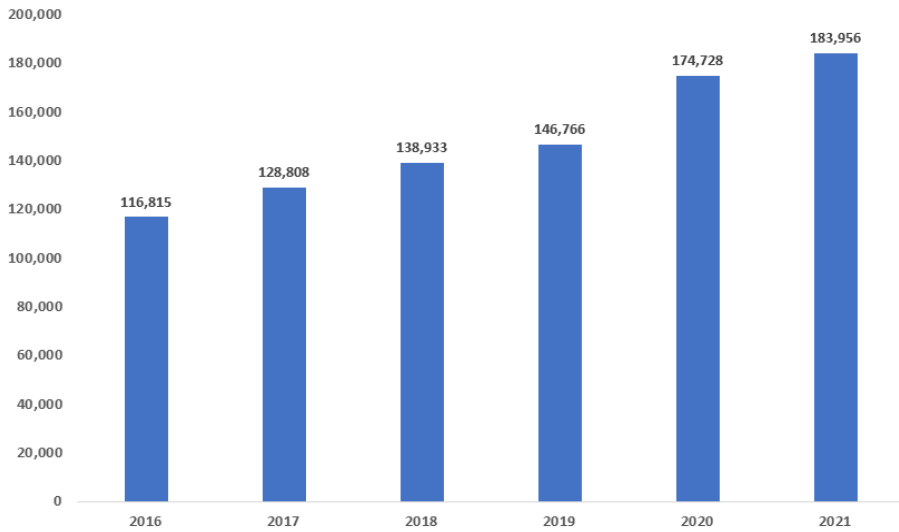
〈표 4-4〉 2011-2019년 전체 창업 기업 중 청년 창업 기업의 비중

구분	전체 창업 기업 수	20대(%)	30대(%)
2011년	1,638,739	1.4	14.6
2012년	1,661,481	1.4	14.6
2013년	1,893,716	1.0	13.0
2014년	1,985,396	1.4	15.6
2015년	2,001,674	1.3	15.0
2016년	2,030,987	1.4	14.3
2017년	1,747,791	3.4	21.7
2018년	1,874,532	4.3	20.1
2019년	1,962,665	4.2	19.0

[그림 4-3] 전체 창업 기업 중 20대 창업자 비중의 증가 현황



[그림 4-4] 30대 미만 창업자 수



청년의 외부 환경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청년은 방어적 개인주의를 토대로 자신들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질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이며,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과 냉정한 분업에 대응하여 계산적이고 전략적 생존을 택한다(이재경, 2020).

청년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 경향은 청년이 처한 여건을 일방적인 기성세대 시야에서 분석한 결과대로 추진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부터 청년 활동 자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발굴과 활동의 장려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2. 지역 내 청년 활동의 변화

가. 지역 청년에 대한 논의 현황

지역의 청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이동 요인으로의 진학과 취업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접근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노동시장이 열등하므로 지방 청년 인재의 유출이 이루어져왔으며, 지방은 스스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엄창욱, 2018) 2022년 3월 제 79차 인재개발 정책포럼 <지역위기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에 따르면 점차 수도권에 초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며, 지역 인재의 정책의 방향은 일자리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백영원, 2022) 논의에서는 지역을 벗어나는 인구와 해당 인구의 수도권 집중의 경향을 첫째,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경향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둘째, 대학 졸업자의 대학 소재지를 이탈하여 구직 활동 및 취업을 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하였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청년들이 지역 내 대학에 머무르는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50-75%의 인구만이 잔존하였으며, 나머지 25-50%의 인구는 수도권 혹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영원, 2022,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재구성) 청년층의 또 다른 지역 유출 요인으로 꼽히는 구직에 관한 현황의 경우, 취업을 위하여 지역 내에 지속해서 머무는 경우는 수도권에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7.8%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의 경우 대학 졸업 이후 지역을 이탈하여 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려 가는 인구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가 청년의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청년의 지역에 대한 활동 차원의 논의는 지역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양적 이동을 분석하는 경향성을 넘어 청년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한 동인을 찾는 연구로의 방향성 모색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지역 유인책으로의 지원금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질적 청년의 '정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역적 검증의 형태(김지훈, 2020, 김정임 외 2020) 혹은 지역의 주력 산업에 기반하여 지역의 청년 정착 실태 조사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0), 해당 논의들은 주로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근로 및 생산 활동의 안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나. 청년 관점에서의 지역문화 활동 분류

문화적 차원에서 지역 내 이루어지는 청년의 활동은 지역소멸을 해결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청년의 정주의 형태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주하는 청년들에 국한하는 지역 활동은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양상의 특정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 활동을 분류하여 본다면 지역의 정주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주 여부는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이 청년의 지역 내 정착과 정주를 목표로 할 경우 그에 대한 성과적 현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미정주 청년이 많아질수록 지역 위기가 심화되고, 지역 정주민구가 증가할수록 수도권 중심의 청년 활동에서 지역으로의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태도적 차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할 것이다. 정주를 하지 않고 지역 활동을 경험하거나 경험조차 하지 못한 유형, 태어날 때부터 지역에 정주하였거나, 혹은 직장이나 진학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수동적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정주의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 가운데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우는 지역 정주 유형 가운데에서도 일자리나 진학을 위한 수동적 유형이다. 실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없어 지역 자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유도가 필요한 지역 미경험자나, 지역에 대한 호감과 경험을 누적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정주하지 않는 청년들이 존재하며, 지역의 정주의 방식 가운데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여 정주하는 능동적 정주 유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4-5〉 청년의 지역 정주 여부에 따른 분류

지역 미정주		지역 정주		
지역 진입 전단계		수동적 정주		능동적 정주
미경험자	단기 경험 중심 (여행, 한달살기 등)	출생-지속 활동	직장으로 인한 강제적 이동/지역 선택	자발적 지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및 구전에 의한 지역문화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관광 서비스 중심의 지역문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 중심의 지역문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에 대한 소극적 경험 혹은 생활환경 중심의 지역문화 경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지역문화에 호의적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지역문화에 배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동적 지역문화 활동 가능성 높음

다. 청년의 지역문화 활동 태도 및 양상

지역의 문화 활동의 양상은 결국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지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자로 나뉜다.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청년들은 소위 잠재적 지역문화 향유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적 분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각기 다른 경험과 태도를 지닌 청년들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각기 다른 유형에 따라 선택적이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표 4-6〉 청년 지역문화 활동 양상

활동 여부	지역문화 미활동	지역문화 활동		
경험 여부	지역문화 미경험 태도	지역문화 경험/미활동	지역문화 경험/활동	
태도			수동적 태도	능동적 태도
타기팅 (대상적 해석)	잠재적 지역문화 향유자	-	지역문화활동가	능동적 지역문화활동 (오피니언 리더)

라. 지역문화 생산 주체로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가운데 지역 내에서 지역문화 경험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의 활동 주체로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며 지역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 태도의 청년 생산 주체를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문화예술 종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 이루어

지는 다양한 청년의 생활 활동이 지니는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지역 생활의 전반에 걸쳐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모종린은 지역문화 특성과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창의적 지역혁신가이며, 라이프스타일과 연결지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외적인 권위와 구속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사람과 교류를 즐기고, 지역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창업진흥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로컬 거버넌스의 시대에 맞춰 지역 중심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역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자원 및 특성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주도하고 견인할 창업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권지은(2022)은 이러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장소성을 재가공하여 이를 소비재로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주체로 보고, 스스로가 경험한 지역에 대하여 축적하고 체화한 것을 토대로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대중이 느낄 수 있도록 매개하며, 소비재로 재가공하여 대중에게 지역을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로컬크리에이터는 경제적 생산 주체로의 청년을 인식함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형성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외부문화와 외부 청년을 유입하는 역할, 내부문화의 확산과 가치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 지역에서의 생활 활동에 대한 ‘가치화’를 자발적으로 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핵심 기능은 첫째, 지역의 가치화, 둘째,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성, 셋째,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의 구축, 넷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의 문화 지형의 변화를 야기하고 만드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소멸 측면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발성을 띤 형태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차원에서의 지역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 매개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지역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사업가의 면모를 지닌다. 이러한 유형은 능동적인 청년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 활동을 하는 주체로의 청년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표 4-7〉 청년 문화 참여 유형별 분류

참여 유형		문화예술 중사/생산		문화예술 향유자	
강점/약점		지역 문화예술의 강점	지역 문화예술의 단점	지역 문화예술의 강점	지역 문화예술의 단점
지역 출신 지역 거주	출생 지역에 지속 거주	-지역민 중심의 문화 예술 인력 수급 -지역 내 인력 간 커뮤니티의 활성화	-양질의 인력이 집적 어려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의 부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제반 부족 -네트워크 및 정보의 한계 -지역 내 폐쇄적인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기회 접근성 저하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이 문화가 될 수 있음	-문화예술 향유자가 제한적 -지역 공공미술 등 향유자를 고려 않음 (낭비로 인식) -동태, 트렌드, 변화 등의 향유 정보 부족 -지역 내 문화예술 감시자 부족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소도시 → 광역시)	-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확대 -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혼잡도에 대한 진입장벽의 타협안으로 작용 -지역 자연 환경에 기반한 문화예술이 이루어질 경우 정착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지역 내 경쟁이 약하므로 수도권에서의 트렌디한 아이템 도입이 쉬움		-소도시에서 부족했던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도시로의 만족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내 문화관심 계층이 많을수록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밀리게 됨 -기반이 부족
수도권에서 지역 이주		-수도권의 문화예술 인력 포화로 인한 과열 경쟁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의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기회 확보의 가능성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로 지역 선택 및 매력도 인식	-창작을 위한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지역 내 문화관심 계층이 많을수록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밀리게 됨 -외지인 출신 문화예술종사자에게 배타적이며, 이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이 필요함 -지역청년과의 차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위축으로 소통이 어려움	** (특별히 문화적 향유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언급이 없음)	

제2절 청년 정책 사업의 주요 변화

1. 지역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정부 지원사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사업의 대상인 경우는 2018년부터 등장하였다. 소멸 위기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의 차원에서 청년들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해 1개 마을 1개 청년 그룹을 공모하여 청년 그룹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지원한다. 2021년과 2022년은 12개 마을 12개 그룹으로 지원을 늘렸으나, 2022년의 경우 지원 금액은 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청년마을 사업은 소멸 위기의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로 행정안전부는 청년 단체나 그룹이 지역 특색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 소멸 위기 지역은 청년층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마을 사업은 외지로부터 청년을 유입시키고, 지역과 연계한 경험을 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거주와 창업 공간을 지원받고 지역 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은 청년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새로운 활동 주체로의 청년을 수용하고 이들의 활동에 협조하며, 청년은 소멸 위기 지역 내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며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프로그램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단체가 공통적으로 한달살기, 두달살기 등의 청년의 일시적 지역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지원 단체는 프로그램에 모집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 기간 동안 지역의 여건에 맞게 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을 통한 청년 귀농인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펼칠 지역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을 탐색하며 지역 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창업진흥원을 통해 k-스타트업 창업포털을 운영하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은 권역별 12개의 과제의 선정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협업지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기업, 지역선도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간의 협업 제안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 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실제 이주하기 전 희망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여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일반형,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창업연계형,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사회적경제형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대상이 동일하고 거주 경험, 청년 창업,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생산 활력을 다루는 점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지원받는 청년은 임시 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 데 그친다.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주체는 마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별 마을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숙박 및 교육 시설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지원금은 국비 지원 50%, 시도 지원 50%로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청년의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진취성을 청년에게 가장 큰 권한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다. 기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 이주의 선배가 되어

지역 살기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마을에 정착하고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민과 이방인 청년을 매개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내 청년 살기 프로그램의 운영자를 지원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지역에 이주한 청년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정착과 함께 지역 선도 기업을 통한 경영 멘토링의 대안적인 방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대한 청년의 정착의 안정성 확보가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경우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지역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과 동일하게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경험을 시도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거의 부재한 지역에서의 청년 유치 단계를 다루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각 정책사업은 주관부처의 지역과 청년에 대한 역할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의 단계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기능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다. 이는 청년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이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청년 기반 여건과, 청년 정착의 방식에 단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정부 역시 청년의 지역 미경험- 지역 관심 및 경험- 지역 정주의 시도-지역 정착-지역 활동-지역오피니언 리더로 이어지는 지역 활동의 과정 차원에서 부족한 지원 부분을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사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자체, 기업 및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군산시-SK E&S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과 같은 거버넌스 지원사업도 있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SK E&S가 민간기업 최초 소셜 벤처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 프로젝트로, 군산 구도심인 영화동 일대를 문화, 관광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23개 소셜벤처들이 총 6개월간 사업을 수행하였다¹⁶⁰⁾.

160) 투데이에너지(2019), ‘SK E&S, 벤처기업과 함께 ‘로컬라이즈 UP 페스티벌’ 개최’(2019.10.14.일자 기사)

〈표 4-8〉 청년 관련 사업 비교

사업명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주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청년	청년마을 운영 청년 단체	청년마을 활동 참가 신청 청년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 청년
지원 내용	지역 이주 청년 단체 지원금 2억 원	지역 살기 프로그램 참가	권역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선도 기업 협업 프로그램 최대 1억 원 지원	청년 대상 임시 주거 및 연수비 등 지원 지역 유치 희망 마을 대상 지원비 지급(참가자 기준 1인당 최대 700만원)
지역 역할	청년마을 운영 청년단체 운영 프로그램 협력 방문 청년의 수용		지역 선도기업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 마련	마을 거주 여건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
지원 구조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대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년 일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 이주 청년 단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 (지역민)</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지역 정착</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대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창업희망 청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선도 기업</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협업 프로젝트</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로컬크리에이터 정착</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청년 일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마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역 정착</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지원 대상 </div>
청년 정책 방향	지역 이주청년의 지역 매개 역할 부여 청년 매개에 기반한 외부 청년 유입의 진입장벽 완화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추진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의 지역 창업 협력 기반 마련 청년 창업자 대상 협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멘토 선도 기업	청년의 지역 생활 경험 확대
지역활동 양상별 정책 사업	지역문화 활동양상			
	활동여부	지역문화 미활동	지역문화 활동	
	경험여부	지역문화 미경험	지역문화 경험/미활동	지역문화 경험/활동
	태도			수동적 태도
활동 양상별 정책 사업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참가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단체)

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가.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¹⁶¹⁾

<넥스트 로컬>은 첫째,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하거나(자원연계형),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지역 문제 해결형)하는 서울시 지자체 프로젝트로 2022년 2월 현재 3기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이나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나 판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넥스트 로컬>의 특이점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사업) 분야는 문화·복지·정보서비스 외에도 마케팅·유통, 식품·상품 가공 및 개발 분야로 지역 현황과 사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넥스트 로컬>은 지역소멸의 고민을 수도권 청년들이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창업을 시도하고, 실제로 정착 의향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1기 <넥스트 로컬>은 총 42개 창업 팀 가운데, 문화 분야(콘텐츠·플랫폼·공간)에서 총 18개 팀이 지역 창업에 성공했다.

<표 4-9> 서울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넥스트 로컬> 지역 문화창업 사례¹⁶²⁾

분야	사업체명	주요 사업 아이템	지역
콘텐츠	미플레이	쌀 그림 키트(촉감놀이교구)	경북 의성
	브로컬리컴퍼니	비건 화장품	경북 상주
	도트비	로컬 캐릭터 개발	충남 논산
	로컬프렌들리	커뮤니티 호텔 운영, 놀이 콘텐츠 기획	전북 군산
플랫폼	그랬대	DIY 키트	경북 상주
	디이 스튜디오	지역 행사 프로그램 기획, 지역특산물 리브랜딩 제품 개발	강원 영월
	딜리버리랩	식자재 유통, 중개	전북 군산
	메인테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전북 군산
	임퍼펙트	O2O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강원 춘천
공간	여기공협동조합	전동드릴사용법 및 집수리 교육기술제공	경북 의성
	소소리 연구소	코워킹 스페이스	경북 상주
	에듀커넥트	청소년과 청년 대상 커뮤니티 살롱	충남 공주
	오가닉씨드	야외 웨딩 서비스	충남 논산

161) 넥스트로컬 서울 홈페이지 검색결과 재구성, www.seoulnextlocal.co.kr

162) 서울특별시(2020), 로컬과 함께하는 미래, 청년x비즈니스를 담다 <NEXT LOCAL, 넥스트로컬 1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그림 4-5]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 2019-2021년 창업 지역과 브랜드(1-2기)



창업 선발 규모는 2021년 기준, 총 200명 내외의 100개 내외 창업 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개인 또는 팀 단위이다. 2022년 현재 선발 모집 중인 대상의 활동 지역은 강원도 강릉, 영월, 충남 공주, 전남 목포, 나주, 강진, 경북 경주, 문경, 의성, 경남 고성, 제주 총 11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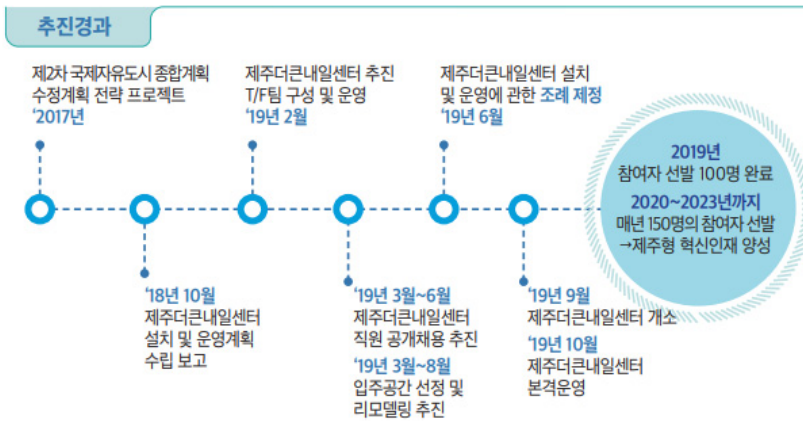
나. 제주 더큰내일센터 창업 지원 사업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지원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업이며 제주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100명 선발에서 시작하여 이후 매년 150여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제주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더큰내일센터 설립 배경¹⁶³⁾은 ‘1. 코로나 팬데믹, 금융 위기 등 지속적 청년 실업 상승, 청년 고용 수요 불균형 현상 심화, 2. 제주의 혁신 성장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 필요, 3.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실전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 4.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교육 훈련, 효과적인 취·창업 연계를 위한 파격적 지원 시스템 필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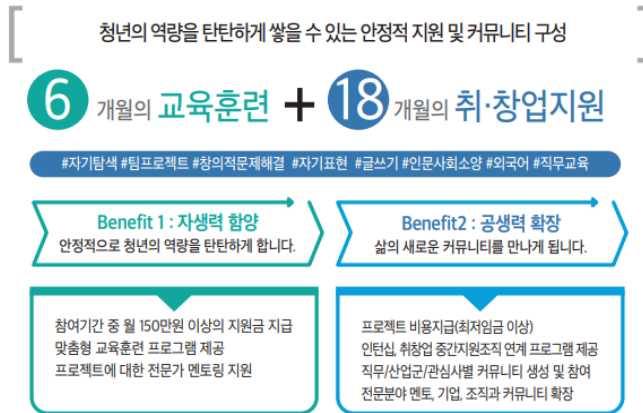
163) 제주특별자치도(2022), 더큰내일센터소개책자

[그림 4-6] 제주더큰내일센터 사업 추진 경과¹⁶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도·내외 미취업자, 도외 미취업자의 경우 25% 이내 범위 내에서 선정'으로 특이한 것은 외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더큰내일센터 사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며 지역에서의 역차별과 열린 청년오픈 사업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제주 외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다.

[그림 4-7] 제주더큰내일센터 혜택¹⁶⁵⁾



지원 내용은 교육 훈련 수당 및 프로젝트 추진비 월 100~150만 원 이상 지원, 지속적인 진로 탐색 기회 부여를 통한 진로 결정 기회 제공, 맞춤형 전문 교육, 직무 체험, 경력

164) 제주특별자치도(2022), 더큰내일센터소개책자

165) 제주특별자치도(2022), 더큰내일센터소개책자

개발 기회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 혜택은 교육훈련과 취·창업지원인데, 이 이상의 혜택은 사실 더큰내일센터 선후배의 네트워크이다. 더큰내일센터는 창업에 있어 노하우와 경험을 서로 주고받으며 상생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6개월 기본교육과정, 2단계 6개월 진로모색과정과 3단계 진로실현과정(12개월)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기업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림 4-8] 제주 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¹⁶⁶⁾



또한 제주 지역에는 창업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이러한 더큰내일센터 이후에 ‘창업청년사관학교’ 등 타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다. 단,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찌면 자생력에 제한을 준다는 평도 있고, 또한 기업별로 더큰내일센터에 대한 호불호가 매우 큰 편차를 주고 있다. 이는 기업의 니즈와 청년의 요구 혹은 역량의 매칭이 프로그램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과 별도로 참여 기업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다음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¹⁶⁷⁾이 가능하다.

166) 제주특별자치도(2022), 더큰내일센터소개책자

167) 제주특별자치도(2022), 제주더큰내일센터 2022년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장, 2022.08.01

〈표 4-10〉 더큰내일센터 기업 신청 사업 유형

구 분	사업 유형	비고
유형1	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주3일) 실습생 연계	더 탐나는 프로그램 (기존 정규사업)
유형2	프로젝트 기반형 인턴십.일반 (주5일) 계약직 채용	

구 분	기간	기업 역할	탐나는 인재 역할	센터지원금	기업부담금*
유형① 실습 (주 3일)	6개월	프로젝트 기반 과제운영	교육성 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	월 150만원 (탐나는인재에 지급)	없음
유형② 인턴십 (주 5일)	6개월 (연장 시 최대 12개월) *디지털 전형 인재는 5개월 (연장 시 최대 11개월)	실무 기반 인턴십 운영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 수행	월 150만원 (기업에 지급) - 급여 先 지급, 지원금 後 정산	'22년 기준 월 급여 일부 727,940원 이상 (총 급여 2,277,940원 이상)

더큰내일센터의 사업을 통해 제주 도내 기업과 청년이 연계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 그리고 외부 인력의 도입과 유출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림 4-9] 제주 더큰내일센터 행사



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¹⁶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1년 안산에서 처음 개교하여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운영되는 청년 창업지원기관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개교하여 ‘창업 전(全)과정을 일괄 지원’ 한다는 창업 패키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는 이전의 창업지원기관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총괄하는 사업이지만 전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기에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은 39세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 사업계획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그리고 마케팅 지원의 지원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4-10] 청년창업사관학교 패키지 지원 방향



[그림 4-1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과정 및 내용



168) 청년창업사관학교 검색결과, https://start.kosmes.or.kr/yh_ysi001_001.do

지원 내용은 선발 및 입교,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이중 코칭은 실무중심 다중코칭체계와 1:1 맞춤형 코칭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특화 코칭을 통해 창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 중 특화 코칭은 마케팅, 회계/세무, 경영관리, 자금 조달, 시제품 개발, 인사 노무, 지식재산권, 디자인, 일반법률, 금형 설계, 무역 실무, 시험 인증, 피칭 역량 강화, 크라우드 펀딩, 투자 연계 등의 분야를 코칭하게 된다.

○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 김소은 센터장 인터뷰 주요 내용

안산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스파르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국에서 패키지형 창업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토스, 직방 등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나온 콘텐츠이다. 제주는 20개 회사가 연계되었고 청년에 한해 1억 지원하고 100학점 이수하게 되는데 이수 과목이 쉽지 않다. 특히 지역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사업 분야가 다른데 제주는 오픈되어 있다. 또한 LINC, 더큰내일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관련 시설들이 제주에는 많은데 청년센터 등은 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는 일단 제조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기에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매우 다양한 소프트한 기획도 포함된다. 관광객 인기 상품인 제주 돌빵 '바솔트'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성공사례이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고 싶은데 지역 대학이 우선 교수들이 더욱 노력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별되는 기본 학생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지역과 전국의 타 유사 사업의 중복보다는 단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 관계자 인터뷰(연구진 촬영)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제5장

대학과 지역문화에 대한 청년층 인식 조사

제1절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및 현황 분석

1.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심층면접

가. 청년층 심층면접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국내 대학의 주 교육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우선 실시하였다. 2022년 3월부터 전국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거점 광역도시 및 시군구 이하 중소도시까지 총 7개 권역 12개 도시 청년 35명, 기관관계자 11명 전체 4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 선정 시, 각 지역별 대학이나 문화재단, 진흥원 등 문화와 밀접한 분야 종사자들(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그중 일부는 별도의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며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5-1〉 청년층 심층면접 목록

구분	청년 대상	기관관계자	진행 일정	
대구	2	3	2022.3.22	
강원	춘천	4	2	2022.4.19
	속초	2	-	2022.4.20
	고성	1	-	2022.4.20
	광주	5	-	2022.4.28
전북	군산	5	-	2022.5.10
부산	4	2	2022.5.20	
경남	거제	1	-	2022.5.21
충북	진천	1	-	2022.6.7
	청주	5	2	2022.6.8
제주	5	2	2022.9.13	
전체	35	11	-	
	46			

나. 심층면접 주요 내용 설계

본 연구진이 각 지역별로 청년층들의 지역문화 인식 심층면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한 주요 내용은 첫째, 심층면접 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역 대학과 지역 문화(향유) 실태를 확인할 것, 둘째, 각 지역별 대학 및 지역문화 향유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그리고 셋째, 청년들이 대학과 지역문화 실태를 배경으로 향후 대학과 정부에 희망하는 내용을 확인할 것이었다.

〈표 5-2〉 청년층 심층면접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대학 교육과정 전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지역(성장 지역) 전공 대학 입학 전후 지역문화예술 향유 경험 인턴 및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경험
문화예술 향유 경험(지역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문화향유 정도 지역 내 대학가 문화향유 내용(대학 내 포함) 지역 내 문화향유 내용 타 지역 문화향유 내용 문화향유 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여부, 내용) 주변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혹은 일자리 경험자에 대한 평가
지역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측면에 대한 평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등)에 대한 인식 향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식(정착 욕구)
대학 및 정부에 희망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 바라는 점

이와 별도로 지역 문화와 관련된 대학, 문화재단, 진흥원 등에 종사 중인 전문가(기관 관계자) 또한 가능한 한 청년층 연령대로 섭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진행한 청년층 심층면접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지역과 지역문화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과정의 주요 관심은 대학과 지역문화 주요 구성층으로서 ‘청년’이므로,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주요 내용은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다.

〈표 5-3〉 문화 분야 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측면) • 지역 문화예술 분야 전반적인 상황
지역 문화예술 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교육 현황 (교육 대상의 연령대, 내용의 다양성, 강점 및 약점 등)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관련 대학(전문대학 이상) 현황 (교육 및 일자리)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관련 대학(학과, 사업단 등) 및 외부 기관(공공, 민간사업체 등) 간 협력 사례(여부, 내용)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및 일반인 대상 교육 현황
지역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상황 • 관련 일자리 최근의 변화(창업 스타트업, 기관 협력 사례 등)
대학 및 정부에 희망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관련 필요 사항 • 해당 지역 문화예술 공공 분야 필요 사항 • 해당 지역 문화예술 민간 분야 필요 사항 (사업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지역 수도권 집중 현상이 높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식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분산하는 것이 좋은지, 독자적인 지역 특화 문화예술 생태계 성장을 돕는 것이 나은지 등) • 지역 대학 및 문화예술 기관 간 협력 방안(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그림 5-1] 청년층 심층면접 진행 현장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다. 청년층 심층면접 주요 결과

1) 문화향유 및 교육 경험

① 지역 내 문화향유 경험

우선 심층면접자들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경험을 점검하였다. 대체로 서울에 비해 지역 규모가 작은 광역시나 시도 이하(시군) 지역 거주자일수록 문화를 향유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지역에서도 점진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어 왔고, 관련 시설들도 계속 확충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것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화향유의 서울 중심성은 비교적 쉽게 확인되었다. 서울로의 이동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 문화향유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과의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문화향유를 위해 여유 시간에 서울로 간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광역시와 시·군·구 지역 사이에는 문화향유 내용과 빈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규모가 작은 시·군·구 지역에서는 문화향유를 위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광역시로 주로 이동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문화예술계를 더 깊이 보게 되니, 자꾸 다른 지역을 더 가게 되고, 우리 지역은 더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 “지역 전시는 아직도 잘 안 가게 돼요. 뭔가 전시나 행사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가 오면 보러 가게 되는데, 그런 건 잘 없고...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서울을 더 가요.”
- “여기서 하면 퀄리티가 낮아서 재미를 타 지역만큼 많이 못 느끼는 게 커요. 규모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어느 축제를 가나 거의 비슷하고 재미없어서 안 가요.”
- “여기가 전국 지역 중에 영화를 보는 비율이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가장 높은 편... 그런데 그게 영화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영화관 말고 갈 데가 없어서, 영화 보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공감이 돼요.”
- “영화제만 해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인프라도 부족하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갈 정도예요.”
- “지역 간 교류도 솔직히 우리 지역은 교통편도 별로 안 좋아서 결국 서울로 갈 수밖에 없기도 해요. 지역 간 상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인터뷰 주요 내용

- “대학 주변에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지역 밖으로, 주로 서울로 가게 된다.”
- “지역의 전체적인 인프라 자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 외곽은 인프라가 더 하락하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
- “지역의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조금의 부족함을 느낀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못 들르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못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 “대중적으로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덜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자연 빼고는 모든 게 결핍되어 있다고 본다. 문화 기반 시설이 아예 전무하다.”
- “광역시로 오면서 사실 문화적인 걸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00에 있으면서는 문화적인 거를 접할 기회가 잘 없었고, 내가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잘 몰랐어서.”
- “주로 1달에 1~2번 서울 전시를 보러 가요. 전시업체도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다더라고요. 지역작가들 섭외해서 1~2번 전시하는 것도 구색 맞추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 “00에서는 문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관심 분야가 전시인데, 즐길 거리가 없나보다 생각하고 더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광역 지역은 일단 많으니까 돌아다녀 보면서 공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다양하게 관심사가 넓어진 거 같아요.”

② 지역 내 문화교육 경험

지역 내 문화교육 경험은 크게 학교를 통한 교육과 학교 외 교육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학교를 통한 교육의 경우, 지역 내 대학에도 문화 예술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 학교를 통해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에서의 문화 활동 경험 공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외 교육의 경우에는 각 지역 문화예술재단이나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한 강의 수강,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등 지역 내 문화 사업을 통한 접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전공이 예술이나 문화 분야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졸업 후 원하는 문화 분야로 접근하게 되는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문화예술은 특징이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강한 거 같고, 경제적인 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방향을 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대학원을 가본 거였어요. 문화 행정 관련된 학교들 중에 그때는 원래 다녔던 학교로 가고 싶어져서 문화예술학과 가게 된 건데, 야간 협동 과정이랑 주간 학생 대상이 있는데, 막상 미학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재미는 있어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장학사업, 연구 보조 이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단까지 이어진 거 같아요.”
- “여기는 음악이 학부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대학원도 있고, 서울은 예술까지도 하나까 나가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 “비전공자는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대학원 공부 과정 중에 문화재단까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 “본인이 목표만 정한다면 충분히 영상도 센터가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문화기획자를 키워내는 사업들이나 교육여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 서울에서는 물론 기회가 더 많긴 한데,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가? 실험의 기회가 부족한가? 생각을 많이 한다.”
- “저는 교육 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 다 제 경험을 만들어주고 좀 경력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게 저는 지역 문화예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라는 걸 먼저 꺼내줘서 고마워요. 생활문화가 뭔지 잘 몰랐어요. 먼저 시민들한테 제서를 해주고, 시도를 해주는 연습 단계 사업도 있고, 다음 단계도 있고, 심화 단계도 있고, 시민들을 문화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교육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지역 내에서의 문화교육 경험이 대폭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시각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실제로 대학 교육 기간 중 지역 내 대학이 포괄할 수 있는 전공 학과에 한계가 있어 지역 밖으로 나가는 선택지를 고민하기도 했으며,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인해 대학 전공 교육의 전문성이 희석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도 강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에 강사를 초청하거나 교류를 위해 전문가를 부르려고 해도 교통비나 인프라의 한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서 살펴본 지역 내 문화향유 경험에서의 한계와 문화교육에서의 한계 등은 결국 지역 내에서 문화에 관심이 있고, 이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지역 밖,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역에서 유년시절부터 많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고, 지역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 더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높았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예술적으로는 문화예술적으로는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고 제가 찾더라도 품이 작아서 제가 선택할 여지도 별로 없긴 해요.”
- “가르쳐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여기 살면서 찾아 찾아 서울을 왔다다 갔다가, 거기를 출퇴근을 하듯이 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살면서 하려면 이 방법밖에...”
- “관련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갔었어요. 가는데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서울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 “과가 갑자기 다른 과와 통합되면서 정보는 더욱 도움이 안 되고, 예산도 줄고, 조교도 힘들고, 프로그램도 기획이 안 되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다 가니까 ... 미대도 갑자기 체대랑 합쳐서 미술체육대학이 되고, K-커뮤니케이션학과?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과들도 생겨서,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다 비슷해져 버린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 “대학들도 급하게 학과 통폐합을 하느라 그냥 몇 개 학과를 합쳐놓고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수업을 들어가 하고, 알아서 (차후 진로 등)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이..”
- “문화 기획 쪽이나 영상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학창 시절 때 이런 거를 이미 경험하지 못해서 대학 진학에 고민이 많았어요.”
- “학창 시절이나 문화적으로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좀 더 문화적인 걸, 더 많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 “강사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교통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잘 못 오시고 저도 잘 못 가고...”
- “학교도 강의, 교육 때문에 타 지역에서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교통비만 해도, 수업을 듣는 우리도 죄송해요. 교류를 하려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수업도 있어서 괜찮지 않나 싶어도 대면 교류 힘이 있잖아요...”
- “기획 입문, 테크닉, 그런 교육 사업은 잘하고 있는 편이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비전공생들이 들으면 충격받고 좋아할 거 같은데, 전공생들은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정도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수업 같지는 않죠 또...”
- “지역에 지자체 등에서 오픈한 강의들은 있는데 강사 약력도 소개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에 양질의 믿을 수 있는 강의를 필요해요.”

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① 문화예술 활동 기반으로서의 지역성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층들은 ‘지역성’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주지역 또는 출신지역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성을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다. 연구진은 지역성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층위에서의 인식을 폭넓게 수집하고자 하였다.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활동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타 지역에서 출생했거나 대부분의 시간에 거주하다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 또는 대학 진학 및 취업 활동 등을 이유로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잠시 거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등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

문화예술 활동 기반으로서 지역이 갖춘 특성 혹은 유인점은 대부분 그 지역만이 가지

는 공동체성, 즉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등으로 언급되었다. 해당 지역 출신으로 계속 거주하며 활동해 온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점도 유인으로 작용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공동체에 만족을 못 하면 다 떠나더라고요. 서울도 결국은 그런 거 같아요. 지역에 뭐가 없다 없다 하지만 인프라와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가 결국 중요하다고 봐요.”
- “저는 여기에서 나고 자라서 결국 영상을 갖고 먹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청년들이 같이 잘 해보자는 욕심과 열정이 있어서고요.”
-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서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 있어서 굳이 떠날 이유도 없고요.”
-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거든요. 안 되는 걸 저희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조금만 변화시켜도 아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실제로 변하고 변화를 느낀다는 점이 정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 “지역은 아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도전 거리가 많다는 게 장점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죠.”
- “수도권이란 다른 건 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 지역 고유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았다든가, 지역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라든가, 카페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내더라도 지역과 관련 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봐요.”
- “아무것도 없었고 황폐했어서 뭔가를 하면 확실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이런 걸(지역 인프라) 활용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카페를 창업했었고, 문화 활동들을 시작했죠. 저는 창업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미술인이었어요. 내 작업을 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기획자 영역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한편, 많은 직업과 직무들이 점차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고 있어 앞으로는 굳이 서울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서울을 경유하였다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서울의 경쟁 환경에 대한 소외감 또는 피로감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지역이 문화활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삶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느끼기 어렵고, 소외감을 느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향, 또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등 특정 지역만의 특색에 이끌려 역정착하게 된 경향이 동시적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서울은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학교생활도 여기는 생존을 위한 전투장이구나, 그런 느낌,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 같고. ... (지역에 오니) 서울에서 못했던 걸 좀 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거 같아요.”
- “서울은 일감은 많았는데 사람이 치이는 게 너무 싫었고, 지치더라고요.”
-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착하게 됐어요. 산, 바다, 호수를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컸어요”
- “서울이 답답하기도 했고,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결국은 살게 됐어요 ... 서울은 쉬어도 바쁜 느낌인데, 여기는 훨씬 여유롭고 창작자로서 트이는 느낌도 훨씬 크고”
- “서울은 사람들이 딱딱하더라고요. 고립되는 느낌이 많았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거는 저 혼자 가는 건 잘 안되더라고요. 내가 의지가 있어도 집 밖으로 한발 내딛는 게 어렵고, 저는 서울은 기회가 많았는데도 구미 당기는 뭘 잘 가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 “지역으로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서울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해 자리는 조금 적고 해서 사람이 되게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 저한테 6개월 동안 100만 원 줄 테니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고, 면접을 보면서 너 아니어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되게 쉽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고 좀 물건 취급하고 쉽게 쓰고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 “서울이 워낙 넓고 다양하다 보니 중심지로 들어가긴 어렵고 결국 외곽, 신림, 고시촌, 방값 싼, 그런 것들로 외곽을 전전하게 되니까, 지역 소외는 서울에서도 많이 받는다, 그런 외로움 때문이라도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지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마인드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 꿈이 디지털노마드여서, 군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② 지역 내 문화예술 일자리

가. 취업 양상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의 상황과 현실적이지 않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편이었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없어 일을 구하기 위해 지역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거의 모든 자원이 서울 혹은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는 예술 기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험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언급도 많은 편이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솔직히 문화예술은 수익 따지고 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디자인 해 달라고 연락 와도 너무 터무니가 없이 가격을 후려치고, 인건비도 인쇄비도 모든 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가 서울에서 일하면 이렇게 돈을 썼을까 해서 알아보니 서울도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저가에...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 “고용 문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다 계약직이고, 그런 거 반복적으로 보면서, 계약직들은 일단 죽도록 하고, 뒷사람은 안 바뀌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바뀌고, 갈려 나가고, 또 바뀌고, 왜 그럴까요? 다들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 “너무 정으로만 일하려는 마인드도 많다고 봐요. 문제죠. 인건비나 금액 같은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게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깐요. (중략) 나이 많은 부장은 젊은 계약직만 알아내고, 계약직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 “사실 문화예술 쪽 어디를 봐도 다 박봉이거든요.”
- “서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서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원하는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고 싶으면 서울에 갈 수밖에 없어서...”
- “지역살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화생산 쪽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을 못 구해서 원주로 간 사례가 있고, 아이 키우는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죠. 취업의 폭이 넓지 않아요.”
- “예전에는 지역에서도 활발했는데,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중심으로 되면서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나 영상실 쪽에서는, 과거에는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영화사가 지역에 있는 곳이 거의 없을걸요. 다 서울에 옮겨 갔죠.”
-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모든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몇 년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창업 양상

문화예술 또는 문화 관련 창업 등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예술가로서의 작업을 시작하거나, 문화 사업을 시작하는 활로를 찾는 사례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후발 주자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지원사업에 유리한 선배 예술인들의 장기 사업 수혜, 또는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공고하고 다소 폐쇄적인 네트워크 등에 신진, 청년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자주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업 참여 이후 보다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원사업 정도에만 그치고 독자적인 비즈니스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라는 의견들도 잇따랐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이 지역은 2018년 이후에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을 일시켜 세워야 할 필요가 많았고, 다행히 그 후에 로컬라이즈 사업들도 생기고, 사업들이 더 생기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스타플레이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자체나 로컬라이즈 같은 외부영향도 있었지만, 지역의 운도 있지 않으나 싶습니다.”
- “청년공간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00문화재단 레지던시 지원을 받아서 3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하게 된 게, 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청년 조례도 생기고 하면서 청년 활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 “처음에 팀을 결성하고 운영할 때 제일 문제는 역시 자본... 결국 돈인데, 그때는 배포로 타파해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 00문화재단이나 00문화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업 당선도 되고 작업도 하면서 정기 연주회도 하고 회의나 간담회도 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불러주시더라고요.”
- “다음 후배들이 그 기회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게 선배들은 모르는 척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여기는 선배들이 너무 달려드니 후배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대학이나 지역이나 프로그램(일거리) 혜택도 주로 신인 작가들은 기회도 없죠. 안타까워요. 대부분 기성 작가들 위주로 돌아가고...”
- “기회가 있으면 후배들한테 그런 거를 좀 배우게 하고 싶고 그래야 00 문화예술계가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들어오면 내 거야 하고 놓지 않거든요. 후배들한테 좀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일은 같이 해볼래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 “사업이 끝났을 때 역사를 할 때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하는데 ...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비즈니스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지역살이를 사업화하는 건 완전 포기하게 됐기도 해요.”
- “2년 있어 보면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서울은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생기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는 게...”

다. 취·창업 일자리의 주요 어려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경우,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거나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는 굳이 타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입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 기반의 기존 네트워크가 너무 공고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서로 형성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사람들이나 공간이 숨어있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찾아내야 한다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재단에 있는 청년문화인력양성과정을 기점으로 진입이 된 케이스인 거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 발견도 하게 되고, 단체에서 내가 인프라도 없고 잘 모르겠고 모호한 과정에서 불안감이 많기도 했고,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런게 컸었는데, 동료에 대한 갈증도 있죠..”
- “외지인이다 싶으니 더 폐쇄적인 거 같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니까 외부 사람 만나는 게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힘든 거 같아요. 공고한 네트워크 말고 새 사람을 만나고 싶은 측면의 결핍?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겠죠”
- “그들 사이에서 정보가 돌지만 이게 한 번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공고가 이렇게 밖으로 안 나와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어떤 수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미디어 센터의 존재도 모르고”
- “학교 오페라 안에서도, 학교 작은 연주회 안에서도 교수님 클래스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교수님 클래스에 없으면 기회가 없고.”
- “아무래도 토착민 분들은 외지 사람들에 대해 방어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 “이 지역은 무조건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쓰고, 다른 지역도 근처 인근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 “소위 전통, 역사 도시, 이런 곳은 뭐 이런 걸로,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하는 벽이 있어요. 씬마이 기질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청년들한테 좋은 듯해요.”

이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지역에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주로 사업주나 대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피력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로도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역을 떠나감으로 인해, 일할 사람을 뽑기 어려워지고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코딩, 기획, 쇼핑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코로나 때문인 건지 정말 지방에 사람이 없는 건지. 사람인 같은 데 올려도 확실히 지원이 활발하다는 느낌이 부족해요. 학생들도 지역을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지방에서의 삶을 원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뽑기 어렵고 팀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 “초기 스타트업들이 살아남는데 참여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고..”
- “정규직으로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계약직을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율도 많이 줄기도 했어요.”
- “협회에서 청년들이 예술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이런 걸 열었는데, 협업을 하려면 연극 쪽으로밖에 접근을 못 해요. 왜냐하면 방송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갔거든요.”

③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나 기회가 적다는 점 이외에 활동 자체에서 느끼는 고민으로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독창적, 독자적, 로컬라이즈된 문화적 생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수 피력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확충되어야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이나 관련 산업이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민을 깊이, 많이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청년들 대부분이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에 대한 토로도 있었다. 또한 지역마다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문화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지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지역이어서 빨리 성장이 보인다는 게 장점이지만 한데, 지역 내부만을 바라봐서는 한계가 금방 온다, 외부로 확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사회적 다양성이라든지...이제는 이슈가 지역 내에서도보다 더 넓게 던질 수 있는 걸 구축해야 3-5년이 지나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로컬라이즈 같은 사업도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런 게 없었으면 이 지역이 이렇게 잘 났을까도 싶어요. 다른 지역도 이제 자생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여기서 과연 몇 팀이 살아남을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아요.”
- “서울은 유니콘이나 스타트업들, IT도 다 서울 중심으로 몰려 있고, 지역에서는 튀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예 없다가보다 공유를 잘 못 해서라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확산도 하는, 그러다 보면 지역만의 새로운 문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해요.”
- “지역에서 창업 지원사업도 생기고 하면서 창업을 하고 영상작업을 배우기 시작하고, 영상 해봐야지 하고 공부도 하고, 지역에서 크리에이터들 모집해서 로컬콘텐츠도 만들어보고 교육도 해보고 외부 크리에이터들 불러서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역에서 로컬에서만 돌 수 있는 생산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 “자기 지역에 대해 그려내고 싶은 만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작업을) 지역 독립 서점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 콘텐츠는 잘 없어요. 작가들은 자기 지역을 얘기하는 이유, 사람들이 지역을 가는 이유, 그런 콘텐츠적인 걸 많이 고민해요. 작가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만 신경 쓰고 있어서, 지역 독립 서점이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주요 내용

- “사실 막 영화인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3~40대 분들을 만나도 막 희망적인 얘기 안 해 주시거든요. 그냥 여기가 사실 중간 지점이다. 서울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냥 〇〇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자기들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20대 중간으로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고...”
- “테크닉도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데, 서울과 기술 격차가 심한 부분도 있어요. 국내 최대 영상 커뮤니티나 해외 사이트 통해서 영화도 그냥 번역하고 독해해서 짧은 지식으로 해외포럼도 막 뒤졌던 것들이 테크니션 부분에서는 사실 노력했던 부분이었어요. 전공을 해서 배운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독학으로 배웠던 것들도 도움이 된 거 같고요.”
- “생활문화는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마다도 다를 것 같아요. 생활문화라는 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여기서 생활이지만 저기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고요.”

한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과 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기존의 교육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직접 경험을 쌓거나,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예술가, 활동가들과 단체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은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특정 행사나, 현장의 품을 배우는 게 먼저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에 대한 고민이 약한 경우도 많은데, 저는 연구를 통해서 공동체 수요를 채우기 위한 지원사업 공모도 넣고,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 그런 과정 자체에서 학습이 돼서 그런지, 그 순서를 잘 배운거 같아요”
- “실무에 대한 거는 대학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예술 쪽으로 나왔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배우고, 대학교에서도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 “저는 지금도 정책연구 한 5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에 진짜 다양한 것들을 깊이 있게 배우는 데는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예술인 복지라든가, 문화향유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양하게 배우는 거 같은데, 정책 제안 때 추진전략을 세워보기도 하니까, 나도 기획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 “한 2년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장단점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서울은 국악, 대구는 오케스트라, 부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앙상블, 금관 있는 팀들이 월등히 많았고, 그래서 주 장르로 결정하게 됐어요.”

인터뷰 주요 내용

- “광고홍보는 현장감이 정말 중요하고, 실무를 배우고 싶다는 부분이 컸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제일기획 출신인 거지 대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직접 하는 부분들에 대해 와닿지는 않았고,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찾았던거 같아요. 지역 00마을이 있는데, 그곳 상인분들 이야기를 아카이브하고 출판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재밌다 이런 것으로도 일을 할 수 있나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된 거 같고, 내가 사는 00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움직여봤던거 같고.”
- “청년문화인력양성과정을 저희가 맡아서 해봤는데,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이제 문화인력들의 욕구가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파트에 대한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전시면 전시, 공연이면 공연, 전문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생기고 기관들도 많아지니까 경로도 각각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 같고”
- “관심 있는 분야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추천할 거 같아요. 모이고 가 보는데 중요한 거 같아요.”
-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도 보고, 직접 보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림 5-2] 로컬크리에이터와의 면담 현장(대구)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

① 대학의 역할 정비 필요성

가. 공간 인프라 확대 개방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유희공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점에서 각 지역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데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대학이 갖춘 공간 인프라를 일정 기간만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열어주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또한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와 지금까지보다 더 획기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은 많은 우수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집중시키게 되면 지역 민간 차원에서의 기업 활동 기회가 줄어들고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림 5-3] 로컬크리에이터와의 면담 현장(춘천·군산)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인터뷰 주요 내용

- “대학에 빈 공간, 빈 강의실이 있어도 잘 안 열어주는 측면이 있는 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일부 개방을 해줬었는데, 카페밖에 갈 수가 없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줌으로 할까 하면서,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 “지역 청년들에게 뭘 더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더 하면 좋겠어요. 연대의 장, 어떻게 지역과 협력관계가 더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 “지역과 대학 자체로 교류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학은 지역과 교류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느껴요. ... 지역과 교류하는 것들도 권장하고, 연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대학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나 해요”
- “대학이 외지인들, 토착민들을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대학이 장인을 키우는 대학으로서 지역 기술도 연구하고, 그런 역할을 학교가 해주면 지속성도 있고, 대학 수요도 해결할 수 있으니...”
- “대학도 창업 공간이 있지만, 대학 안에 있는 센터나 조직을 관리하고 리드하는 측의 방향성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같아요.”

인터뷰 주요 내용

- “학생 창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지역 대학들은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만남, 이런 공간, 그런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배 창업가들이 선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모범적인 사례 다루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한 경험이 사례 같은 걸 공유하면 창업가들, 청년들이 나도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학의 역할은 그런 스토리들을 공유하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네트워크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와 공간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대학 간 연계도 좀 아쉬웠어요. 부산대면 부산대만 많이 알게 되고... 예술대학이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사실 모든 학교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특성이 다르고 다양하게 알아보고 싶고 나눠보고고 싶은데 학술대회나 포럼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만 돌아서. 학교 간 연계는 좀 아쉬웠어요.”
-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을 찾아가기는 어색할 것 같고, 00대 주변 보면 지역청년창업지원센터 통해서 멘토링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뭔가 할 것들이 있는데, 멘토링도 하시고. 대학이 (네트워킹이나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어요.”
- “행정적으로야 대학으로 주변 편하고, 00대로 위탁이 가고, 사실은 다 민간 영역인데, 그것들을 대학이 품어서, 대학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단체란 말이죠. 청년센터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사실 대학에 다 주는 게 한계라고 봐요. 민간에도 기회를 줘야 크는 거지, 대학이 계속 다 가져가면 지역은 자생력이 안 생기잖아요.”
- “대학이 청년 인프라가 많으니까 산학협력 위탁 기관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봐요. 사회적경제나 문화도시 같은 국가사업도 민간에 사업당사자들이 다 있는데, 굳이 학교가 해야 하나, 심지어 대학이 사회적경제까지 다 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자생력이 안 생기고...행정도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줘서 수행시키고 평가하고 다 편해지지만, 관습화돼버리면 어렵게 풀어난 많은 것들이 깨지기도 하고... 이제는 민간 플레이어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처럼 교수님한테 많은 걸 배우는 시대가 아닌거죠. 교수님한테 조아리면서 해야 한다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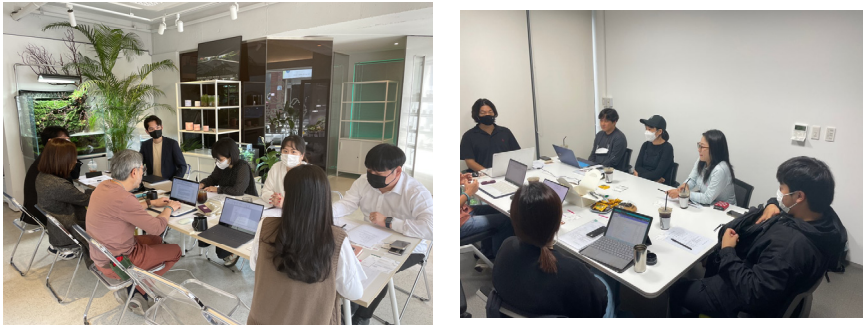
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대학 교육과정이 지역사회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언급한 경우도 많았다. 대학의 목표가 ‘취업’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강조만 있을 뿐, 학생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관념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경향, 이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산업 분야 자체가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현실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들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대학의 목표가 취업에만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지역사회와 더 현실적인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이나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이 보다 다양한 진로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시장에 매우 다양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진로 경로를 경험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좀처럼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림 5-4] 청년 창업공간에서의 면담 현장(부산·제주)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인터뷰 주요 내용

- “지역 청년들이 유년기부터 자라오면서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애항심도 없다. 지역에 매력적인 향토, 중견기업들도 많은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향토 기업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혁신센터와 하는 수업, 정식 커리큘럼 안에 졸업 전에 경험을 해보는 것들, 그런 것이 있냐 없냐가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나오면 (계속 살아온 곳인데도) 지역사회를 처음 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정식 커리큘럼 안에 지역과 교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대학이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학교 때부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누군가 선배들이 있구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만 가두리 해 놓고...”
-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사람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것. 광역보다 로컬(소도시)도 힘이 생겼는데, 여기만 해도 00대나 00대가 지역의 무엇을 활용하면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내지인들, 외지인들 간에도 서로 시각을 좁힐 수도 있고,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단절도 안 되고...”
- “00대 평생교육도 들어봤는데, 지역을 이해하는 강의나 교육하면 참여할 생각 지금도 있어요.”
- “광고홍보 수업에서 1개 프로젝트를 강의식이 아니라, 1주일 동안 해온 걸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게 좋았어요. 00대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별로 우리는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1개 프로젝트를 꼭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에 알게 되고, 체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지역과 연계된 수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처럼 지역 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주요 내용

- “학교 안에서 너무 교과서만 보는 느낌. 세상 밖을 보는 것들이 사는 데 눈을 더 넓혀주는 건데, 그런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학교 때 좀 더 인턴십 같은 휴학생들 대상으로 기업이랑 연계해서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더 갖는 건 어떨까, 너무 현장을 모르고 오는 느낌이어서...”
- “졸업 후 진로 결정하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 힘들었어요. 대학생 때 진로 결정을 미리 체험해보거나 준비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전공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진로가 다양한데, 거의 아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아보는 방법은 대부분 개인에 달려있는 셈이죠.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알아서 주변인들에게 물어 물어 듣는 것 정도요. 그렇게는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졸업을 하면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다.”
- “정말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을 뽑고 싶는데 사실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걸 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교와 기업과의 연계를 한다든지 그 현장 실습을 좀 해본다든지 기획사에 들어가서 현장 문화기획이 무엇인지 한두 달이라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다든지 그런 열린 학과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대학에서는 현장 인력 양성 위주의 교육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에서는 전공자 양성 이외에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게 대학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모두가 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 “학문적인 거만 배워서 현장에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다, 큰 자본없이 살아남을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예술 관련돼서 뭔가를 실무적으로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구나라는 게 생겼으면 ... 그걸 모르는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라. 창의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문화 정비

대학과 예술계가 관행적으로 지닌 보수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보다는 기존 관행에 따라 교육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고분고분한 학생들을 선호한다거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트렌드에 뒤처지게 되는 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고 묵살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행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과 예술계 양 측면에서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다 창의적인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다른 대학들과의 교류, 타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폭넓은 경험, 더 넓은 시각을 갖추게 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예술성을 발전시키게 하는 역할을 더 강화,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학교 때도 악기 잘 다루는 거보다 말 잘 듣는 애를 선호하는 게 충격적이었던 거 같아요.”
- “전공수업이 트랜드에 많이 뒤쳐져요. 언제적 것인지 알 수 없는 자료들, 과제들, 실습들... .”
- “수도권 대학생 친구들 작업물을 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차이를 스스로 느껴서 알아서 갭을 좁히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타 대학 특히 수도권권의 실력 있는 대학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과제나 견학 기회라도...”
- “충분히 필요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전에 커트되는 경우들, 그런 건 꼭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졸업하고 나면, 음악은 졸업 후에 그대로 써야 하는데, 실용 측면에서도 잘 못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필요한 걸 실질적으로 못 배우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초빙되어야 하지 않나. 현장에 훨씬 더 밀착된 기술이나 변하는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 “대학이 변화가 제일 늦거든요. 행정보다도 대학이 변화에서 더 늦어버리고, 처져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1차적으로 서울에 못 가면 낙오되는 것 같은, 이걸 모든 지방대생들이 느끼는 상황이에요.”
- “학교는 작은 공화국이라는 느낌이 많아요. 변화가 일어나면 귀찮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중요하죠.”
- “지역 어른들이 항상 인사 잘하고 다녀라, 그런 압박감!...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매장당하러나, 그런 생각을 대학 2-3학년 때 벌써 하게 되는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직 정규직들 보면서 아 저게 내 미래인가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희망이 안 보이고 거대한 벽을 만나는 느낌...”
- “대학이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대학은 내부적으로 학생들과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 “아무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수십 년간을 가르쳐왔고, 위에서 그런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 “학생들이 입학할 해도 불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휴학이나 퇴학도 많이 하거든요. 기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수업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시청이나 도청보다 대학 행정이 더 구식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 “창업자 눈에는 대학에서 나서서 공공 문화사업을 지자체 위탁을 따는 게 좋아보이지만은 않아요. 편하게 하려는 지자체와 대학이 결탁된 것으로 보여요.”

대학이 교육과정 이외에도 사후관리나 취·창업 지원 등 보다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질적으로 취업도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창업은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려운데, 대학 교육과정이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 지원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대학은 소통 기회도 많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나 다른 건 없죠.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명분이 없어 지기도 하지만, 사후관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 “일선에서 창업해보신 분이 계실까 의문,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금도 기술도 부족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 “당장의 성과 내기가 중요하다 보니 1년 안에 매출 내고 성과 내고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나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 “도움을 주는 교수님들이나 컨설팅, 위원들도 막 바뀌어요.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려움도 있고요”
- “지역대학들, 거점국립대, 이런 대학들이 지역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데, 자기들 사업, 자기들 예산, 이런 거에만 몰두해 있는 거 같아요. 연계를 담당하는 기관도 딱히 없고, 이 대학은 뭐할 건가, 저 대학은 뭐할 건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②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 개선 요구

가. 문화 특수성 이해도를 높인 행정 절차 필요

지역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분야의 교육과 사업 다방면에 있어, 행정 절차적 측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행정들이 많고,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형태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 기관의 인력이 행정이나 예산 부문에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술가 지원 등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공공은 예산이나 일정들이 너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나만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행정 문제는 1년 안에 끝내야 하고, 부서 이동이 잦아서 연계가 안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 내가 담당자를 교육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 “문화예술 기관인데도 문화예술에 집중이 되는 것보다는 항상 행정 그리고 예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소진하는 데에 ... 정작 예술가한테 주는 돈은 매우 적는데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소진하는...”
- “공무원을 위탁이나 용역 해보면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요. 조례든 뭐든. 똑같은 자료를 갖고도 좁게 해석하더라고요. 상위 법령도 이제 찾기 쉬워져서 다른 지역 혁신센터들 사례도 가져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애초에 똑같은 걸 두고 좁게 해석해서, 그게 최소한이다, 그거보다 더 크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주요 내용

- “어떤 게 중요하다고 알려드려도 시에서도 잘 모르시고 그런 관심도 없으시고 중요도를 모르시니까. ... 차라리 서울 쪽으로, 이런 중요도를 아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거 같아요.”
-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구조,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너무 효율을 바라보니까...”
- “정말 문화적인 도시가 되고 싶으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정말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이제는 지역에 간하는 것 같은 발상 자체가 촌스러워요.”
- “사업이 끝나면 전문가도 담당자도 사업자도 다들 관심이 없어지는 걸 많이 느꼈고...”

나. 지역 특수성 이해 제고 필요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과 실무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문화 기관들도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문화 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많은 사업이나 행사들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유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확장하며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기관들 자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더 확충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확인되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민들과 대화 없이 그냥 해버린단 말이지. 추진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힘은 없고. 사실 지방 정부가 돈이 별로 없는데 그 없는 것도 많은 것을 뭔가 허투루 쓴다는 느낌을 받아요.”
- “곳곳에 숨어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드러나지 않은 거였고,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많이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종류는 별로 안 중요한 거 같아요. 예술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중요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 “홍보 부분에서도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다 찾고 그러면 개개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이 힘들다. 시에서 하는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 우리 지역이 잘 되고,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다행히 지역에서도 근데 제가 또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것도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애들은 아예 모르더라고요”
- “홍보도 안 되고 이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행사를 올라오는 것도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퍼지지도 않고. 같이 모아놓는 사이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소하게 시민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민 전시 이런 데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사람들도 적어요.”

인터뷰 주요 내용

- “지역의 특성을 찾고, 지역마다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만 바라본다면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문화예술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새로운 걸 할 때 조금 거부 반응이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 서울 쪽이나 중앙부처에 일을 하고 느꼈던 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열린 마인드로 지역을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 재단이나 대학 이런 곳이 지역의 예술 기반을 위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 “영화제를 만들면, 다른 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와서 지역 영화도 다시 활발하게 얘기 되고,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역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키우려 하지도 않고,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국 다 똑같은 얘기로 가버려요”
- “지역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만든 콘텐트 차라기보다 이미 정답을 만들어놓고 만드는 거... 더 자유롭게 더 큰 시야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거 같아요 ... 문화가 한정되면 안 되잖아요. 일 너무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아요. 청년들은 그렇게 더 느껴지니까 더 실망하게 되죠.”
- “중앙정부, 수도권외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의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았으면 해요. 지역은 지역의 시간과 특성이 있고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다. 지역의 개방성 확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주요 조직들의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역성’, 혹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인식 자체가 수도권과의 네트워크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언급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외부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른 지역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청년들에게 멘토나 롤 모델이 되어줄 선배나 이를 연결해주는 주축이 중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가 다소 폐쇄적인 성격이 있어,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화로 지적되었다. 이는 대학과 문화계 전반에 요구되는 부분으로, 앞서 나아간 선배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성공과 좌절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알아가도록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각 대학들 또는 각 기관들 간의 연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관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대학들 간에도 교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되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대학과 지역 기관들, 문화재단, 진흥원들이 상호 구축한다면 도움이 클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났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지역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더 고립시키게 만드는 거 같은 게, 디자인 분야는 지역에 상관없이 공간 구애 잘 안 받는 일이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일이 생겨도, 이메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여기 광주라서 보내는 데 시간 걸린다고 하면 답변이 늦어지거나, 성사가 안 되기도 해요. 요즘은 SNS로 다양한 작업을 다 노출되고, 정보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데, 왜 그렇게 지역을 따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지역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있다가 떠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 “외부에서 왔으니 돈만 벌고 갈 거라 생각해서, 사소하게는 왜 여기서 하는지, (사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른들과 많이 부딪치기도 했어요. 외지에서 온 것 때문에, 어른들하고 (오해가 생기거나) 소통이 안 될 때라든가...”
-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워터밤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핫한데, 마라톤만 해도 뚫고 싶은데, 마을에서 차 막히지 않냐, 그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지역 축제나 지역 사업이 되려면 민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공공이 도와주든가 해야 하는데...”
-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될 경우, 로컬라이즈 같은 게 없었다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면 금방 떠났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고, 1인 사업자까지 하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은데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 “청년들과 소통해줄 선배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엄청 더 많이 쌓인 멘토들. 물론 학생들끼리도 가능하지만, 교수들도 전공수업으로, 대학원도 그룹별로 구분되는 그런 장벽들을 좀 넘는 게 학생도 교수도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봐요.”
- “문화예술쪽 일은 좋아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만난 분들, 같이 스터디는 해도 같이 일을 해볼 만한 기회는 없어서 사실 대학원 때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관련 업계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건 정말 좋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아쉬웠어요.”
- “일단 네트워크 허브가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아카이빙 센터 같은. 자료를 언제든지 와서 찾아볼 수 있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사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역에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최근에 만났던 친구는 영화를 4년 내내 하고 싶었는데 ○○에는 영화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 “저도 모르는 문화기획자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진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현장에서 점점 이제 자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 “유희공간이 너무 없어서 카페를 많이 간다고들 하잖아요. 우발적인 만남들도 필요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축제해볼까, 기획도 해보고 하는 건데. 안 봐도 알 것 같은 거 다 찌놓고 기획해놓고 오세요 하니까, 안 오죠. 재미없죠. 숨 쉬고 싶은데 숨 쉴 공간이 없어요.”

③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요구

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지역문화를 위해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단순히 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향유의 기회뿐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성취 기회들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단계에서 향후 관련 지원 사업들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청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60%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그냥 수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아 보였어요.”
- “청년 취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수치상으로는 취업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2년 지원 후에 유지가 안 돼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수치상 몇 명 취업시켰다처럼 보여지기 식은 아니었으면...”
- “서울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건가 그 지역에서는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찾아서 가는 그런 거 필수 옵션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서 네 인식이 다른 거라는 게 되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위에 지방에 몰려 있다고 거기에만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조금 전국적으로 조금 퍼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 “지역에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결심하고 내려오는 건 아니고, 약간 정부 쪽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다양한 사람을 섭외해서 지역에 내려오기 쉽도록 ... 재능 있고 열정 있는 교육자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좀 정착이 되면 지역에서도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럼 좀 더 전문성이 생기는 거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 “교육부 지방대 육성 계획 대부분이 과학 기술에서 끝나고, 대학을 허브로 만드는 것도 대부분 과학 기술이고 문화예술은 아예 지원이 없어요.”
- “수도권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다 상황이 비슷해요. 문화예술계의 핵심은 정보와 자본이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대기업이 적다 보니 B2B가 전혀 안 되고,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공공기관이나 정부밖에 없는 ...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민간이 원청과 하청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고, ... 창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공 프로그램도 다 B2B로 밀어버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고...”
- “청년문화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여러 파트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제가 이사장으로 활동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했던 거 같아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하고 동력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또 그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장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할까에 대해서는 민간도 계속 시도를 해야겠지만 공공, 정부도 다 같이 연결돼야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주요 내용

- “청년을 법적 테두리로 가두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지역에 광역 재단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재원이 모두 중앙정부, 기관에서 나오다 보니, 기획되어져 나오는 대형 사업으로 전략한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지역 광역 재단의 입장은 해당 지자체를 설득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중앙은 만날 수도 없고, 사업에 자율성도 없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원하는 좀 더 자유로운 지원사업이 안되는 것 같고... 문화기본법 만들어지고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기존 사업체계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아름다운 얘기지만 문화분권이란 게 가능한가요. 이뤄졌으면은 좋겠어요.”
-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청년마을 등 사업이 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예요. 지속성도 없고 경쟁력도 생기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는 어찌려고요.”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 그리고 문화 분야 각 차원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높은 네트워크 욕구도 확인되었다. 문화 분야여서 경계를 더 넘나드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함께, 그동안 네트워킹 과정에서 느낀 폐쇄성이나 현실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제 지역에서도 외국인 거주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 관광객 등 다양한 유입인구가 있는 만큼, 문화를 통한 현실 사회문제의 해결과 역할을 높이도록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문화 분야여서 더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공공은 너무 보수적인데 민간은 너무 핫하다는 온도차를 많이 느껴요. 연계가 잘되어야 하는데...”
-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밑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보다도요. 지역 고민이나 현장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맥락도 없는데... 아는 네트워크로 계속 돌게 되는 게 심한 거죠.”
- “청년센터, 동아리 모임, 청년 모임 너네 4번 모임이면 80만 원 지원해줄게, 커뮤니티를 지원해줄게, 깊게 들어가 보면 규정 너무...다 원래 고등학교 친구들이예요. 그렇게 지원받는 사례도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고.”
- “성과가 쌓여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 “저희 세대는 고향이 사라진 세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 교유의 관계가 깊은 인구들 간의 마음들이 좀 만나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으면 좋겠어요.”
-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을 우리는 늘 해결과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서로 갈등을 노출하고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유명인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 “요즘 플로깅, 특화사업들 그런 거, 핫한 거 라이프스타일, 그런 게 하다 보니 축적이 돼서 정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거 같아요.”

2. 전문가 자문

가. 전문가 자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한 대학 주 교육층으로서 청년층과 구분하여, 대학과 지역문화, 최근 부상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 문화 분야의 향후 전망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별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과정에는 대학 교수 외에도 연구원, 산학협력 컨소시엄 경험자,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대학으로부터 교육과정 이외에도 사업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바 있거나, 기대내용이 있는 사업가도 포함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로컬크리에이터 4명, 대학 및 지역문화 분야 전문가 총 7명, 전체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5-4〉 전문가 심층면접 목록

구분	소속	성함 및 직위	진행 일정
로컬크리에이터	강원 속초 소호259	이상혁 대표	2022.4
	경남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박은진 대표	2022.5
	충북 진천 룰스퀘어	전태병 공동대표	2022.6
	제주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고선영 대표	2022.9
대학 교육 및 지역문화, 산업 연계 관련 전문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	2022.8
	서울시립대	경신원 교수	2022.8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연구위원	202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희정 연구위원	202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연주 교수	2022.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지원 연구원	2022.7
	케이컬처테크컨소시엄	고윤화 사무총장	2022.7
전체		11	-

나. 로컬크리에이터 심층면접 주요 결과

로컬크리에이터는 아직 학술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순수 예술에서 대중문화까지 폭넓게, 특히 로컬과 글로벌을 개념을 넘나드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과 함께 다루지며, 주로 지역이나 공간에 기반한 창작활동과 사업 영위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인식하는 사례를 전문가 심층면접에 포함하였다. 특히 제주, 경남, 충북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한 사례는 별도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각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사례가 지역 및 산업, 사회와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1)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 중요

문화적 감수성이 좋은 문화 분야 학생들이나 종사자들이 활동 차원을 넘어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려면, 지역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이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든 ‘이야기(스토리)’와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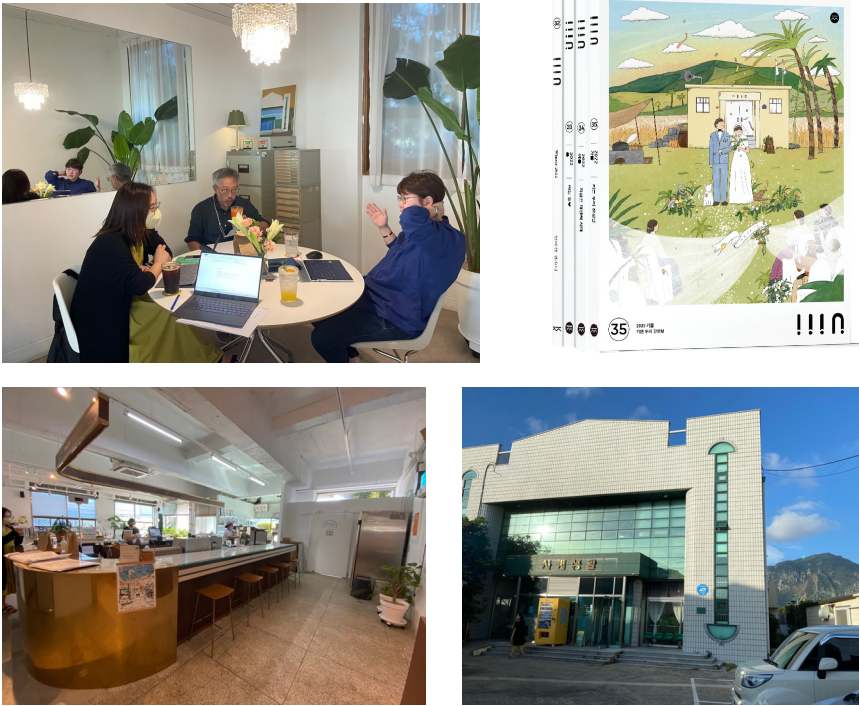
무엇보다 ‘고유성(오리지널리티)’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높은 고유한 아이디어나 스토리만 확보된다면, 사업화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SNS 역할이 다양하고 강력해서 오히려 고유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원래 여행 매거진 기자로 오랜 세월 다니면서 다른 나라 호텔에서 발견되는 로컬 매거진이 우리는 왜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특히 이주자가 늘어나는 제주에서 제주의 ‘사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로컬매거진 시작할 때, 출판계 사람들이 종이매체가 사라지는 시점이라 많이들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는 시기였어요. 이후 ‘이니스프리’와 작업하면서 제품도 같이 만들고 또한 Air bnb 초창기 멤버들과 일을 하면서 출판에서 제품으로 확장도 하게 됐고요.
- 로컬매거진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노점지역이라고 하는 곳(재미가 없는 곳을 지칭)도 이러한 작업으로 지역을 보다 잘 알게 되고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제주 콘텐츠그룹 재주상희 고선영 대표)

[그림 5-5] 제주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지역 대학일수록 지역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을 탐방하지 동네에는 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지역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이해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와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기술 가르치듯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술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오히려 교육자와 참여자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어, 그러한 주민들의 삶과 기억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강조도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이제는 로컬(소도시)의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 그리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 대학에서 문화기획, 축제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장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시면 더 좋을 듯해요. 대학이 외지인들, 토착민들을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대학이 지역의 기술과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키워내야죠. 속초는 특히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문화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미래를 봐야할 것 같아요.

이곳만 해도 기업, 관광, 호텔 이런 대학들... 좋은데, 대학에서 오히려 지역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내지인의 소통도 되고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 등에서 강의를 개설하면 지역을 이해하는 강의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강원 속초 소호259 이상혁 대표)

2) 지역 문제 해결 관심과 의지 필요

지역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로컬크리에이터 차원에서는 사업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최근 청년층의 로컬 이주 트렌드이기도 한 농촌, 농업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업 사례의 경우, 일반 농업인들, 그리고 귀농인들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농업인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업화 성공 사례에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관련 전공자들, 청년들의 관심이 잇따른다. 한편, 로컬에 집중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도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네트워킹 등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원래 공학 전공해서, 자동차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기존의 머신 러닝, 자동제어 기술을 농업에 연계하면서 스마트 팜 제조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미래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거죠.

물류와 제조 공정에 대한 입지를 바탕으로 진천을 선택하였는데, 농업 기반인 진천에서 미래 농업 기술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공간을 선보이고자 공간을 마련하니 서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시더라구요. 그동안 사람들이 빠져나가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이고, 죽어있던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없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문이 오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대학 다닐 때 창업교육센터 도움을 받았으나 기대에 못 미쳤고 창업할 때 법인구성, 회계, 주식관리 등이 아쉬웠어요. 창업 기술은 더 어려울 때 알려줘야 하는데 인허가, 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없죠. 정부는 제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을 줄이고 오히려 규제를 적게 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서 네트워킹 등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충북 진천 만나씨이에이주식회사 전태병 공동대표)

[그림 5-6] 충북 진천 룰스퀘어 농업문화복합공간



3) 로컬크리에이터 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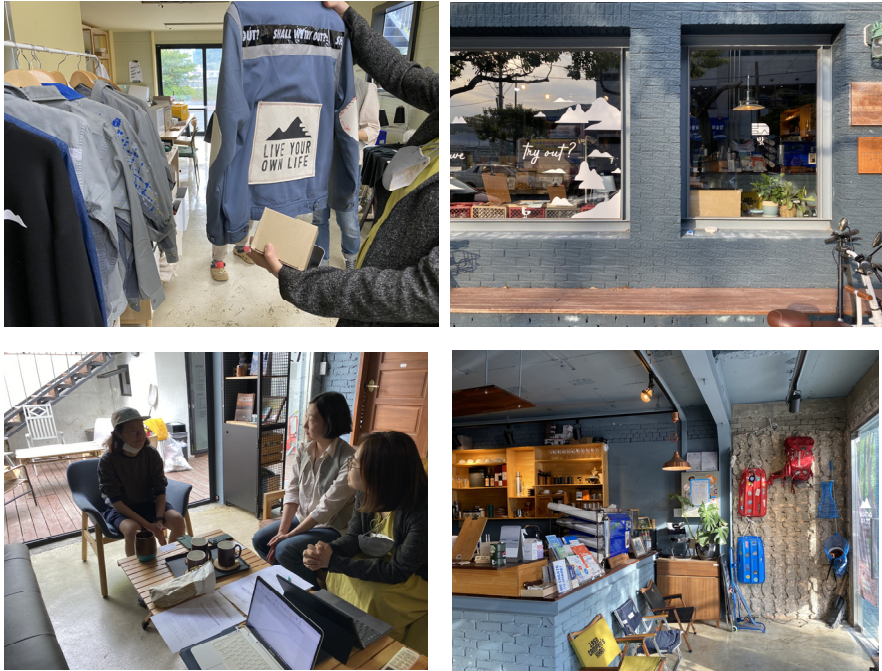
정책 차원에서 로컬크리에이터 경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기업(사업체) 수요를 함께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원사업 형태로 계속 예산을 지원만 하는 방식으로는 조직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빚(부채)을 생각하는 것도 기업이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성장하는 사업체에게는 정말 필요한 단계, 시기에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도시계획을 배우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시재생 등을 했는데... 영혼을 갈아 넣어도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것을 해보기로 결심... 청년마을사업, 10주살이, 지역탐색리서치, 지역단체주민들과 하는 협업프로젝트, 농촌 농산물 일손 거들기, 청소년 대상 역사 코스 투어, 자체 플로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서로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2014년쯤? 취직, 창업, 공공사업, 공유경제활동 이런 게 다 무너지거나 영혼이 털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공공 보조금 사업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경남 아웃도어아일랜드 박은진 대표)

[그림 5-7] 경남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물론 이러한 본격적인 로컬크리에이터 경제활동 단계 이전에 지역과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폭을 넓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간이 하나뿐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카페나 숍, 문화프로그램 전문공간 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도록 돕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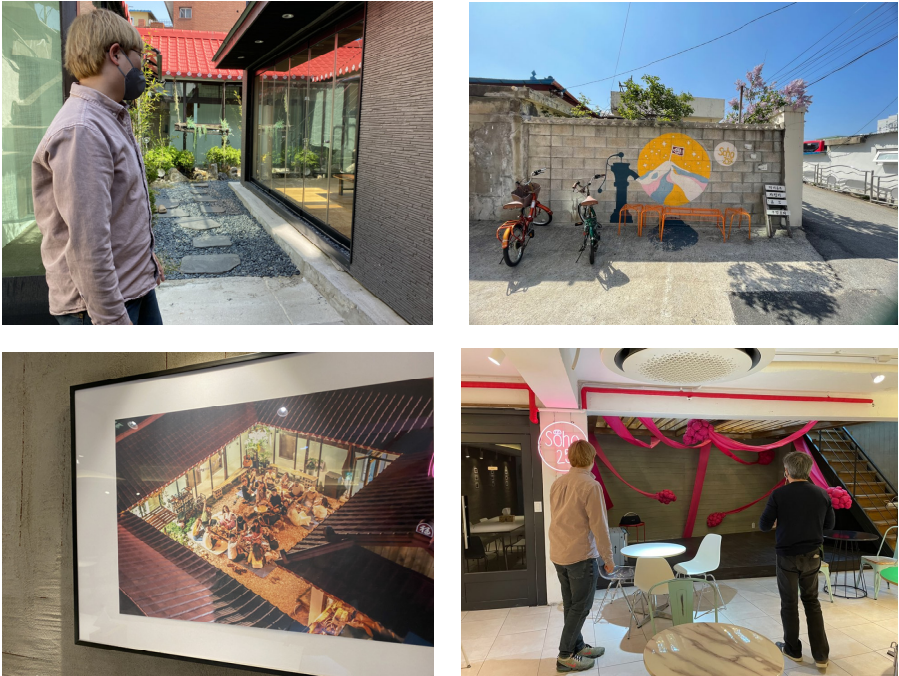
인터뷰 주요 내용

지역의 강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바닷가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예능에, 할로윈, 크리스마스 파티, 골목 투어, 부스 차려놓고 마켓도 하고... 참여자들은 주로 관광 오신 분들이었는데, 지역 분들도 지금은 이 동네 분들은 오세요. 여기 원래 유흥가였는데, 지역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스토리와 가능성이 있죠.

이제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외지 청년들도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과 교류도 하고요. 문화도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런 데도 참여하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같이 잘 어울려요. 지역에 정착하려고 돈만 벌고 가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산불 낫을 때 같이 극복하려는 활동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과 함께 하는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강원 속초 소호259 이상혁 대표)

[그림 5-8] 강원 속초 소호259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친절한 지역 정서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영속적인 정착도 결국 이주나 이민을 선택한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있다. 지역민들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을 보다 환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대부분의 정보와 소비자는 수도권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것 할 기회가 많아요. 이곳의 자연이 패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미 사업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본 경험이 있어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특히 전시, 작은 공연, 페스티벌 등을 하고요. (중략)

지역 내 공무원들이 가장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도움도 요청하지만 이들에게 외부에서 온 이주민은 낯선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지원사업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죠. 여기만 해도 산불이 났던 지역이라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던 곳을 재생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호의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외지인이 관광시장 빼앗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행정적으로 공격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도 곧잘 발생하고요.

(강원 속초 소호259 이상혁 대표)

다. 지역·로컬분야 대학교육 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1) 지역 자생력과 창조역량을 강조하는 정책 중요

정부가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국정과제 119) 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가 주축으로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행정안전부 사회혁신국에서 용역,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로컬브랜드 협업을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산 점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과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부처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다양한 자원과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통적인 창작자 범주를 더 확장한 개념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랫폼은 온라인 공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오프라인 지역의 플랫폼이야말로 정책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에 있어 그동안 많은 자원을 축적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끌고 가야 할 책임도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로컬크리에이터 가치가 더욱 부상할 것임에 따라, 관련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담론은 동네경제, 골목상권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도심 골목을 살리는 핵심 업종 중 하나가 책방인데, 이러한 독립서점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등 관심을 기울여 온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재 담론은 점차 도시나 공간 등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뷰 주요 내용

문체부 플랫폼이 지역 골목과 청년을 살리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돼요. 문체부는 순수예술과 디지털 콘텐츠 사이의 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책 자원이 많죠. (중략) 지역 대학도 기업 채용 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협업하게끔 하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쩌면 21세기의 새로운 Arts and Craft movement가 필요한데 이것이 대학을 통해 동네로 흘러가야 한다.

(연세대 모종린 교수)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경제문제라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최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는 서울 일부 구 지역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주민구 감소가 주는 위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지원을 계속하는 것 보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 즉 노력을 지원하되 실패를 포용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학들도 청년들, 크리에이터들이 아이템화, 브랜딩화를 하고 단계별로 발굴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조사와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진행, 거버넌스, 사업화, 단계별 지원 전략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인터뷰 주요 내용

지역에 산업이 없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해볼 만한 사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가족 형성도 하고, 정착해서 계속 일하고 성장하고,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죠. 잠깐 사업들은 그야말로 잠깐의 효과만 있죠. 명확하고 해볼 만한 지역 아이템 하나만 잘 키워도 그게 결국 지역 경제 살리는 거예요.

(서울시립대 경신원 교수)

2) 대학과 지역 문제 해결에 문화체육관광부 역할 강화

우리나라 대학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세로, 특히 95년 이후 대학생이 50%에서 80% 가까이까지 급증하였으나,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타격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조직으로도 다뤄져 왔다. 이 타격이 노동시장, 경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 정해진 위기’라고 오랫동안 진단해왔다.

인터뷰 주요 내용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만큼 연구 역사가 길죠. 한국 특유의 인구감소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위기가 대학과 지역의 위기인 만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잘 파악하되, 이를 극복할 한국만의, 한국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도 속도를 내야 할 겁니다. 1개, 몇 개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이지원 연구원)

이러한 배경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4년제 대학이 200여 개가 넘는 상황이다. 그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비수도권에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도청소재지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될 경우,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종합대학이 각 대학의 특성 및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브랜드를 갖춘 대학 역시 특정 교수진이 이탈하면 그 브랜드가 사라지기도 한다.

교육부가 대학평가 등 대학 재정 정책을 주도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지역과 대학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려면 재정권, 행정권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있어야 한다.

대학 평가 내용이나 교육 목적에 지역공헌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공헌도 평가반영과 같은 강제화도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대학들이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지역 문화재단 등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처 차원에서의 주도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대학 평가에 지역공헌 지표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지역이 행정, 재정을 주도해서 대학 혁신을 지역문화로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서 특화된 주제를 통해 강소 대학 컨소시엄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주체들이 모여서 개방형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연구위원)

3) 문화 분야 대학·학과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커리큘럼 개방

문화 관련 대학 간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커리큘럼을 서로 개방하거나 혹은 컨소시엄 간 자유로운 교수, 학생의 이동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강소대학 특화 네트워크 등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통폐합을 이미 진행한 대학이나 학과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문화 분야의 대학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 차원의 정책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대학에서 문화적 정체성이나 특화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고등교육 단계까지만이 아니라, 향후 산업을 통해 학생 유입과 지속적인 생산 시스템이 계속 연결되느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학과 차원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외, 실무 교육 강화, 대학원 과정 확충, 평생교육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책 보완 등 대학과 문화 분야 학과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민과 개발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일례로 포항에서 심해 연구를 중심으로 특화할 경우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화, 산업화 특화로도 연관이 가능하죠. DMZ에 대한 특화를 강원도 내 대학들이 연계할 수도 있고요.

기술이나 특화 분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개발이 되듯이 로컬리티 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를 대학이 가져갈 수 있죠. 연합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공연예술 분야 간의 연합이라든가, 인문 분야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중략) 여기서 융합 교육도 얘기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전문성이 강한 분야들이 고급화, 전문화 교육을 해왔지만 이제는 인위적인 성격으로는 실패 가능성도 높죠.

학고가 망해도 학과는 살 수 있어요. 산업수요가 있으면 학과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산업계 수용률이 높으면 계속 살아남아요. 대학 고민과 다른 차원에서 학과 중심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연구위원)

인터뷰 주요 내용

우리나라 대학들 상황과 달리 미국 대학들은 수익추구형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기부도 허용한 데다, 일부 유명 사립대들은 기부 총당률이 100%를 이미 넘겨서 기부액 수익을 남길 정도죠. 우리와 많이 다른 환경이지만 벤치마킹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미국도 일부 비인기 대학이나 학생 부족으로 고생한 대학 학과들은 이민 인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충당해왔고,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이었죠. 미국 내에서는 다른 주 출신 학생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마련했구요.

이때 활용한 방식이 대학원 석사 과정 대폭 투자, 다른 주에서 학생을 끌어들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 있는 단계에서부터 주거, 학습 단계에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동일 주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JOB TRANSITION, ATTACHMENT) 관련 프로그램이나 금융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글로벌 사업으로서 국제 학생 끌어들이기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봐야겠죠. 이때 특이점이 미국 대학(원)은 매우 실무적인 PROFESSIONAL SCHOOL(예: 간호사, 돌봄직종 등 사회서비스 업종)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다는 점이고요. 문화 분야에서도 이를 참고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지 마련해야 할 겁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이지원 연구원)

4) 열린 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열린 대안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이 평생교육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제는 정년 이후에도 학습 욕구가 많고, 또한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

이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주요 내용

지역대학들이 모인 열린 대학교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수진, 학생이 되어 전국에서 체류하고, 강의하고,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멤버십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죠. 지역 전문가, 특수 분야와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대학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서울시립대 경신원 교수)

열린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의 경우, 멤버십을 통해 전국의 연계 대학에서 수학을 하거나 단기간 거주가 가능할 수 있다. 교수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전국 연계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역시 단기간 혹은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강의자, 학생들이 지역의 전문가 혹은 특화된 지역문화의 전수자들과 교류할 수 있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되는 열린 대학으로서 여러 대학이 연계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할 것은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예를 들어 원도심의 쾌적한 숙소(스테이)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갈 수 있다. 이러한 열린 대학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포럼, 워크숍, 투어 등이 축적되며 서로의 장점을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서로 교류하는 단계에 대한 고민도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성이 높는데, 이 과정에 열린 대학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5) 대학의 문화 분야 교육 개선 및 강화

최근 일부 대학들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며, 지역 고유의 콘텐츠, 전통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합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특히 이 단계에는 청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주목할 만한데, 이들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려면 결국

소지역, 소도시 중심의 창조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사회적 경제 중심의 골목 및 도시재생 등 지역 정책이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인 문화권과 잘 부합하지 못해 창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사회적 경제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오히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는 소상공인 중심의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산업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우선시되다 보니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되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의 폐쇄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지향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근거로 설명되었다.

인터뷰 주요 내용

홍대는 홍대학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연구 가치가 높죠.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결국 동네 경제가 살면, 크리에이터들 브랜드가 합쳐져서 지역브랜드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수입, 자유롭게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죠. 그 과정에 역할을 해줄 문화시설과 사람들이 중요해요.

(연세대 모종린 교수)

물론 대학 교육성과와 개인의 경제성과는 사실 각각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이 유독 교육에 투자한 성과를 반드시 경제성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한 국가이기도 하다는 의견이다. 대학은 교육단계와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노동시장 간의 연결자(matchmaker) 역할에만 집중해도 충분한데,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대학 교육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 대학 생태계 특성상 인적, 물적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어, 향후 지방, 로컬, 소자본, 개인일수록 불리할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 진단도 많았다.

인터뷰 주요 내용

문화예술 분야 고등교육 단계는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문화자본을 꾸준히 축적해와야 하는 교육 분야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직업이나 경제활동 단계를 생각하면,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만은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충해야 돼요. 산학협력도 일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의 위기가 더 크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전략을 튼튼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케이컬처테크컨소시엄 교문화 사무총장)

문화 분야에서도 향후 산학협력은 계속 더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낮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 불친절했던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 대기업들은 이미 산학 간 협력을 다양하게 시도해온 바 있고, 이러한 협력을 가시화하려는 노력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문화 분야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단계 이후, 즉 졸업 이후 진로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심한데도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산업 간 융합 움직임이 많고 활발해져서 쉽지 않은 양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문화 분야를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화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수진, 교수법, 교육내용 모든 측면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6)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문화 역할 강화

현재 국정과제에는 지역인재투자협약, 지역지자체대학기반협력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플랫폼, 국정과제85) 등 지역대학과 인적자원에 대한 거버넌스가 재정비될 예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현재 교육 분야의 혁신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 ICT 모바일리티, 바이오 등이 중심인데, 지역인재 유출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향후 지속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학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가가 흔히들 생각하는 캠퍼스 문화 중심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변화한 데다, 오히려 교통중심지나 상업지구 중심으로 청년문화가 더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 교육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변화다.

인터뷰 주요 내용

지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이었고 사람들도 요식업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죠. 지역은 정말 문화적인 데가 절대 부족하기도 한데, 문화는 결국 트렌드, 아우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문화 분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희정 연구위원)

문화 분야가 대학과 함께 연계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일자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는 주장이 재차 확인되었다. 결국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취·창업률을 높여 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거의 모든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현실적으로 문화 분야 인재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전공 중심(예체능)으로 볼 것이냐, 예술가(정체성) 중심으로 볼 것이냐 등 여러 가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여서일 수 있다.

인터뷰 주요 내용

지역에서 문화가 가지는 힘은 결국 일자리로 설명될 거예요.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지역 인구소멸 과정에서도 살아남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은 공장이 이전되거나 자동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지역 일자리로 보이는 것들 중에도 청년의 이주수요를 잘 살펴보면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 근로의 동력이 되는 힘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 지역이탈 없이 교육과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뒀어야겠죠. 정책적으로 지역 문예회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민관협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지역 대학 출신의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봐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연주 교수)

또한 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과 지역문화 협력의 방법론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의 거점이 생겼을 때,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일종의 사회적 외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이나 자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이 학교의 자원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술가가 지역에서 살며 일도 한다’, ‘대학생은 돈도 내지 만 거주도 하고 일도 한다’는 차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민간 주도 공간들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는 사례에 비추어, 지역 강소대학이 지역 재단 등과 협력을 하면서 서로를 자산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경우도 소개되었다.

제2절 청년층 지역문화 인식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 유예 포함), 졸업생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유의 할당표본추출(Purposive Quota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여, 총 600명의 최종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아래와 같다.

〈표 5-5〉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직업	4년제 대학생·졸업생(휴학, 유예 포함)	563	93.8
	대학원생	37	6.2
현재 학년	대학교 저학년(1,2학년)	170	28.3
	대학교 고학년(3,4학년)	362	60.3
	학사 기졸업자	31	5.2
	대학원생	37	6.2
주 전공	인문상경	264	44.0
	교육	23	3.8
	자연이공	239	39.8
	예체능	31	5.2
	기타	43	7.2
소속 (또는 졸업한) 대학 소재지	수도권	300	50.0
	비수도권	300	50.0

구분		사례 수	비율
연령	만 19~24세	424	70.7
	만 25세 이상	176	29.3
성별	남성	300	50.0
	여성	300	50.0
대입 이전 주거주지역	수도권	300	50.0
	비수도권	300	50.0
현재 거주지역	수도권	327	54.5
	비수도권	273	45.5
현재 경제활동 경험	경제활동자	182	30.3
	비경제활동자	418	69.7
가족 구성	미혼 1인 가구	111	18.5
	미혼 부모 동반	432	72.0
	기타 가구	57	9.5
본인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306	51.0
	50만 원~100만 원	177	29.5
	100만 원 이상	117	19.5
본인 월 평균 지출	50만 원 미만	348	18.5
	50만 원~100만 원	157	72.0
	100만 원 이상	95	9.5
전공	예체능	31	5.2
	타전공	569	94.8
전체		600	100.0

연구진은 이 가운데, ‘대학 입학 이전 주로 살았던 주 거주지역’과, ‘현재 거주지역’ 간 비교 검토를 통해, 지역이동 또는 지역거주 경험이 있는지에 따른 인식 차이에 주목하였다. 또한 유의할당표본추출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응답자 비율이 각각 절반이 되도록 표집하고자 했다.

나.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현재 거주지역의 장점, 여가활동 종류, 여가활동 경험 빈도, 삶의 만족도, 문화향유 정도, 경제적·시간적 여유, 문화생활 만족도, 비수도권 지역 방문 경험, 로컬 라이프 관심, 비수도권 지역 이미지 등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로컬라이프”라는 개념은 아직 학술, 연구 분야에서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조사를 위해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보충하였다.

〈표 5-6〉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현재 문화활동 향유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지역 장점 • 6개월 이내 경험한 여가활동 • 여가활동 경험 빈도 • 할애 시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희망 문화향유 • 다양한 문화향유 만족도 • 시간적·경제적 여유
비수도권 문화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거주지 외 지역 방문 목적 • 비수도권 지역 문화활동 경험 정도 • 비수도권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 변화 • 로컬 라이프 관심도 • 비수도권 지역 이미지
대학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공 만족도 • 문화활성화를 위한 대학에서 필요한 정책 • 대학이 지역과 연계·발전하기 위한 노력

2. 주요 결과

가.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특성

1) 현재 거주지역 장점

현재 거주지역의 장점의 이유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39.7%가 교통환경이라고 하였다. 이어 23.5%가 주거환경, 13.5%가 자연환경, 9.3%가 경제환경, 9.2%가 문화환경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역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하여 검토할 경우, 수도권에 계속 살고 있는 응답자의 50%가 교통환경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23%가 주거환경, 10.6%가 문화환경, 10.3% 경제환경 순으로 대답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응답자 집단은 가장 많은 32.2%가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대답하였으며, 30.2%가 교통환경, 26.3%가 주거환경이라고 답했으며 경제환경과 문화환경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6.3%와 5.1%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이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집단은 가장 많은 31.7%가 교통환경을 현재 거주지역의 장점이라고 응답했으며, 19%는 문화환경, 17.5%는 경제환경, 15.9%는 자연환경, 14.3%는 주거환경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7〉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현재 거주지역 장점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교통환경 (예: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서 등)	39.7	50.0	30.2	31.7
주거환경 (예: 병원·학교 등 인프라가 좋아서, 주민들 관계가 좋아서 등)	23.5	23.0	26.3	14.3
자연환경 (예: 공기가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자연이 깨끗해서 등)	18.0	5.7	32.2	15.9
경제환경 (예: 일자리가 충분해서, 소비환경이 좋아서 등)	9.3	10.3	6.3	17.5
문화환경 (예: 문화 인프라 등 즐길 거리가 충분해서 등)	9.2	10.6	5.1	19.0
기타	0.3	0.4	0.0	1.6
계	100.0	100.0	100.0	100.0

2) 여가활동

여가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감상(81.8%)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낮잠, TV·OTT 시청, SNS·인터넷 웹서핑, 친구·지인과의 개인적인 만남, 친구·지인과 통화나 채팅, 영화·연극 관람, 게임, 쇼핑·외식, 독서, 산책, 생활 운동, 가족 및 친지 방문, 명상·명때리기, 국내 1박 이상 여행, 피트니스 운동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감상은 거주지역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은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이나, 거주지역을 변화해 본 경험이 있는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문·뉴스·잡지 보기, 호캉스, 테마파크 방문, 이색·테마 카페 방문, 종교활동, 악기연주·작곡·노래 교실, 계모임·동창회 등 사교 모임, 취미·관심사 목적의 동호회, 무용·댄스, 무술·격투기가 해당된다.

거주지역 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TV·OTT 시청과 산책이 각각 68.3%로 2번째로 가장 높은 빈도의 여가활동이었다. 특히 산책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피트니스 운동의 경우도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의 50.8%가 응답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39%,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36.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 봉사활동과 생활공예 또한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이 다른 두 유형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6개월 내 경험한 여가활동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유튜브 감상	81.8	81.6	83.9	74.6
낮잠·늦잠	68.7	70.9	67.1	65.1
TV·OTT(넷플릭스, 티빙 등)·VOD 시청	68.2	69.9	66.3	68.3
SNS·인터넷 웹서핑	65.2	68.4	62.7	60.3
친구·지인과 개인적인 만남	62.8	62.8	63.1	61.9
친구·지인과 통화나 채팅	62.2	60.6	65.9	54.0
영화·연극 관람	60.3	61.7	59.6	57.1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게임 (온라인·모바일·보드게임 등)	58.3	58.5	58.4	57.1
쇼핑·외식 (맛집, 카페 방문 등)	58.2	59.2	57.6	55.6
독서 (만화, 웹툰, 웹소설 포함)	56.8	59.6	54.1	55.6
산책	55.7	57.1	51.0	68.3
생활 운동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등)	54.3	57.1	52.5	49.2
가족 및 친지 방문	44.0	46.5	41.2	44.4
명상·멍때리기 (아무것도 안 하기)	43.2	45.7	40.4	42.9
국내 1박 이상 여행 (호텔 등 숙소 이용)	41.0	40.1	41.6	42.9
피트니스 운동 (홈트레이닝, PT, 요가 등)	39.2	39.0	36.5	50.8
지식 습득 (어학, 자격증 취득, 강연 참여 등)	38.0	37.9	38.0	38.1
사진·영상촬영 (필름·디지털 카메라 포함)	36.7	39.0	36.1	28.6
드라이브	29.3	28.0	31.0	28.6
라디오·팟캐스트·음악 감상	29.2	28.7	30.2	27.0
스포츠 경기 관람 (온·오프포함)	28.8	29.8	27.1	31.7
신문·뉴스·잡지 보기	28.2	34.4	22.0	25.4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26.5	29.4	24.7	20.6
요리·베이킹·홈카페	26.2	29.1	22.7	27.0
전시회 방문·공연 관람	25.7	27.3	23.1	28.6
호캉스 (펜션·호텔에서 휴식)	22.7	29.4	15.3	22.2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유적지 등) 방문	20.0	23.4	17.3	15.9
반려동물 돌보기	17.0	18.8	14.9	17.5
이색·테마카페 (방탈출, VR, 키즈카페 등) 체험	15.2	18.1	11.0	19.0
레저 스포츠 (구기운동, 등산, 자전거, 골프 등)	14.3	16.0	12.5	14.3
목욕·사우나·마사지샵 방문	14.0	15.2	12.9	12.7
인테리어·집꾸미기	14.0	17.0	9.8	17.5
미술 (드로잉, 조각, 디자인, 만화 등)	13.3	16.0	9.8	15.9
취미·관심사 목적의 동호회 활동	12.7	16.0	9.0	12.7
종교활동	12.0	15.6	8.6	9.5
악기연주·작곡·노래교실	11.7	13.1	11.0	7.9
사회봉사활동	11.2	11.7	9.8	14.3
계모임·동창회 등 사교 모임 참석	11.2	14.2	8.2	9.5
생활공예 (캘리그래피, 자수, 뜨개질 등)	8.7	9.9	6.3	12.7
캠핑·글램핑·차박 (차에서 숙박)	7.7	8.5	7.5	4.8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원에 (화분, 화단가꾸기, 꽃꽂이 등)	6.7	7.4	5.1	9.5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6.2	6.7	5.9	4.8
해외여행	5.3	7.1	3.5	4.8
미팅·소개팅	5.2	6.0	4.3	4.8
무용·댄스 (발레, 방송댄스 등)	4.5	7.8	1.6	1.6
무술·격투기 (태권도, 검도 등)	2.7	4.6	1.2	0.0
기타	0.0	0.0	0.0	0.0

여가활동 경험 빈도 또한 거주지역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매일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이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 거주지역에 변화가 있었던 집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5-9〉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여가활동 경험 빈도

(단위: %)

빈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매일	37.8	38.3	37.6	36.5
2~3일에 1번	30.2	31.9	27.8	31.7
일주일에 1번	17.8	19.5	16.1	17.5
2~3주에 1번	5.7	5.3	6.3	4.8
1달에 1번	4.2	3.2	4.7	6.3
2~3개월에 1번	2.5	1.1	3.9	3.2
4~6개월에 1번	1.5	0.7	2.7	0.0
1년에 1번	0.3	0.0	0.8	0.0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15.7회	16.1회	15.3회	15.5회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거주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이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이동한 응답자는 54%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지만,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은 49.8%,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은 48.2%만이 긍정 응답을 하였다. 흥미롭게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 또한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5-10〉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3.0	3.9	2.0	3.2
별로 그렇지 않다	17.2	15.2	18.8	19.0
보통이다	30.3	32.6	29.4	23.8
약간 그렇다	37.3	39.0	35.3	38.1
매우 그렇다	12.2	9.2	14.5	15.9
계	100.0	100.0	100.0	100.0

희망 문화향유 정도는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의 55.3%가 긍정 응답을 하였으며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의 54.9%,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들의 54%에 비해 살짝 높았다. 한편 부정 응답에 있어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의 14.2%가 원하는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12.5%,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의 4.8%보다 높은 수치였다.

〈표 5-11〉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희망 문화향유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2.7	3.2	2.4	1.6
별로 그렇지 않다	9.8	11.0	10.2	3.2
보통이다	32.5	30.5	32.5	41.3
약간 그렇다	40.3	42.9	38.8	34.9
매우 그렇다	14.7	12.4	16.1	19.0
계	100.0	100.0	100.0	100.0

다양한 문화향유 정도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들의 42.9%가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수도권 거주자의 41.1%, 비수도권 거주자의 4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부정 응답은 비수도권 거주자가 28.2%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거주자 25.9%, 거주지역 이동한 사람 23.8% 순이었다.

〈표 5-12〉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다양한 문화향유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4.0	5.3	2.4	4.8
별로 그렇지 않다	22.7	20.6	25.9	19.0
보통이다	32.5	33.0	31.8	33.3
약간 그렇다	31.2	32.3	30.6	28.6
매우 그렇다	9.7	8.9	9.4	14.3
계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시간적 여유는 수도권 거주자의 54.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은 49.2%, 비수도권 거주자는 47.1% 순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문화활동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자와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은 각각 20.6%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13〉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3.8	5.0	2.4	4.8
별로 그렇지 않다	17.7	15.6	20.4	15.9
보통이다	27.8	25.2	30.2	30.2
약간 그렇다	39.3	43.6	34.5	39.7
매우 그렇다	11.3	10.6	12.5	9.5
계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경제적 여유는 수도권 거주자의 30.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0.2%,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은 27.1% 순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이 36.5%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거주자 34.5%, 수도권 거주자 29.1% 순이었다.

〈표 5-14〉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경제적 여유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6.0	7.8	3.9	6.3
별로 그렇지 않다	26.2	21.3	30.6	30.2
보통이다	38.7	40.1	38.4	33.3
약간 그렇다	24.8	28.4	20.0	28.6
매우 그렇다	4.3	2.5	7.1	1.6
계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문화적 만족도는 거주지역을 이동한 응답자가 57.1%가 문화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자 56.4%, 비수도권 거주자 54.5% 순이었다. 부정 응답은 거주지역을 이동한 응답자가 14.3%로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거주자 14.1%, 수도권 거주자 13.7% 순이었다.

〈표 5-15〉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2.5	2.5	2.0	4.8
별로 그렇지 않다	11.2	10.6	12.2	9.5
보통이다	30.7	30.5	31.4	28.6
약간 그렇다	41.3	41.5	41.2	41.3
매우 그렇다	14.3	14.9	13.3	15.9
계	100.0	100.0	100.0	100.0

4) 비수도권 문화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방문 목적은 수도권 거주자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여행 목적이 각각 48.2%, 53.3%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이와 비교하여, 친구·친지 방문이 42.9%로 가장 높았다.

〈표 5-16〉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방문목적

(단위: %)

방문목적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여행 (휴가·휴양)	49.3	48.2	53.3	38.1
친구·친지 방문	25.8	24.5	23.1	42.9
축제·행사·이벤트 참여	6.0	6.4	5.5	6.3
쇼핑	4.7	3.5	7.1	0.0
거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3.8	5.3	3.1	0.0
건강·치료	3.5	3.5	3.1	4.8
레저·스포츠 (골프, 캠핑 등)	3.5	3.5	3.1	4.8
회의·세미나 참여	2.8	3.9	1.6	3.2
기타	.5	1.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문화경험은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들이 22.2%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비수도권 거주자 20.8%, 수도권 거주자 16% 순이었다. 경험이 적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자로 5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화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거주지역 이동한 사람 50.8%, 비수도권 거주자 49.8% 순이었다.

〈표 5-17〉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문화경험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하지 않는다	12.3	12.8	11.0	15.9
별로 하지 않는다	40.0	42.2	38.8	34.9
보통이다	29.0	29.1	29.4	27.0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약간 활동량이 있는 편이다	18.0	15.2	20.0	22.2
매우 활동량이 많은 편이다	0.7	0.7	0.8	0.0
계	100.0	100.0	100.0	100.0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화경험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모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또한 시간적 여유와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였다.

〈표 5-18〉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문화경험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6.6	27.8	25.2	26.5
지역 문화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21.1	21.9	20.3	20.4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18.4	14.8	25.2	8.2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15.8	17.3	15.3	10.2
지역 방문 동반자(친구, 연인, 가족 등)와 함께 즐기기가 어려워서	9.0	8.9	7.4	16.3
지역 문화활동의 퀄리티가 낮을 것 같아서	7.0	6.8	5.0	16.3
기타	2.0	2.5	1.5	2.0
계	100.0	100.0	100.0	100.0

비수도권에서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의 변화는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의 39.7%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거주자 36.5%, 수도권 거주자 34% 순이었다.

〈표 5-19〉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비수도권에서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	0.8	1.1	0.4	1.6
부정적으로 변화	4.0	4.3	4.3	1.6
이전과 비슷	59.5	60.6	58.8	57.1
긍정적으로 변화	33.7	33.0	33.3	38.1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2.0	1.1	3.1	1.6
계	100.0	100.0	100.0	100.0

로컬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46.3%로 가장 관심도가 높았으며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 42.9%, 수도권 거주자 35.1% 순이었다. 관심이 없는 경우는 관심도의 역순과 같았다.

〈표 5-20〉 거주지역 변화 경험에 따른 로컬 라이프 관심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전혀 관심 없다	7.5	9.2	4.3	12.7
별로 관심 없다	22.8	26.2	21.2	14.3
보통이다	29.0	29.4	28.2	30.2
약간 관심 있다	35.0	31.6	38.4	36.5
매우 관심 많다	5.7	3.5	7.8	6.3
계	100.0	100.0	100.0	100.0

로컬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집값과 물가 등이 수도권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수도권 거주자에서 25.3%로 2순위였지만, 비수도권 계속 거주자와 거주지역을 이동한 집단의 경우에는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다는 이유가 2순위였다.

〈표 5-21〉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는 이유

(단위: %)

이유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에 비해 합리적이어서	36.9	28.3	44.1	37.0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어서	20.1	25.3	16.9	14.8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어서	17.2	13.1	17.8	29.6
지역의 특별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12.7	17.2	8.5	14.8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아서	7.0	6.1	9.3	0.0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없어서	4.5	7.1	2.5	3.7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충분해서	1.6	3.0	0.8	0.0
기타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로컬 라이프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로는 거주지역 변화에 관계 없이 모두 지역 간 이동이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계속 거주자의 경우 이 비율이 다른 유형의 응답자에 비해 29.9%로 가장 낮았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거주지역 이동한 사람은 2순위로 취업, 창업 등의 경제활동 기회가 적다고 응답했지만 수도권 거주자는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 부족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5-22〉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지 않는 이유

(단위: %)

이유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커서	39.0	43.2	29.9	52.8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협소해서	18.0	16.9	18.2	22.2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16.6	18.6	17.5	2.8
지역 내 문화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서	9.6	7.1	13.1	8.3
자연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6.5	6.6	6.6	5.6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과 비슷해서	5.6	4.9	6.6	5.6
지역 내 가족, 지인 등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4.2	2.2	7.3	2.8
기타	0.6	0.5	0.7	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집단별로 인식차가 보였다. 수도권 계속 거주자 집단은 '따뜻한, 친근한, 개성 있는, 단절된, 정적인' 순으로 응답을 하였지만 비수도권 계속 거주자의 경우 '친근한, 따뜻한, 평범한, 정적인, 개성 있는' 순이었다. 거주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정적인, 따뜻한, 친근한, 평범한, 따분한, 촌스러운' 순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비중은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53.81%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거주자 52.54%,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 40.63% 순이었다.

〈표 5-23〉 수도권 제외 지역(로컬) 이미지 (복수 응답)

이미지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따뜻한	39.2	40.1	38.0	39.7
친근한	38.8	33.3	45.1	38.1
정적인	30.3	27.0	29.8	47.6
개성있는	27.5	29.4	26.7	22.2
평범한	27.2	21.3	32.9	30.2
단절된	21.7	25.2	16.9	25.4
따분한	21.5	22.0	19.2	28.6
소통하는	18.8	17.0	22.0	14.3
안주하는	17.3	17.0	14.9	28.6
재미있는	14.8	14.2	15.3	15.9
촌스러운	14.7	14.5	12.5	23.8
어색한	11.2	11.7	10.6	11.1
소극적인	10.3	5.7	13.7	17.5
도전적인	10.0	12.4	7.5	9.5
비전문적인	8.5	9.2	7.5	9.5
동적인	8.5	9.6	8.2	4.8
무기력한	7.3	5.0	7.5	17.5
열정적인	6.8	7.8	5.9	6.3
적극적인	5.3	5.0	5.1	7.9
트렌디한	4.8	5.3	4.7	3.2
전문적인	4.7	4.6	5.1	3.2
지지하는	3.8	2.5	5.9	1.6
무시하는	3.5	2.8	3.5	6.3
차가운	2.7	4.3	1.6	0.0

5) 대학에 대한 인식

대학 전공 교육 만족도는 거주지역을 이동한 집단의 57.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권 거주자 48.6%, 비수도권 거주자 43.1% 순이었다.

〈표 5-24〉 대학 전공 교육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매우 불만족한다	2.0	2.1	2.4	0.0
약간 불만족한다	12.2	11.0	13.3	12.7
보통이다	38.7	38.3	41.2	30.2
약간 만족한다	37.3	39.7	33.3	42.9
매우 만족한다	9.8	8.9	9.8	14.3
계	100.0	100.0	100.0	100.0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 거주지역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취업·창업에 위한 실무 경험 및 훈련 기회 확대가 가장 높았다. 이어 2순위는 취업·창업을 위한 금전적 보조 및 지원이었다. 3순위 또한 취업·창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으로 모두 같았다. 4순위에서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만 취업·창업과 무관한 심화 전공 교육 제공이라고 응답했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자는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내용 확충을 4순위로 꼽았다.

〈표 5-25〉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취업·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 및 훈련 기회 확대	37.0	38.7	36.9	30.2
취업·창업을 위한 금전적 보조 및 지원	25.2	23.4	26.7	27.0
취업·창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15.2	16.0	13.7	17.5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내용 확충	10.2	9.2	12.2	6.3
취업·창업과 무관한 심화 전공 교육 제공	7.8	7.8	6.7	12.7
취업·창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 지원	4.3	4.3	3.9	6.3
기타	0.3	0.7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대학이 지역(로컬)과 연계·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거주지역 변화에 상관없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경제 기여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43.5%로 특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순위는 지역(로컬)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모두 동일하였다. 거주지역 이동한 사람은 같은 비율로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자본 인프라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자의 3순위는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자본 인프라 확충으로 모두 비슷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5-26〉 대학이 지역(로컬)과 연계·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경제 기여 강화	37.5	33.0	43.5	33.3
지역(로컬)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	22.8	23.4	23.1	19.0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자본 인프라 확충	18.5	19.5	17.3	19.0
대학 본연의 학문 연구 강화	12.2	13.8	9.0	17.5
대학 교육 외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9.0	10.3	7.1	11.1
기타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가장 희망하는 취업 분야의 경우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와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은 통신·IT·신기술 벤처 분야를 1순위로 취업을 희망하였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이 1순위였다.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의 2순위는 기타 분야였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통신·IT·신기술 벤처 분야로 나타났다. 문화, 관광업도 전체 10.3%대로 상당히 높은 순위권 내에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표 5-27〉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

(단위: %)

업종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	24.2	20.6	30.2	15.9
통신·IT·신기술·벤처분야	22.8	24.5	19.6	28.6
기타	13.0	12.8	11.8	19.0
문화·관광업	10.3	10.6	9.8	11.1
금융·보험업	9.2	11.3	7.1	7.9
숙박·음식점	6.5	6.4	7.8	1.6
제조업	5.0	5.0	4.3	7.9
부동산·임대업	3.3	3.5	2.7	4.8
건설업	2.3	2.1	3.1	0.0
도소매업	1.8	1.4	2.0	3.2
운수업	1.5	1.8	1.6	0.0
계	100.0	100.0	100.0	100.0

취·창업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거주지역 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을 1순위로 뽑았다. 거주지역을 이동한 사람은 같은 비율로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자는 모두 2순위로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를 선택하였다. 3순위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와 거주지 이동한 사람은 최신 트렌드 및 취·창업 정보의 접근성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취·창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28〉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전체	거주지역변화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 유지	거주지역 이동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39.2	40.8	38.4	34.9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	27.8	25.2	29.0	34.9
최신 트렌드 및 취·창업 정보의 접근성	16.5	14.5	18.0	19.0
취·창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13.0	15.2	11.4	9.5
취·창업 관련 공간 확보	3.3	3.9	3.1	1.6
기타	0.2	0.4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나. 전공에 따른 특성

1) 현재 거주지역 장점

전공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었다. 본 조사의 문화 관련 분야 교육경험자 응답 비중이 낮은 수준이긴 하였지만, 다른 전공들과 비교하여 문화 분야와 가장 가까운 교육경험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현재 거주지역의 장점에 대해서는 예체능 전공자의 51.6%가 교통환경을 장점으로 응답했으며 32.3% 주거환경, 6.5% 문화환경, 6.5% 자연환경, 3.2% 경제환경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비교하여, 타 전공자의 경우 39%가 교통환경, 23% 주거환경, 18.6% 자연환경, 9.7% 경제환경, 9.3% 문화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전공자와 타 전공자 집단 모두 교통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장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예체능 전공 집단일수록 문화환경에 대한 지역 거주 장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표 5-29〉 전공에 따른 현재 거주지역 장점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교통환경 (예: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서 등)	39.7	51.6	39.0
주거환경 (예: 병원·학교 등 인프라가 좋아서, 주민들 관계가 좋아서 등)	23.5	32.3	23.0
자연환경 (예: 공기가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자연이 깨끗해서 등)	18.0	6.5	18.6
경제환경 (예: 일자리가 충분해서, 소비환경이 좋아서 등)	9.3	3.2	9.7
문화환경 (예: 문화 인프라 등 즐길 거리가 충분해서 등)	9.2	6.5	9.3
기타	.3	0.0	.4
계	100.0	100.0	100.0

2) 여가활동

전공별 여가활동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예체능 전공집단의 경우 산책, 생활 운동, 국내 1박 이상 여행, 피트니스 운동, 미용, 요리·베이킹·홈카페, 전시회 방문·공연 관람, 반려동물 돌보기, 이색·테마 카페 방문, 인테리어·집 꾸미기, 미술, 악기연주·작곡 노

래 교실, 생활공예, 1인 미디어 활동, 해외여행 등에서 타 전공보다 더 높은 여가활동 경험을 보여주었다.

특히 예체능과 관련된 미술, 악기 연구·작곡·노래 교실, 피트니스 운동은 전공의 특성답게 타 전공보다 훨씬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타 전공자는 가족 및 친지 방문, 독서, 명상·명태리기, 지식 습득, 스포츠 경기 관람, 테마파크 방문, 신문·뉴스·잡지 보기, 동호회 활동, 사교모임, 종교활동에서 예체능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여가활동 경험을 보였다.

〈표 5-30〉 전공별 6개월 내 경험한 여가활동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유튜브 감상	81.8	83.9	81.7
낮잠·늦잠	68.7	77.4	68.2
TV·OTT(넷플릭스, 티빙 등)·VOD 시청	68.2	71.0	68.0
SNS·인터넷 웹서핑	65.2	71.0	64.9
친구·지인과 개인적인 만남	62.8	67.7	62.6
친구·지인과 통화나 채팅	62.2	58.1	62.4
영화·연극 관람	60.3	64.5	60.1
게임 (온라인·모바일·보드게임 등)	58.3	58.1	58.3
쇼핑·외식 (맛집, 카페 방문 등)	58.2	58.1	58.2
독서 (만화, 웹툰, 웹소설 포함)	56.8	51.6	57.1
산책	55.7	61.3	55.4
생활 운동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등)	54.3	61.3	54.0
가족 및 친지 방문	44.0	35.5	44.5
명상·명태리기 (아무것도 안 하기)	43.2	32.3	43.8
국내 1박 이상 여행 (호텔 등 숙소 이용)	41.0	48.4	40.6
피트니스 운동 (홈트레이닝, PT, 요가 등)	39.2	45.2	38.8
지식 습득 (어학, 자격증 취득, 강연 참여 등)	38.0	32.3	38.3
사진·영상촬영 (필름·디지털 카메라 포함)	36.7	41.9	36.4
드라이브	29.3	38.7	28.8
라디오·팟캐스트 음악 감상	29.2	32.3	29.0
스포츠 경기 관람 (온·오프포함)	28.8	22.6	29.2
신문·뉴스·잡지 보기	28.2	16.1	28.8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26.5	48.4	25.3
요리·베이킹·홈카페	26.2	35.5	25.7
전시회 방문·공연 관람	25.7	41.9	24.8
호캉스 (펜션·호텔에서 휴식)	22.7	22.6	22.7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유적지 등) 방문	20.0	12.9	20.4
반려동물 돌보기	17.0	25.8	16.5
이색·테마카페 (방탈출, VR, 키즈카페 등) 체험	15.2	22.6	14.8
레저 스포츠 (구기운동, 등산, 자전거, 골프 등)	14.3	19.4	14.1
목욕·사우나·마사지샵 방문	14.0	16.1	13.9
인테리어 집꾸미기	14.0	22.6	13.5
미술 (드로잉, 조각, 디자인, 만화 등)	13.3	29.0	12.5
취미·관심사 목적의 동호회 활동	12.7	6.5	13.0
종교활동	12.0	9.7	12.1
악기연주·작곡·노래교실	11.7	25.8	10.9
사회봉사활동	11.2	9.7	11.2
계모임·동창회 등 사교 모임 참석	11.2	3.2	11.6
생활공예 (캘리그래피, 자수, 뜨개질 등)	8.7	12.9	8.4
캠핑·글램핑·차박 (차에서 숙박)	7.7	3.2	7.9
원예 (화분, 화단가꾸기, 꽃꽂이 등)	6.7	9.7	6.5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6.2	19.4	5.4
해외여행	5.3	9.7	5.1
미팅·소개팅	5.2	6.5	5.1
무용·댄스 (발레, 방송댄스 등)	4.5	6.5	4.4
무술·격투기 (태권도, 검도 등)	2.7	3.2	2.6
기타	0.0	0.0	0.0

전공에 따른 여가활동 경험 빈도는 타 전공 15.7회, 예체능 15.2회로 예체능 전공 집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매일 여가활동을 하는 빈도는 타 전공 38.1%로 예체능 32.3%보다 높았지만 2~3일에 1번 하는 빈도는 예체능 38.7%, 타 전공 29.7%로 예체능이 높았다. 1주일에 1번 하는 빈도도 예체능 25.8%, 타 전공 17.4%로 예체능이 더 높았다. 반면 1달에 1번, 2~3개월에 1번, 4~6개월에 1번, 1년에 1번의 경우 타 전공이

예체능보다 높았다.

〈표 5-31〉 전공별 여가활동 경험 빈도

(단위: %)

빈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매일	37.8	32.3	38.1
2~3일에 1번	30.2	38.7	29.7
일주일에 1번	17.8	25.8	17.4
2~3주에 1번	5.7	3.2	5.8
1달에 1번	4.2	0.0	4.4
2~3개월에 1번	2.5	0.0	2.6
4~6개월에 1번	1.5	0.0	1.6
1년에 1번	0.3	0.0	0.4
계	100.0	100.0	100.0
평균	15.7회	15.2회	15.7회

3) 삶의 만족도

전공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타 전공자의 긍정 응답이 49.6%로 예체능 전공자의 48.4%보다 약간 높았으나 부정 응답 또한 20.4%로 예체능 전공자의 16.1%보다 높았다.

〈표 5-32〉 전공별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3.0	0.0	3.2
별로 그렇지 않다	17.2	16.1	17.2
보통이다	30.3	35.5	30.1
약간 그렇다	37.3	32.3	37.6
매우 그렇다	12.2	16.1	12.0
계	100.0	100.0	100.0

전공에 따른 희망 문화향유 정도는 긍정 응답이 예체능 전공자 54.8%, 타 전공자 55%로 비슷했으며 부정 응답은 타 전공자 12.7%로 예체능 전공자 9.7%보다 높았다.

〈표 5-33〉 전공별 희망 문화향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2.7	0.0	2.8
별로 그렇지 않다	9.8	9.7	9.8
보통이다	32.5	35.5	32.3
약간 그렇다	40.3	35.5	40.6
매우 그렇다	14.7	19.4	14.4
계	100.0	100.0	100.0

얼마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느냐는 응답에 예체능 전공자는 41.9%가 즐기고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타 전공자는 40.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예체능 전공자 25.8%, 타 전공자 26.7%로 나타났다.

〈표 5-34〉 전공별 다양한 문화향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4.0	3.2	4.0
별로 그렇지 않다	22.7	22.6	22.7
보통이다	32.5	32.3	32.5
약간 그렇다	31.2	32.3	31.1
매우 그렇다	9.7	9.7	9.7
계	100.0	100.0	100.0

전공에 따른 시간적 여유감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다는 응답이 예체능 전공자 48.4%, 타 전공자 50.8%로 약간 타 전공자가 더 높았으나 부정 응답은 예체능 12.9%, 타 전공자 22%로 타 전공자의 부정 응답이 더 높았다.

〈표 5-35〉 전공별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3.8	3.2	3.9
별로 그렇지 않다	17.7	9.7	18.1
보통이다	27.8	38.7	27.2
약간 그렇다	39.3	45.2	39.0
매우 그렇다	11.3	3.2	11.8
계	100.0	100.0	100.0

전공별 문화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유는 긍정적 응답이 예체능 전공자 25.8%, 타 전공자 29.3% 약간 타 전공자가 높았지만 부정 응답은 예체능 전공자 29%, 타 전공자 32.3%로 타 전공자가 오히려 높았다.

〈표 5-36〉 전공별 경제적 여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6.0	3.2	6.2
별로 그렇지 않다	26.2	25.8	26.2
보통이다	38.7	45.2	38.3
약간 그렇다	24.8	25.8	24.8
매우 그렇다	4.3	0.0	4.6
계	100.0	100.0	100.0

전공별 문화활동 만족도에서 긍정 응답은 예체능 전공자가 58.1%, 타 전공자 55.5%로 예체능 전공자가 조금 높았다. 부정 응답은 예체능 전공자 12.9%, 타 전공자 13.7%로 아주 조금 타 전공자가 더 높았다.

〈표 5-37〉 전공별 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그렇지 않다	2.5	0.0	2.6
별로 그렇지 않다	11.2	12.9	11.1
보통이다	30.7	29.0	30.8
약간 그렇다	41.3	41.9	41.3
매우 그렇다	14.3	16.1	14.2
계	100.0	100.0	100.0

4) 비수도권 문화에 대한 관심

전공별 비수도권 방문 목적의 경우 모두 1순위로 여행, 2순위로 친구·친지 방문, 3순위 축제·행사·이벤트 참여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4순위의 경우 타 전공자의 경우 쇼핑이었지만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 3순위와 같은 비율로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 등과 같은 거주라고 응답하였다.

〈표 5-38〉 전공별 주 거주지 외 비수도권 지역 방문 목적

(단위: %)

방문목적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여행 (휴가·휴양)	49.3	51.6	49.2
친구·친지 방문	25.8	29.0	25.7
축제·행사·이벤트 참여	6.0	6.5	6.0
쇼핑	4.7	3.2	4.7
거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3.8	6.5	3.7
건강·치료	3.5	0.0	3.7
레저·스포츠 (골프, 캠핑 등)	3.5	3.2	3.5
회의·세미나 참여	2.8	0.0	3.0
기타	0.5	0.0	0.5
계	100.0	100.0	100.0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화활동 경험에 있어서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 12.9%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타 전공자는 19%로 더 높았다. 반면 잘 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은 타 전공자가 52.9%로 예체능 전공자 41.9%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5-39〉 전공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 경험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하지 않는다	12.3	9.7	12.5
별로 하지 않는다	40.0	32.3	40.4
보통이다	29.0	45.2	28.1
약간 활동량이 있는 편이다	18.0	12.9	18.3
매우 활동량이 많은 편이다	0.7	0.0	0.7
계	100.0	100.0	100.0

부정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모두 1순위로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답했으며 2순위는 예체능 전공자는 동물로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와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타 전공자는 2순위로 지역 문화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음, 3순위로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40〉 전공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6.6	33.3	26.2
지역 문화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21.1	7.4	21.9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18.4	18.5	18.4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15.8	18.5	15.6
지역 방문 동반자(친구, 연인, 가족 등)와 함께 즐기기가 어려워서	9.0	11.1	8.9
지역 문화활동의 퀄리티가 낮을 것 같아서	7.0	7.4	6.9
기타	2.0	3.7	2.0
계	100.0	100.0	100.0

비수도권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관심이 변화했는가 질문에 타 전공자의 35.9%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했지만 예체능 전공자는 32.3%에 그쳤다. 하지만 부정적인 응답이 타 전공자가 4.9%로 예체능 전공자의 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41〉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관심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	0.8	0.0	0.9
부정적으로 변화	4.0	3.2	4.0
이전과 비슷	59.5	64.5	59.2
긍정적으로 변화	33.7	32.3	33.7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2.0	0.0	2.1
계	100.0	100.0	100.0

전공별 로컬 라이프 관심도는 예체능 전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타 전공자는 41.3%로 예체능 전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부정 응답에서 타 전공자가 31.1%로 예체능 전공자의 16.1%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5-42〉 전공별 로컬 라이프 관심도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전혀 관심 없다	7.5	9.7	7.4
별로 관심 없다	22.8	6.5	23.7
보통이다	29.0	54.8	27.6
약간 관심 있다	35.0	29.0	35.3
매우 관심 많다	5.7	0.0	6.0
계	100.0	100.0	100.0

로컬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모든 전공이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예체능 전공자는 3순위로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어서, 동물로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충분해서를 꼽았지만 타 전공자는 3 순위로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어서, 4순위로 지역의 특별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라고 하여 예체능 전공자와 차이가 있었다.

〈표 5-43〉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 갖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에 비해 합리적이어서	36.9	44.4	36.6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어서	20.1	33.3	19.6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어서	17.2	11.1	17.4
지역의 특별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12.7	0.0	13.2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아서	7.0	0.0	7.2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없어서	4.5	0.0	4.7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충분해서	1.6	11.1	1.3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로컬 라이프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로는 타 전공이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커서 1순위로 꼽았지만 예체능은 지역 간 이동 부담과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협소한 기회가 공동 1순위였다. 2순위로는 예체능 전공자는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과 비슷하다는 이유였지만 타 전공자는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협소한 기회와 병원, 학교 등 부족한 지역 인프라를 공동 2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5-44〉 전공별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커서	39.0	31.8	39.5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협소해서	18.0	31.8	17.1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16.6	9.1	17.1
지역 내 문화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서	9.6	9.1	9.6
자연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6.5	0.0	6.9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과 비슷해서	5.6	13.6	5.1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지역 내 가족, 지인 등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4.2	0.0	4.5
기타	.6	4.5	.3
계	100.0	100.0	100.0

로컬 이미지의 경우 예체능 전공집단은 ‘따뜻한, 친근한’이 공동으로 1순위였으며 ‘개성 있는, 정적인, 소통하는, 안주하는’ 순이었다. 이와 비교해 타 전공은 ‘따뜻한, 친근한 정적인, 평범한, 개성 있는, 단절된’ 순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 비율은 예체능이 60.16%로 타 전공 51.37%보다 높았다.

〈표 5-45〉 수도권 제외 지역(로컬) 이미지 (복수 응답)

이미지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따뜻한	39.2	45.2	38.8
친근한	38.8	45.2	38.5
정적인	30.3	32.3	30.2
개성있는	27.5	38.7	26.9
평범한	27.2	22.6	27.4
단절된	21.7	19.4	21.8
따분한	21.5	19.4	21.6
소통하는	18.8	25.8	18.5
안주하는	17.3	25.8	16.9
재미있는	14.8	22.6	14.4
촌스러운	14.7	16.1	14.6
어색한	11.2	6.5	11.4
소극적인	10.3	9.7	10.4
도전적인	10.0	19.4	9.5
비전문적인	8.5	3.2	8.8
동적인	8.5	9.7	8.4
무기력한	7.3	3.2	7.6
열정적인	6.8	16.1	6.3
적극적인	5.3	16.1	4.7
트렌디한	4.8	16.1	4.2
전문적인	4.7	6.5	4.6
지지하는	3.8	0.0	4.0
무시하는	3.5	3.2	3.5
차가운	2.7	0.0	2.8

5) 대학과의 연계

전공에 따른 대학 전공 만족도는 긍정 응답이 예체능 전공자가 41.9%, 타 전공자 47.5%였다. 부정 응답은 예체능 전공자 19.4%, 타 전공자 13.9%로 나타났다.

〈표 5-46〉 전공별 대학 전공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매우 불만족한다	2.0	0.0	2.1
약간 불만족한다	12.2	19.4	11.8
보통이다	38.7	38.7	38.7
약간 만족한다	37.3	35.5	37.4
매우 만족한다	9.8	6.5	10.0
계	100.0	100.0	100.0

국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필요한 정책으로 예체능 전공자는 취업·창업을 위한 금전적 보조 및 지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해 타 전공자는 취업·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 및 훈련 기회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47〉 전공별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취업·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 및 훈련 기회 확대	37.0	25.8	37.6
취업·창업을 위한 금전적 보조 및 지원	25.2	29.0	25.0
취업·창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15.2	19.4	14.9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내용 확충	10.2	12.9	10.0
취업·창업과 무관한 심화 전공 교육 제공	7.8	9.7	7.7
취업·창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 지원	4.3	3.2	4.4
기타	0.3	0.0	0.4
계	100.0	100.0	100.0

대학이 지역과 연계·발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두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경제 기여 강화를 1순위로 뽑았다. 2순위로 지역(로컬)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예체능 응답자는 같은 비율로 대학 교육 외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2순위로 응답하였으나 타 전공의 경우 3순위가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자본 인프라 확충이었으며 대학 교육 외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5-48〉 전공별 대학이 지역(로컬)과 연계·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경제 기여 강화	37.5	48.4	36.9
지역(로컬)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	22.8	16.1	23.2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자본 인프라 확충	18.5	9.7	19.0
대학 본연의 학문 연구 강화	12.2	9.7	12.3
대학 교육 외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9.0	16.1	8.6
기타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공별 취·창업 희망 분야의 경우 큰 차이를 보였다. 예체능 전공자는 기타가 35.5%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업,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 통신·IT·신기술·벤처 분야 순이었다. 타 전공자는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이 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통신·IT·신기술·벤처 분야, 기타 순이었다. 특히 금융·보험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은 예체능 전공자 중 희망자가 전혀 없었다.

〈표 5-49〉 전공별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

(단위: %)

업종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	24.2	16.1	24.6
통신·IT·신기술·벤처분야	22.8	16.1	23.2
기타	13.0	35.5	11.8

업종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문화·관광업	10.3	22.6	9.7
금융·보험업	9.2	0.0	9.7
숙박·음식점	6.5	9.7	6.3
제조업	5.0	0.0	5.3
부동산·임대업	3.3	0.0	3.5
건설업	2.3	0.0	2.5
도소매업	1.8	0.0	1.9
운수업	1.5	0.0	1.6
계	100.0	100.0	100.0

전공별 취·창업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예체능 전공자는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취·창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타 전공자는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 최신 트렌드 및 취·창업 정보의 접근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50〉 전공별 향후 취·창업 가정 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전체	전공	
		예체능	타전공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39.2	25.8	39.9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	27.8	38.7	27.2
최신 트렌드 및 취·창업 정보의 접근성	16.5	9.7	16.9
취·창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13.0	19.4	12.7
취·창업 관련 공간 확보	3.3	6.5	3.2
기타	0.2	0.0	0.2
계	100.0	100.0	100.0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방향 연구

제6장

정책 방향

제1절 정책 수립 방향

1. 정책적 요구와 개발 방향성

가. 정책 방향 설정 근거

정책 방향 설정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심층면접,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결과를 1차 근거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책의 변화, 대한민국 지역 및 지역문화의 미래 변화 전망, 그리고 지역의 문화정책과 행정 상황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나. 지역 청년층 심층조사 기반 주요 정책적 요구

전국 지역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지역에서의 삶, 문화 분야 취업, 그리고 대학에 대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 SWOT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1) 지역에서의 삶, 문화 활동 관련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수도권은 분명히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며, 일상적으로도 많은 자원과 기회가 집중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취향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단 자연환경, 사회적 관계, 주거비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 여건 개선이 기회도 되지만 위협도 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미디어 기술의 변화는 지역을 성장시킬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및 생활비의 강점 • 주변(자연) 환경, 아는 사람들 • 사람과 관계의 소중함 • 마을의 존재,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 대중문화 접할 기회 적음 • 답답함. 대학 주변 외에 놀 곳이 없음 • 문화적 결핍, 동호회 등 다양성 한계 • 내부 교통 여건 문제(교통비 및 인프라) • 폐쇄적 문화, 선후배, 어르신 문화
기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 • 지역만의 특성(문화적), 지역성이 있음 •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 • 수도권과 다른 시간, 여유 및 관점 • 여행하듯 삶, 애착할 수 있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몰린 전시, 공연, 문화행사 • 수도권 이동 개선 • 수도권의 다양한 문화, 편의, 기반 집중 • 질 높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 • 육아, 교육 등 문제

2) 문화 분야 일자리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수도권에서 정착한 층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 상생 혹은 협력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경쟁 중심의 수도권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 단, 선배에 대해서는 득과 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특히 공공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대체로 만족하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6-2〉 문화 관련 일자리와 사업에 대한 인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스토리가 있음 • 지역만의 콘텐츠가 가능 • 도전 거리가 많음 • 선후배 네트워크가 가능 • 서로 북돋워 주며, 경쟁보다 협력이 가능한 문화 • 분야 및 지리적 확장성의 도전이 가능 • 융합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관련 공공 일자리가 적음 • 한편 전문 인력도 부족 • 임금 및 소득이 매우 낮음 • 선배가 기회 독점이 많다. 뻘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 공공 공모 제한적 • 다양한 교육여건 한계 • 공간의 부족, 행정의 구태의연 및 관성 • 동료에 대한 갈증- 새로운 만남의 한계 • 소비층이 적음(이동 인구 겨냥 필요) • 외지인에 대한 방어, 폐쇄성 존재
기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실험할 수 있음 • 서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 • 서울은 인력을 물건취급, 사람이 치임 • 관광과 재생과 연계 가능함 • 창업 등에서 출발 비교적 쉬움 • 온라인, 미디어 환경변화 • 다양한 문화 외의 분야와 접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배울 기회가 적음 • 열린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음 • 인력양성과 교육 등이 한계 • 수도권에 일자리 집중, 진로 정보 부족 • 정보, 자원의 공공, 관료에 집중 • 새로운 실험을 위한 기반(창제작 등) 한계

3) 지역 대학 여건 인식

대학에 대한 요구 및 여건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 지역이 연계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대학의 역할에서 지역문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이 대학 간의 협력, 지역과 대학의 협력 등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었다.

〈표 6-3〉 대학 여건에 대한 인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선후배 네트워크의 시작 • 대학 동호회 활동이 지역과 연결 • 대학 교육에서 계획적 마인드를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 • 학생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민 필요 • 지역을 바라볼 틈이 없다. 지역과 별개 • 실제 지역에서 일을 할 준비를 못함. • 예술대의 경우 창작자, 연주자 중심 • 대학 행정이 공공보다 더 막혀있는듯함 • 사업의 관리가 행정 중심임
기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창업 프로그램 등 연계 가능 • LINC 등 지역문화와 연계 참여 가능 • 공간 등의 자원 보유 • 외지인도 지역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 • 대학 간 교류의 역할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간 교류가 너무 없음 • 대학이 프로젝트를 독점함 • 현장 전문가와 협력이 부재 • 대학 자체의 충원, 경쟁력의 감소 • 대학 자체의 폐쇄성의 극복이 필요

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반 주요 정책적 요구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 청년층들이 대학과 지역,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해 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많이 도출되었으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 가운데, 주요 거주지의 이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호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다양한 이동과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에 대한 장점은 수도권은 교통(대중), 비수도권은 자연환경이라는 다소 당연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거주지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다양한 문화생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문화활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컬라이프에 대한 관심은 비수도권 거주자일 경우에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에서의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물가, 집값 등이 합리적인 것, 깨끗한 자연환경 등의 이유가 높았다. 로컬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집단은 주된 이유로 지역 간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

을 하였다. 비수도권의 매력은 시간 여유, 경제적 여유 등이 원인이지만 특히 물가, 집값의 매력, 깨끗한 환경, 지역의 특화된 문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취업, 창업 등은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정책 요구도 높은 것이 나타났다.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 창업을 위한 경험과 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이후 지역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았다.

라. 전문가 자문 결과 정책적 반영

지역에서 문화가 갖는 힘은 결국 일자리로 설명될 것이고 대학의 존재도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실적인 제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열린 대학,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되었다.

또한 재학생의 미래에 대한 대학의 책임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재학 중 다양한 협력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예술계의 경우 재학생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역에서 청년의 문화, 관광, 콘텐츠의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데 그마저도 잘 결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지역문화를 경제, 산업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 사람 들, 특히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주거, 학습, 취·창업 등에 대한 단계적 지원과 협력을 할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대학문화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을 통해 문화나 관광 분야에서 대학의 노력이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지역 변화에 따른 대학 연계 정책 개발

대학과 지역문화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미래 지역의 변화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및 청년층 대상 심층면접, 설문조사, 그 외 문헌조사와 종합 논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은 ‘소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구감소, 경제인구 및 청년층 감소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흐름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역으로 지역 정주민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정주민구를 중심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상황만으로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가지 관점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2가지 관점의 제시로서, 대학 및 ‘청년’ 혹은 경제활동 인구의 이동과 활성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생활인구는 관계인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하여 연구한 다소 구체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을 관련 연구¹⁶⁹⁾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text{생활 인구(안)} = \text{상주민구} + \text{초단기 유동인구} + \text{단기체류} + \text{중장기체류}$$

상주민구(주민 및 외국인등록)와 초단기 유동인구는 이미 통계청 주간인구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통계청 주간인구에 단기 및 중장기 체류자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초단기 유동인구는 통근·통학자, 쇼핑·의료·교육·종교 등 생활 목적의 주간 유동인구를 뜻한다. 단기 체류 인구는 경제, 생활, 여가 등 목적의 3개월 이내 체류자(주민등록 미등록자), 체류 시설 수용인원 중심의 접근 및 여행객 통계 등을 활용한 집단이다. 중장기 체류 인구는 경제, 생활, 여가 등 목적의 3개월 이상 체류자를 뜻한다.

본 개념은 관계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단순 관광 및 방문 인구보다는 지역에 깊이 연결된 인구로 볼 수 있다. 향후 상주 및 정주민구 중심의 문화정책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문화정책의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로의 실질적 반영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정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다면 문화기반시설 등은 지역별로 생활인구보다 더 느슨한 관광객을 포함한 ‘이동인구’를 대상으로

169) 전대욱 외(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정책연구 2021-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설정되기도 한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대표 지역인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최근 개장한 식물원 사유원(思惟園)¹⁷⁰⁾은 이미 방문객 예약을 경쟁하는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역문화 성장 사례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림 6-1] 경북 군위 사유원(사유원 홈페이지 제공)



생활인구는 대학 및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지역 문화정책의 대상을 변화시키기에 보다 큰 정책의 변화를 야기한다. 청년 및 대학에 국한해서 본다면, 지역문화 정책의 주체와 대상이 확대되며, 다양한 역량의 유입과 향유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학이 서로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

나. 취향과 문화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

대학과 청년의 공통 관심 대상이자 기대 역할 수행 분야로 제기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는 취향을 세분화하고, 산업화한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수희¹⁷¹⁾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로컬은 상대적 의미로서 주변, 변경(邊境)으로서의 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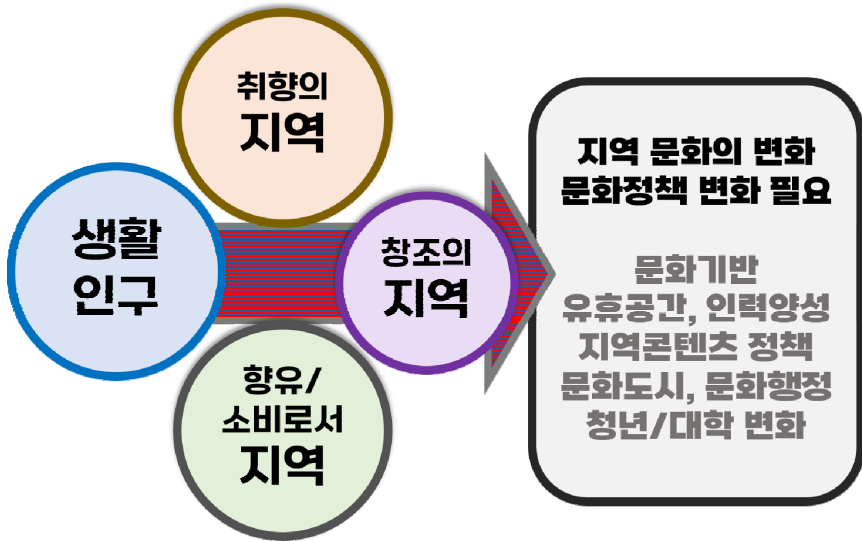
170) 서울신문 기사(2022.4.6.) “지방을 살리는 건축…CNN도 주목한 군위 수목원” 등 언급

171) 정수희(2022), 로컬과 청년의 관계맺음, 『2022 지역문화정책포럼 자료집』(89-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지역문화학회, p.91

의미했다. 그렇기에 정치경제적인 의미로 인식됐다. 최근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된 흐름 속에서 로컬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중략)...로컬크리에이터의 공간으로서 로컬은 그 분리됨이 소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때의 로컬은 획일성을 벗어난 「다름」의 공간이다. 최근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지칭되는 이들에게 로컬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들에게 로컬은 「선택」의 공간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삶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다...(중략)...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로컬은 그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선택된 장소이다. 즉, 취향의 장소로서의 로컬'로 보고 있다. 나아가 문화 향유지로서의 지역, 소비지로서의 지역, 그리고 창조공간으로서의 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지역 자체의 매력에 새로운 지역의 발전의 근거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다. 지역에 대한 관점 변화 종합

[그림 6-2] 관점의 변화로 지역 문화정책의 변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나, 취향으로서 지역의 가치, 그리고 향유나 소비, 창조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문화 정책 자체가 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우선 주요 정책 대상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로 창조인력과 대학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단,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취향과 향유지로서의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분명히 인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지속적이고 문화적, 생태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역사, 지역의 문화, 지역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을 향유, 소비 중심의 경제적 자본으로만 바라볼 경우, 지역의 발전보다는 소모와 착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난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된 사례도 많은 부분으로서, 향후에는 단순한 자원 및 소비재가 아니라 통합적인 실체로서 존중하고 동반하는 대상으로서 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환대와 우정의 지역’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와 우정의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점은 열린 네트워크로서 ‘대학’을 통해 그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

[그림 6-3] 변화하는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제2절 정책 대응 방향

1. 정책 목적 및 구분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양한 주체의 역할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성과로는 ‘지역 발전과 혁신의 중심에서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제시, 선도’,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때 청년의 역할을 적절히 제시’, ‘청년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제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합하여 ‘현재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의 기회를 갖고, 나아가 대학에 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정책 방향은 정책 추진 주체 및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경우(법령 등) 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 근거 마련, 정책 방향 및 사업 구상, 지원 방안(재정, 인력, 교육 등) 등 정책 운용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부처의 협력 등(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등) 검토¹⁷²⁾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지역 대학의 혁신 방향, 개별 대학의 역할 및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 대학 연합 및 협력을 통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방향 제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 단체는 대학이 지역문화 정책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조례 등) 마련 방향 등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역할 및 제도적 방향

정부의 역할은 우선 범부처 역할과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범부처 역할에서 법령 등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제시부분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172) 기존 사업의 지속 및 연장, 혹은 신규 사업의 개발 등 종합

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 28조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경우¹⁷³⁾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 7조에 ‘①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고도의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대학은 자주성, 자율성, 그 밖의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의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의 발전’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로 해석되어 이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제도 및 사업이 생성되었다. 이에 우리의 경우도 이제는 ‘학술과 이론, 인격도야에서 나아가 사회의 발전, 사회에의 역할에 대한 명시가 추가될 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명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시도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학평가 기준도 바꿀 수 있다. 대학평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를 대학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로 받아들일 정도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¹⁷⁴⁾’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II로 판정될 경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제한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2021년 평가는 특히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지역대학의 소멸을 방지하는 의도에서 진행되었지만 공정한 평가인지, 과정상의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대학기본역량강화진단’을 지속 수행할 경우 지역 권역별 평가보다는 지역공헌 지표를 별도로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도 역차별 의혹을 제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는

173) 법제처(2022), 세계법제정보, 일본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번역본 검색결과
 원문: 第七條 大学は、学術の中心として、高い教養と専門的能力を培うとともに、深く真理を探究して新たな知見を創造し、これらの成果を広く社会に提供することにより、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ものとする。2 大学については、自主性、自律性その他の大学における教育及び研究の特性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私立学校)

174) 2023년 이후 ‘경영위기대학’ 제도를 통해 부실 대학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정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교육 정책에서 '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¹⁷⁵⁾를 제시한 바도 있다.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이러한 변화과 정부의 방향을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 및 역할'을 지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등에서도 대학과 지역의 협력 부분을 별도 지표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

대학 평가를 넘어서 지자체 평가 등에서도 이러한 대학과 지역문화의 역할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표화하여 대학이 지역 안에서 문화정책 및 문화발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기존의 평가 지표 중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서 '지역대학과 협력 사례' 지표를 추가하여 협력 횟수나 기여 정도 등을 세부 지표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수 문화상품 개발 및 활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외에 문화 분야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청년들의 애로사항으로 많이 제시된 것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교통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지역에서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라북도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에서 교통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연계사업으로 진행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매

175)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pp. 139-141

칭이 안 되어 종료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산업단지 외에도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에서의 활동, 그리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간 이동권은 예상보다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타 지역에 대한 수요가 교통 접근성에 의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타 지역을 알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철도청의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할인 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청년이 다양한 타 지역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에서 경험하고 활동한 역량이 다시 지역 문화활동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지역대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활성화 정책에서 기존에 소외되어 온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는 공업 활동, 기술 개발 및 산업단지 운용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문화, 관광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가장 밀접한 정책으로는 지역문화인력 관련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 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 대학 연계를 유도할 수 있다. 단, 전문성과 역량이 현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재단, 진흥원 등이 유리할 수 있기에, 대학과 이러한 전문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 양성은 대학에서 추진하되 강사 및 강의 프로그램은 재단 및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협력 방안 등이 가능하다.

〈표 6-4〉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역할 구분(안)

구분	전문기관	대학
계획 수립	공동	
행정 업무	부분 예산 집행	행정/예산 총괄 운용
강의	전문강사 섭외 및 진행, 전문교육 공간마련	이론 교육 강사 섭외 및 진행, 교육 공간 제공
프로그램	멘토링, 현장 실습	이론 교육, 워크숍, 발표회

전문기관과 대학은 커리큘럼 개발 및 기획안의 작성을 협력하고, 대학이 주관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교육생 관리는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에서 추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강사 및 프로그램, 현장 실습 연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외에 지역문화정책관련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대학의 학점 이수 과목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사업, 예를 들어 문화도시 조성, 유희공간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관광 관련 학과에서도 지역문화관련 커리큘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향후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대학 커리큘럼이 추진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커리큘럼과 통합하여 포괄적인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적해 온 자원과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별도로 대학 및 청년 사업으로 청년, 대학, 지역문화 이벤트(박람회)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행사와 연계하면 현재 전국에서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주최 ‘울산 국제 임팩트 컨퍼런스’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소상공인 육성포럼’ 및 SOVAC(소셜 벨류 커넥트 행사), 크리에이터스 포럼 등 청년 로컬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행사가 규모도 다양하고, 다양한 주관기관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청년 지역문화 박람회 및 포럼을 문체부가 주최할 수 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박람회에 해당 지역의 대학연계, 청년 코너를 제시할 수도 있다.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으로 (가칭) ‘청년 로컬 문화 및 크리에이터 박람회’를 대학과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단독으로 대학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관광, 로컬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 행사 등을 기획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대학의 역할 및 연계 방향

대학에 대해서는 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취·창업을 위한 준비 등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프로젝트 등도 이전에 학점 과목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 인문 분야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래 후속 조치가 거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작가, 연주자 등 일부 집단 외에는 장래 진로에 대해 대학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지역 청년층 심층면접, 간담회 등에서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외에도 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대학이 타 기관, 타 분야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다.

일단, 대학들 사이에서 먼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열린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여럿 제안되었다. 정리하면, 소멸과 침체의 위기의식을 안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지역 대학을 포함한 공유대학 및 학점교류 나아가 학위과정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은 23개 대학이 참여한 공유대학 플랫폼을 시도한 적이 있다. 또한 신촌지역 4개 대학(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은 공유대학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도도 시도된 적이 있는 등 이러한 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 대학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학 간 상생을 지향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직원(교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경험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적 학문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역 열린 공유대학 네트워크를 시도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점, 학위 공유뿐만 아니라 전국의 퇴직, 현직 전문가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문화,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전·현직 전문가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상주하며 대학과 지자체는 우수한 체류 환경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지역 학생들은 전문적 교육을, 교·강사는 지역에서의 우수한 환경에서 소위 ‘여러 달 살기’를 체험할 수 있는 윈윈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보다 열린 교육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문화, 관광, 콘텐츠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풀이 원활히 교류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하는 지역과 시기에 체류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책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문화, 관광, 콘텐츠 활동의 여건을 넓힐 수도 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학생의

경우 지역에 한정된 전문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미래의 다양한 교육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지역의 원도심 및 지역 중심 지역에 쾌적한 스테이를 제공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전국의 전문가에게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대학 간 연계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과 깊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 단계에서 청년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은 불만 혹은 요구사항은 ‘대학이 지역을 알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특히 인문사회, 역사, 문화,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전문가,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지역문화의 전문가를 적극 교·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골목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도심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량을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이 학과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기업, 문화기획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과목의 신설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나아가 취업과 연계되거나 선후배 관계를 맺고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지역과 연계될 때, 기존의 교육부 사업 등이나 문체부의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형’ 사업을 지양하고 학점 및 학위 수업으로 대학의 중요한 역할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용역 및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PM,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역의 현안을 공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경험을 습득하는 수준이 매우 제한된다.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때로는 단순 작업만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문화 관련 연계 사업은 교육부의 LINC+, 3.0 사업과 같이 학점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충분한 기간과 안정된 수업을 통해, 그리고 학점 유인 요소를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수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부, 그리고 대학의 협력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하는 공간들이 대학과 지역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어 대학과 지역문화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들이 자신이 보유한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 간담회 등에서 누차 언급되었다. 대학 내부 공간을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

도 높았다. 창작, 개발, 워크숍, 포럼, 회의 등을 위한 청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열린 대학 네트워크' 등을 실시할 때 대학과 연결된 수준 높은 스테이(숙소)의 조성 등도 향후 열린 대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선 대학이 지역문화 정책, 사업 및 발전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의 허브 역할을 하여 문화재단 및 유사 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유관 단체, 사업체 연합 등의 '지역문화생태계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현재 제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 2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여 광역단체의 경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내부에 대학관계 대표자를 포함하거나 제 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지역문화생태계 플랫폼의 명시도 가능하다. 또한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 합동, 혁신 평가 등에서 문화 분야 대학 협력 활동이 반영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 각 항목에 대한 꼼꼼한 결과 작성 및 제출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유희공간이 네트워크 및 열린 대학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업, 창직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절 중장기 전망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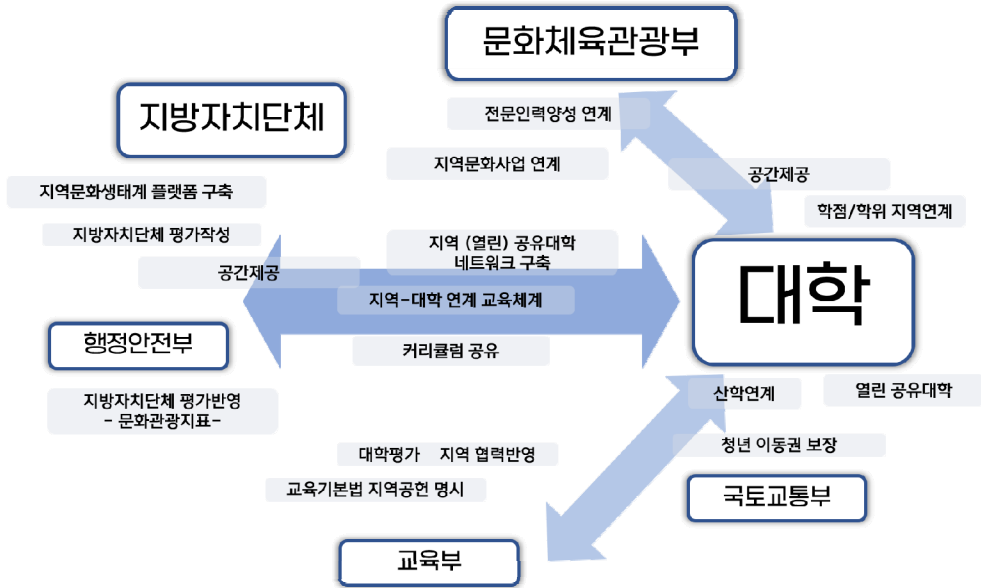
1.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문화 분야에서 대학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도하는 부분은 '민간'이 될 수 있다. 영리, 비영리 등을 포함한 민간 단체 및 개인이 향후 지역문화의 핵심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지역에서 민간 차원에서 발휘되는 창의력이 얼마나 도시 및 지역에 근거하여 발휘되는가를 볼 때 알 수 있다. 원도심 활성화, 지역문화관광 확대, 지역 골목상권 부활 등의 중심에서는 교육기관이나 공공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는 「로컬크리에이터」로 많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많은 자문 과정에서 이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심의 기획과 사업 추진 시, '민간'이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 강화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문화 차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개인이나 단체(사업체 등)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출발 거점이 바로 지역의 '대학'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대학에서 지역문화와 관광을 발전시키는 싹을 틔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검토하면서 바로 이러한 대학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역할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역할 수행이 정책적으로, 협력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제안한다.

[그림 6-4] 대학 연계 주체 간 역할 제시



2. 결론

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에 대한 접근 필요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지역문화와 대학을 통해 풀어내려는 시도는 지역과 대학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머무는 인재로서의 청년의 가능성을 통해 대학이 지역과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비전문가 및 비전문가한테 취미와 취향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문화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끌어와 문화가 지역, 대학, 청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문화예술기본법은 이러한 문화예술과 국제교류, 복지, 산업, 지역 문제의 해결, 관광, 교육 등의 여러 문제들이 문화의 발전과 결합되어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다. 2014년 국토연구원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문화 콘텐츠의 제공,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기반

한 창의적 지역문화 창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도시의 재생,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문화예술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의 접근 역시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문화 중심의 지역과 대학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지속 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거시적 대안을 향하여

지역과 대학, 청년의 문제는 국내 인구소멸 위기와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 지역은 지역끼리, 대학은 대학끼리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이다 세이라는 저서 『지역창조의 국제전략』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지역 인구에 대한 다문화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산업이나 인적 자원, 지역의 문화자원 자체를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틀렛과 고샬(1989)은 지식기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지역 내 자원을 외부로 연결시키는 접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레이데스도르프와 디킨(2011)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의 새로운 진화모델로 정부와 산업, 대학으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며 대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세이라는 대학도시 멜버른에서 대학이 베트남이나 칠레 등 해외 국가 연구 시설 및 단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역 내 대학에서 추진하며 연구에 기반한 국제적 지역 자원의 연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와, 오이타 벳푸에서 아시아태평양 대학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학생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정착하며 지역 연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았다.

이처럼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발전해나가는 양상은 경쟁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지역과 대학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문화 역시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부 계획 및 자료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 교육부(20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역혁신대학 지원과/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2022),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2021),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21.12.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교육부 학술진흥과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1.8, 지역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2022), 『‘더큰 내일 센터 - 청년의 가능성을 제주의 내일로 연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행정안전부(202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22.1, 행정안전부 주민 참여협업과
-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66호
- 행정자치부 (2015),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지역경제과

보고서 및 단행본

- 경신원(2019),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 파람북
- 구형수 외 (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20-01
- 기노시타 히토시(2022), 「지방경영시대」 (변경화, 이권윤정, 박헌춘 공역), 미세움
- 김태준 외(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방안」, 연구보고 RR 2020-18,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현 외(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 류석진 외(2020), 「로컬의 진화」, 스텝체어스
- 류석진 외(2021), 「로컬에서 청년하다」, 더가능연구소
- 모종린(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 박종용(201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관광 분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진경 외(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영인 외(2021),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방안」, 연구보고 RR 2021-12,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청년예술인회의(2021), 「대학만 가면 된다매-포스트 예술대학공론장 포럼에서 못 다한 이야기」, 서울문화재단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2016),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 송창용(2021),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인구 감소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안우진 외(2021),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아마자키 미츠리(2017),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손예리 역), 어젠다
- 어반플레이 편집부(2020), 「도시 생활혁명- 도시를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어반플레이(주)
- 우치다 타츠루(2022), 「로컬로 튼!」 (박우현 역), 이숲
- 유흥준 외(2016), 「직업사회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윤찬영·심병철(2021),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기준 외(2014),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연구」, 현안보고 OR 2014-4,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민 외(2021), 「문화기반 중소도시 발전전략: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1-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원빈 외(2019), 「창의인재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19-935, 산업연구원
- 장훈 외(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대욱 외(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정책연구 2021-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영수 외(2022),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라의논
- 전재식 외(2015), 「지역-대학 상생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보람(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용교·이광동·김보민 (2017). 「저밀도 주거지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 연구」. 대구광역시·영남대학교
- 정정숙(2009),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춘천시 청년청(2021), 「춘천 청년 100개의 대화 3번째 이야기」, 춘천문화재단

논문 및 기타자료

- 김미영 외(2018), 신 라이프스타일시대, 부산 도시정책의 전환, 「Bdi 정책포커스」, 제 348호, 부산발전연구원
- 김석호 외(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제24권, 한국문화사회학회
- 김이수(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간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2016 봄)
- 김종성(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현호 (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 131호(2021.11)
- 모종린(2020), 로컬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도시와 경제, 「환경논총」, 제66권,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수업노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박보식 외(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 박종관(2011),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11. No. 6
- 배우진 외(2019),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제 451호, 국토연구원 해외리포트
- 서동용 의원실(2021),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 안영진(2005),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73-92.
- 유숙영 외 (2011), 기독교대학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기독교교육정보」, 제31집, 2011
- 이원빈(2020), 창의적 소상공인의 지역별 현황과 집적요인 분석, 「KIET 산업경제」, 202012, 산업연구원
- 이혁(2016), 지방 예술대학 무용학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영남 출학회」, 4권 1호
- 임학순(202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미래, 「예술경영」, vol. 477
- 장후은 외(2015),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5호
- 정기호 외(2011),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경제교육연구」, 제 18권 2호

- 정용교(2018), LINC+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대학 캡스톤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권 2호
- 정수희(2022), 로컬과 청년의 관계맺음, 「2022 지역문화정책포럼 자료집」(89-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지역문화학회
- 주효진 외(2014),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영국·미국·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 진성희(2018), 공학설계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합한 서비스러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조사, 「공학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 최지은 외(2018), 공학중심의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의 교육적 효과, 「공학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0),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방안, 「한림원의 목소리」, 제87호
- 한준·김수한 (2017),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국사회학」, 제 51집 제1호, 한국사회학

국외 논문 및 자료

- Boucher, G., & Conway, C., & Van Der Meer, E(2003). Tiers of engagement by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9), 887-897.
- Chatterton, Paul(2000), The Cultural role of Universities in the Community: *Revisiting the University-Community Debat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ume 32, 2000,01
- Houpert, Cécile(2019). What happens when cities and universities work together to shape local cultural policies?, *Eurocities*, 2019.10
- Vidal, Avis et al.(2002), *Lessons from the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Program-Final Report*,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 Weerts, David J. & Lorilee R. Sandmann(2008), Building a Two-Way Stre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mmunity Engagement at Research Universiti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Fall 2008, Volume 32, No.1,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 Weerts, David J. & Lorilee R. Sandmann(2010), Community Engagement and Boundary-Spanning Roles at Resear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 NOVEMBER / DECEMBER 2010, Vol. 81, No. 6
- 岩田聖子. 佐藤敦信(2021) *地域創造の国際戦略 地方と海外がつながるレジリエントな社会の構築*, 學藝出版社

ABSTRAC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ulture

Kyuwon Kim, Soyeon Kim, Ji-Hye Byun

Since the late 2010s, regional extinc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Korea must respond to along with population decline and climate crisis. In 2020, for the first time, the number of births per year is less than the number of deaths, entering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n particular, in 2019, the proportion of the aged population in Korea reached 15.5%. Among local communities, like Sejong, Jeju, and Seogwipo, there were a total of 105 aged communities prove to be aging communities which is emerging as a national crisis. In response to this crisis of local extinction, a more active response was proposed and promoted to respond to aging problem at first as to raise the need for aging-related infrastructure, to develop welfare and care-related policies, to expand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to enact related laws. However,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 is the disappearance of the youth and the increase in the inflow of the metropolitan area. Prior to this, the limitations of the aging policy were limited in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the youth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region.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outflow of young people is more serious than the inflow of young people, and among them, the disappearance of the university. Local universities have been the most representative knowledge community of the local and the most important base of cultural vitality of local. As a representative example, local universities that enable the vitality of the region and are the base

of manpower who play fundamental role at the local, and that provide the necessary knowledge base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local.

Now, local universities are in a state of extinction along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think about direction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young people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along with local universities together.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as a base for knowledge and talent is important in local culture and arts with talented youth and professionals. In the local area, the university can serve as a stronghold for creativity, young people from the local, a hub for collaboration with external capabilities, and a laboratory for valuable experiments that experience failure. This role becomes a hub where culture can be created, created, produced, planned, distributed, enjoyed, and consumed in the region, and through this, new hopes for a vibrant region can be measured through culture. This can be said to depend on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oles of young people based on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lay the bases for youth from local and outside of loc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local culture and play a central role. In addition, this study looks for policies that reflect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the needs of young people to develop local culture and revitalize the reg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is reviewed at the center of these policies, and a direction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s can cooperate to innovate the region is proposed. Through this, the direction of contributing to the vitality of the revitalized local culture leading to the vitality of the region in a crisis area was suggested.

For the research, We had a meeting with about 50 local young people at each regions of Korea. Also we We conducted a survey of 600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university students to obtain opinions. And We interviewed 7 academic experts and 9 field experts.

In conclusion, we found that local universities should aim for a new future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addition, it was concluded that a infra-structure and system for cooperation is need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rough culture and tourism.

Also, through research, we suggest that for this future change, national government including Ministry of Culture and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present a system through which universities and regions can cooperate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Keywords

Local Culture, University, Local Cultural Policy, Youth Policy, Local Economy, Local Creator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방향 연구

부록

설문조사지

전국 대학생 <지역과 문화>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학내일20대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중인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지역과 문화, 교육, 일자리 등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암호화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최대 15분 이내 응답을 완료하실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관련 문의: 대학내일20대연구소(ss.emilie@univ.me)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Screening Questions

SQ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중·고등학생
- 2) 2~3년제 대학생·졸업생(휴학, 유예 포함)
- 3) 4년제 대학생·졸업생(휴학, 유예 포함)
- 4) 대학원생
- 5) 직장인·자영업
- 6) 프리랜서
- 7) 기타

SQ2. 귀하는 현재(2022년 8월 기준) 몇 학년입니까? 휴학 중일 경우, 휴학 직전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단수]

- 1) 대학교 1학년
- 2) 대학교 2학년
- 3) 대학교 3학년
- 4) 대학교 4학년 (졸업유예포함)
- 5) 학사 기졸업자

SQ3. 귀하의 주 전공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인문과학 (인문학, 어문학 등)
- 2) 사회과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미디어, 법학 등)
- 3)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무역, 관광학 등)
- 4) 교육 (사범대 교육계열 등)
- 5) 자연과학 (이학, 생명과학 등)
- 6) 공학 (건축, 기계, 전자·전기, 컴퓨터·전산 등)
- 7) 예체능 (음악계열, 미술계열, 체육·스포츠 등)
- 8) 기타 (구체적으로 입력)

SQ4. 현재 귀하가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졸업한 대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단수]

- | | |
|------------|-------------|
| 1) 서울특별시 | 10) 강원도 |
| 2) 부산광역시 | 11) 충청북도 |
| 3) 대구광역시 | 12) 충청남도 |
| 4) 인천광역시 | 13) 전라북도 |
| 5) 광주광역시 | 14) 전라남도 |
| 6) 대전광역시 | 15) 경상북도 |
| 7) 울산광역시 | 16) 경상남도 |
| 8) 세종특별자치시 | 17) 제주특별자치도 |
| 9) 경기도 | 18) 기타 |

SQ5.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출생연도를 선택해주세요.

_____년생

SQ6.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단수]

- 1) 남성
- 2) 여성

Part A.

거주 지역과 문화활동 경험 실태

지금부터는 귀하의 거주 지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A1. 다음 중 귀하가 **대학 입학 이전에 주로 거주한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단수]

A2. 다음 중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단수]

보기	A1. 입학전 주 거주지	A2. 현재 거주지
1) 서울특별시	1	1
2) 부산광역시	2	2
3) 대구광역시	3	3
4) 인천광역시	4	4
5) 광주광역시	5	5
6) 대전광역시	6	6
7) 울산광역시	7	7
8) 세종특별자치시	8	8
9) 경기도	9	9
10) 강원도	10	10
11) 충청북도	11	11
12) 충청남도	12	12
13) 전라북도	13	13
14) 전라남도	14	14
15) 경상북도	15	15
16) 경상남도	16	16
17) 제주특별자치도	17	17

A3.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경제환경 (예: 일자리가 충분해서, 소비환경이 좋아서 등)
- 2) 주거환경 (예: 병원·학교 등 인프라가 좋아서, 주민들 관계가 좋아서 등)
- 3) 교통환경 (예: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서 등)
- 4) 자연환경 (예: 공기가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자연이 깨끗해서 등)
- 5) 문화환경 (예: 문화 인프라 등 즐길 거리가 충분해서 등)
- 6) 기타 (구체적으로 입력)

다음은 귀하의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A4. 최근 6개월 이내 경험하신 여가활동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A5. 최근 6개월 이내 경험 중,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1개 선택해주세요. [단수]

카테고리	Rotation	A4.(빈도) 6개월 내 경험 [복수]	A5.(선호) 경험 중 선호활동 [단수]
문화 예술 활동	전시회 방문·공연 관람	1	1
	영화·연극 관람	2	2
	미술 (드로잉, 조각, 디자인, 만화 등)	3	3
	악기연주·작곡·노래교실	4	4
	사진·영상촬영 (필름·디지털 카메라 포함)	5	5
	무용·댄스 (발레, 방송댄스 등)	6	6
스포츠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온·오프포함)	7	7
	생활 운동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등)	8	8
	피트니스 운동 (홈트레이닝, PT, 요가 등)	9	9
	레저 스포츠 (구기운동, 등산, 자전거, 골프 등)	10	10
	무술·격투기 (태권도, 검도 등)	11	11
관광 활동	드라이브	12	12
	테마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유적지 등) 방문	13	13
	캠핑·글램핑·차박 (차에서 숙박)	14	14
	국내 1박 이상 여행 (호텔 등 숙소 이용)	15	15
	해외여행	16	16
취미 오락 활동	생활공예 (캘리그래피, 자수, 뜨개질 등)	17	17
	요리·베이킹·홈카페	18	18
	쇼핑·외식 (맛집, 카페 방문 등)	19	19
	이색 테마카페 (방탈출, VR, 키즈카페 등) 체험	20	20
	게임 (온라인·모바일·보드게임 등)	21	21
	인테리어·집꾸미기	22	22
	독서 (만화, 웹툰, 웹소설 포함)	23	23
	SNS·인터넷 웹서핑	24	24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25	25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26	26
	원예 (화분, 화단가꾸기, 꽃꽂이 등)	27	27
지식 습득 (어학, 자격증 취득, 강연 참여 등)	28	28	
휴식 활동	산책	29	29

카테고리	Rotation	A4.(빈도) 6개월 내 경험 [복수]	A5.(선호) 경험 중 선호활동 [단수]
	목욕·사우나·마사지샵 방문	30	30
	낮잠·늦잠	31	31
	신문·뉴스·잡지 보기	32	32
	TV·OTT(넷플릭스, 티빙 등)·VOD 시청	33	33
	유튜브 감상	34	34
	라디오·팟캐스트·음악 감상	35	35
	호캉스 (펜션·호텔에서 휴식)	36	36
	명상·명태리기 (아무것도 안 하기)	37	37
관계 형성 활동	친구 지인과 개인적인 만남	38	38
	친구 지인과 통화나 채팅	39	39
	미팅·소개팅	40	40
	계모임·동창회 등 사교 모임 참석	41	41
	사회봉사활동	42	42
	종교활동	43	43
	가족 및 친지 방문	44	44
	취미·관심사 목적의 동호회 활동	45	45
	반려동물 돌보기	46	46
기타 (구체적으로 입력)	999	999	

A6. 귀하는 평소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편입니까? [단수]

- 1) 매일
- 2) 2~3일에 1번
- 3) 일주일에 1번
- 4) 2~3주에 1번
- 5) 1달에 1번
- 6) 2~3개월에 1번
- 7) 4~6개월에 1번
- 8) 1년에 1번

지금부터는 귀하가 평소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등 전반적인 문화활동과 관련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A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응답해주세요. [단수]

<i>보기 Rotation (괄호표기 제외)</i>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 점)	약간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 점)
[삶의 만족도] 나는 전반적으로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희망 문화향유] 나는 내가 원하는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다.	1	2	3	4	5
[다양한 문화향유] 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다.	1	2	3	4	5
[시간적여유] 나는 문화활동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있다.	1	2	3	4	5
[경제적여유] 나는 문화활동을 즐길 금전적 여유가 있다.	1	2	3	4	5
[문화활동 만족도] 나는 내가 즐기고 있는 문화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Part B. 지역 경험 및 인식

다음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또는 다니고 계신 대학 지역) 외에,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방문하는 주요 목적을 순서대로 2개 선택해주세요. [2순위 필수]

<i>보기</i>	1순위	2순위
1) 여행 (휴가·휴양)	1	1
2) 축제·행사·이벤트 참여	2	2
3) 레저·스포츠 (골프, 캠핑 등)	3	3
4) 회의·세미나 참여	4	4
5) 친구·친지 방문	5	5
6) 쇼핑	6	6
7) 건강·치료	7	7
8) 거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8	8
9)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9	9

B2.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다니고 계신 대학 지역 이외에,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단수]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별로 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활동량이 있는 편이다 (4점)	매우 활동량이 많은 편이다 (5점)
1	2	3	4	5
→ B2-1로 이동			→ B3로 이동	

B2-1. 귀하가 비수도권 지역에 방문 시 문화활동에 활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지역 문화활동의 퀄리티가 낮을 것 같아서
- 2) 지역 문화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 3)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 4) 지역 문화활동을 경험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 5) 지역 방문 동반자(친구, 연인, 가족 등)와 함께 즐기기 어려워서
- 6)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 7)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B3. 귀하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경험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 (1점)	부정적으로 변화 (2점)	이전과 비슷 (3점)	긍정적으로 변화 (4점)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5점)
1	2	3	4	5

아래는 로컬 라이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컬 라이프란 수도권 외 지역을 월 2회 이상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 경제활동을 하는 등 비 수도권에서의 삶을 준비 또는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지역 한 달 살기와 같은 소도시 여행 부터, 이주, 취업·창업, 귀농·귀촌 등 장기 거주 목적까지 포괄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B4. 귀하는 평소 로컬 라이프(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단수]

전혀 관심 없다 (1점)	별로 관심 없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관심 있다 (4점)	매우 관심 많다 (5점)
1	2	3	4	5
→ B4-2로 이동			→ B4-1로 이동	

B4-1. 귀하가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주세요. [2순위 필수]

- 1) [경제]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에 비해 합리적이어서
- 2) [경제]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아서
- 3) [주거]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충분해서
- 4) [주거] 지역에 가족, 지인 등이 있어서
- 5) [교통]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없어서

- 6) [자연]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어서
- 7) [문화] 지역의 특별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 8) 기타 (구체적으로 입력)

B4-2. 귀하가 비수도권에서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주세요. [2순위 필수]

- 1) [경제] 집값, 물가 등이 수도권과 비슷해서
- 2) [경제]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협소해서
- 3) [주거] 병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 4) [주거] 지역 내 가족, 지인 등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 5) [교통] 지역 간 이동 부담이 커서
- 6) [자연] 자연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 7) [문화] 지역 내 문화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서
- 8) 기타 (구체적으로 입력)

B5. 다음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로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1) 전문적인	13) 비전문적인
2) 도전적인	14) 안주하는
3) 열정적인	15) 무기력한
4) 적극적인	16) 소극적인
5) 동적인	17) 정적인
6) 지지하는	18) 무시하는
7) 따뜻한	19) 차가운
8) 소통하는	20) 단절된
9) 친근한	21) 어색한
10) 개성있는	22) 평범한
11) 재미있는	23) 따분한
12) 트렌디한	24) 촌스러운

다음은 교육과 경제활동 관련 인식을 여쭙보겠습니다.

C1. 귀하가 경험하고 계신(또는 경험하신) 대학 전공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
1	2	3	4	5

[Programming : 보기 Rotation, SQ3=7) 예체능 전공 응답자만 제시]

C2. 귀하는 국내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취업·창업과 무관한 심화 전공 교육 제공
- 2)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내용 확충
- 3) 취업·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 및 훈련 기회 확대
- 4) 취업·창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5) 취업·창업을 위한 금전적 보조 및 지원
- 6) 취업·창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 지원
- 7)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C3. 귀하는 대학이 지역(로컬)과 더욱 연계·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2개 선택해주세요. [2순위 필수]

- 1) 지역(로컬)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학문적 노력
- 2) 지역(로컬)과 결합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 확충
- 3) 지역(로컬)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와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 4) 지역(로컬) 주요 공공기관과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 5) 지역(로컬) 민간 기업·사업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
- 6)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C4.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단기 계약직, 인턴십을 포함하여 월 정기 수입이 있는 경우)을 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C5. 귀하께서 향후 취·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희망하는 분야를 1개 선택해주세요. [단수]

- 1) 제조업
- 2) 건설업
- 3) 도소매업

- 4) 운수업
- 5) 숙박·음식점
- 6) 금융·보험업
- 7) 보건·사회·사업서비스업
- 8) 문화·관광업
- 9) 부동산·임대업
- 10) 통신·IT·신기술 벤처분야
- 11)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C6. 귀하께서 향후 취·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단수]

- 1) [정보] 최신 트렌드 및 취·창업 정보의 접근성
- 2) [인적 네트워크] 취·창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 3) [교육]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 4) [자금] 취·창업 관련 지원금 확보
- 5) [공간] 취·창업 관련 공간 확보
- 6)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Demographics

아래 인구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최종 설문이 마무리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분석용도로만 사용됩니다.

DQ1.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 1) 혼자 살고 있음
- 2) 친구·지인·연인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 3) 배우자
- 4) 본인의 자녀
- 5) 부모님
- 6) 조부모님
- 7) 형제자매
- 8) 반려동물
- 9) 기타(구체적으로 입력)

DQ2. 귀하의 월 평균 소득(용돈 포함)과 지출 규모(주거비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수입	월평균 지출
1) 50 만 원 미만	1	1
2) 50 만 원 이상 ~ 100 만 원 미만	2	2
3) 100 만 원 이상 ~ 150 만 원 미만	3	3
4) 150 만 원 이상 ~ 200 만 원 미만	4	4
5) 200 만 원 이상 ~ 300 만 원 미만	5	5
6) 300 만 원 이상	6	6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필내역

연구책임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장, 제2장, 제3장(공동), 제5장(공동), 제6장 결론(공동), 연구총괄
-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제2장(공동), 제3장(공동), 제5장 자문 및 설문조사 분석 총괄, 제6장 결론(공동)

연구진

-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제3장(공동), 제4장, 제5장 현장조사, 제6장 결론(공동)

연구 자문 - 전문가 자문(가나다 순)

- 경신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고윤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케이컬처테크콘소시엄 사무총장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자문 - 지역문화 및 관련산업 현장 자문(가나다 순)

강석호 인디음악인, 고선영 제주상회 대표, 김병수 전 제주문화도시센터장, 김소은 제주 청년 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박명환 이스트사이드 바이브클럽 대표, 박은진 아웃도어아일랜드 대표, 이상혁 소호259 대표, 전태병 만나씨이에이 대표, 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연구 참여

- 이시림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 지원 - 섭외 및 참여 지원(가나다 순)

김소진 시각예술단체 1995Hz, 이창원 인디 053 대표, 전규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조권능 주식회사 지방 CEO
부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춘천문화재단 및 문화도시센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및 문화도시센터

연구 설문조사

대학내일20대연구소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21일

발행일 2022년 12월 2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58-1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40>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규원·김소연·변지혜(2022),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40>

